2022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LOCAL
ADMINISTRATION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성과보고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Local Administration

발간사

지방자치단체의 지속적인 발전과 성장을 위한 노력은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대한민국 국가 발전을 이끌어가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지난 38년간 지방행정과 지방재정, 지역발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끊임없는 연구와 정책 대안 제시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노력해왔습니다. 특히, 2022년은 윤석열 정부의 출범과 함께 새로운 민선8기의 시작으로 매우 뜻깊은 해입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이번 「2022년도 연구성과보고서」에 '디지털 지방행정혁신', '특별지방자치단체 지방교부세 개편방안', '포스트코로나 시대 지방자치단체의 회복력 강화' 등 다양한 논의를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성장을 위한 정책적 대안과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번 보고서의 발간은 연구원이 수행한 51건의 연구 결과(기본연구과제 11건, 정책연구과제 20건, 정책이슈리포트 12건, 자체연구 및 지침연구 7건)와 99회의 정기간행물 등(지방자치 정책브리프 24회, 지방의정브리프12회, 인포그래픽스 12회, 카드뉴스 9회, 지방자치 이슈와 포럼 6회, 지방행정연구 4회, 세계지방자치동향 12회, 유튜브 20회)을 요약·종합한 것으로, 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보와 데이터를 담고 있습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이 보고서가 정책입안과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지방자치단체의 지속적인 발전과 성장을 위해 부단히 노력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보고서의 발간에 앞서 소중한 조언과 협조를 해주신 학계의 자문위원님,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국정과제위원회 등 관계기관의 관계자님, 그리고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연구진과 직원 모든 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 12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 **김일재**

CONTENTS

I 연구원 소개

1. 연구원 개요 016
2. 조직 현황 019

II 연구보고서

1. 기본연구과제

자치분권제도

1) 주민자치회 모델 재설계 방안 연구 023
(전대욱, 최인수, 최지민, 유수동)

2) 지방의회 주민참여 모델 개발 및 활성화 방안 026
(김지수, 김건위, 고경훈, 주희진)

지방행정혁신

3) 지방자치단체 플랫폼 정부(platform government)의 효과적인 운영방안 연구 030
(이경은, 박재희, 유란희)

4) 지방공무원 역량지표 개발 및 역량 강화 방안 연구: 과장급 인력을 중심으로 036
(이재용, 박현욱, 이병기)

지방재정경제

5) 지방자치와 교육자치 재정사업의 연계·협력 강화방안 039
(김성주, 김진, 황해동)

6) 지방교부세를 통한 특별지방자치단체 재정지원에 관한 연구 042
(이서희, 전성만, 김윤승)

지역균형발전

7) 탄소중립을 향한 지방자치단체 정책추진 강화방안 045
(박진경, 김현호, 이원도)

8) 지역통계를 활용한 지역경제 동향분석 048
: 시공간 큐브 및 동태적 요인 모형을 활용하여
(여효성, 김도형, 윤소연)

9) 포스트 코로나 시대, 지방자치단체의 회복력 강화방안 연구 052
(이제연, 이소영)

지방투자사업관리

10) 도서지역 연도·연륙교 건립의 사회경제적인 편익 연구 055
(김지훈, 김상기, 김성규)

11)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한 지역별 B/C 기준 차등화 방안 연구 060
(송지영, 이민기)

2. 행정안전부 정책연구과제

자치분권제도

1) 시군구 특례제도 지정기준 구체화 연구 065
(유수동, 전대욱)

2) 지방자치단체 협력 활성화를 위한 합동평가지표 개발 069
(주희진, 박현욱)

3) 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인감 및 서명확인제도 개선 연구 073
(김건위, 고경훈)

지방행정혁신

4)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주민'의 범위 재정립 075
(김지수, 최지민)

5) 특별자치시·도 운영방향 연구 079
(최지민, 박해육, 김지수)

지방재정경제

6) 지역 간 균형발전 지원을 위한 재정체계 개선방안 084
(김성주, 이서희)

7) 지방자치-교육자치 연계 강화방안 088
(김진, 김성주)

8) 주소정보 고도화를 위한 재정 협력 체계 구축 방안 연구 092
(이서희, 유보람)

지역균형발전

9) 지역경제 정책 수립을 위한 도시통계 개선 및 활용방안 095
(여효성, 윤소연, 이원도)

10) 접경지역 특화발전방안 연구 098
(이소영, 김민영)

11) 자전거 관련 산업 실태조사 연구: 제도 및 시책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102
(김현호, 김도형, 김민영)

3. 지방자치단체 정책연구과제

서울특별시

1) 서울시 인구영향평가 도입 및 제도화방안 107
(이원도, 여효성)

부울경(부산·울산·경상남도)

2) 부울경 초광역 협력사업이 부울경에 미치는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109
(전대욱, 박승규, 최인수, 최지민, 여효성, 이경은, 추병주)

대구광역시

3) 대구 인구영향평가제도 도입 방안 113
(이소영, 박진경)

인천광역시

4) 인천광역시 외국인 근로자 실태조사 및 지원방안 117
(박현욱, 주희진)

광주광역시

5) 광주광역시 시민참여예산제도 개선 방안 121
(전성만, 김윤승)

경기도

6) 평택항만의 효율적 재난대응을 위한 소방력 강화방안 125
(윤소연, 이제연)

강원도

7) 강원도 폐광지역 지자체 간 협력사무 발굴 및 추진방안 129
(박재희, 이재용)

경상북도

8) 데이터 기반 정책평가 체계 연구 134
(이병기, 박현욱)

제주특별자치도

9) 빅데이터를 활용한 문화예술사업의 경제적 효과 분석 137
(이원도, 김민영)

4. 정책이슈리포트

부산광역시

1) 부산형 공정관광 활성화 방안 141
(이소영, 박진경)

대구광역시

2) 직업계고 졸업생의 기업정착률 제고방안 144
(고경훈, 김건위)

인천광역시

3) '인천형' 주민참여예산제도 정립 방안 146
(김윤승, 전성만)

대전광역시

4) 효과적인 어린이공원 이용을 위한 권역형 공원화 사업 방안 150
(이제연, 김도형)

울산광역시

5) 울산광역시 고향사랑기부금 답례품 선정에 대한 연구 153
(전성만, 신두섭)

세종특별자치시

6) 세종 반려동물 미래 신성장 산업 육성방안 마련 156
(전대욱, 김해솔)

강원도

7) 강원도 주민제안 활성화 연구 159
(전대욱, 최인수)

충청북도

8) 소방활동의 사회·경제적 효과 분석 연구 162
(윤소연, 여효성)

충청남도

9) 성과중심의 지역균형발전사업 평가지표 개발 및 분석체계 연구 166
(박진경, 이소영)

전라북도

10) 전라북도 지방자치(도·시군)-교육자치(교육청) 협력사업진단 및 발전방안 170
(김성주, 김진)

경상북도

11) 신산업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 설립 검토 174
(이병기, 고경훈)

제주특별자치도

12) 제주지역 양돈산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분석 176
(전대욱, 최인수)

5. 자체연구 & 지침연구과제

자치분권제도

1) 지방행정 및 자치분권 제도 관련 새로운 통계지표체계 제안 181
(김필, 전대욱, 이경은, 주희진, 김해솔)

지방행정혁신

2) 정책사례 DB구축 및 활용방안 연구 186
(김지수, 이경은, 강희송)

지방재정경제

3) 규제특례지역('기회발전특구' ODZ) 지정 및 운영 방안 188
(이서희, 김성주, 윤소연, 이원도, 윤성만, 김정숙)

지역균형발전

4)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 기초연구 192
(김현호, 최지민, 전성만)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

5) 지방재정투자사업 사후관리 개선 방안 연구: 문화체육시설을 중심으로 195
(함윤주, 김상기, 김도영, 최성원, 주재문)

6) 지방재정투자사업의 예비비 추정연구 198
(송지영, 박소연, 심환희)

7) 지방재정투자사업 재정영향평가 체계 개선 방안 201
(이삼주, 조기현, 서정섭)

Ⅲ 정기간행물

1. 지방자치정책브리프 209
2. 지방의정브리프 210
3. 인포그래픽스 211
4. 카드뉴스 212
5. 지방자치 이슈와 포럼 213
6. 지방행정연구 219
7. 세계지방자치동향 222
8. 연구성과 콘텐츠(유튜브) 226

Ⅳ 부록

2022년도 과제 수행목록

1. 기본연구과제 230
2. 행정안전부 정책연구과제 231
3. 지방자치단체 정책연구과제 232
4. 정책이슈리포트 233
5. 자체연구과제 234
6. 지침연구과제 234
7. 수시연구과제 234
8. 지방자치단체 컨설팅 235
9. 수탁연구과제 235
10. 타당성조사과제 235

※ 홈페이지 개편 시, QR코드 서비스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QR코드가 인식되지 않는 경우, 연구원 홈페이지(https://www.krila.re.kr)로 접속바랍니다.

2022년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성과보고서

I

연구원 소개

1. 연구원 개요

2. 조직 현황

Ⅰ 연구원 소개

1 연구원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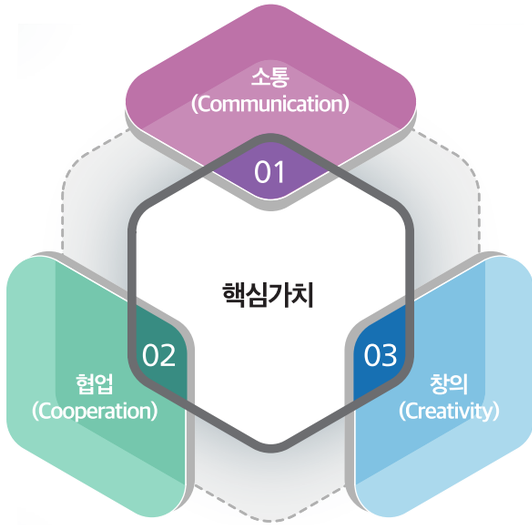
1. 설립목적

• 지방자치의 정착, 발전을 위한 창의적이고 실천적인 조사, 연구 및 정책 개발을 추진하며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지방자치의 역량 제고 및 지원

2. 미션 및 비전·핵심가치

미션 고품질 정책연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지속가능한 발전 실현

비전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최고수준 정책연구기관



3. 경영목표

3대 경영목표	6대 추진전략	18대 실천과제
Ⅰ. 현장 중심 고품질 정책연구 수행	1. 연구품질 개선	1-1. 연구과제 수요조사 및 편성방식 개선
		1-2. 연구과제 수행방식 개선
		1-3. 연구과제 품질평가 및 환류기능 강화
	2. 연구환경 조성 및 구성원 역량강화	2-1. 연구자료의 체계적 관리·활용 체계 (디지털 집현전) 구축
		2-2. 전산 시스템 강화를 통한 연구수행 지원
		2-3. 역량개발 프로그램 확대·신설
Ⅱ. 소통·협업 기반 성과 공유체계 강화	3. 대내 소통 및 협업 시스템 구축 ·운영	3-1. 직원참여형 의사결정체계 구축
		3-2. 건설적 노사협력 관계 정립
		3-3. 윤리·인권 경영체계 구축
	4. 대외 네트워크 내실화 및 연구성과의 체계적 확산·홍보	4-1. 국내 유관기관 협업을 통한 연구성과 확산
		4-2. 국제기구 공동연구 및 협업 확대
		4-3. 지역사회 지원·봉사활동 강화
		4-4. 뉴미디어를 활용한 연구성과 홍보·활용 체계 구축
Ⅲ. 연구원 제도 개선 및 운영 효율화	5. 경영혁신 체계 구축	5-1. 효율적 연구원 운영을 위한 법령·규정 등 제· 개정
		5-2. 조직혁신을 위한 상시 채널(경영혁신 TF) 구축 및 운영
	6. 조직·인사·재정 혁신	6-1. 연구조직 및 공간 효율화 방안 마련
		6-2.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평가제도 운영
		6-3. 효율적 재정운영 시스템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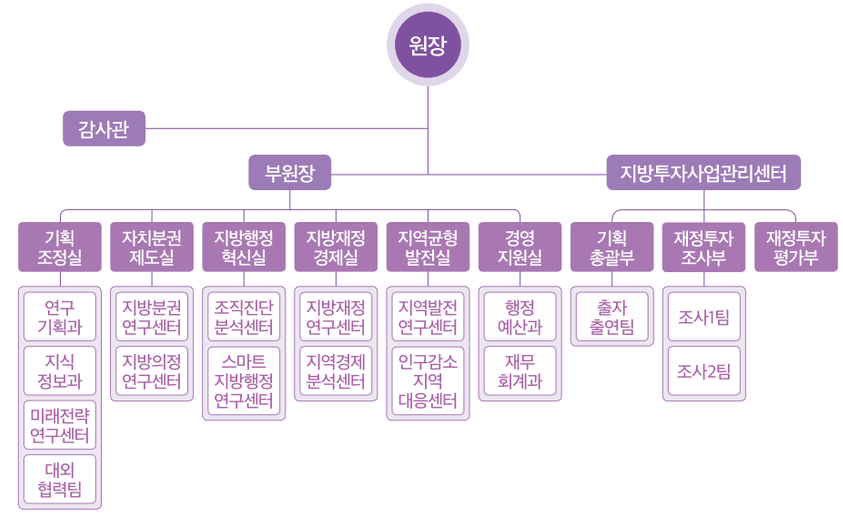
4. 주요사업

구분	사업	분야		
연구원	연구사업	연구사업	기본연구과제	행정안전부 정책연구
			지방자치단체 정책연구	정책이슈리포트
			수시연구과제	자체연구과제
		지방자치단체 컨설팅		
	연구관련사업	학술행사	국내세미나(연구원 주최·유관기관 협력)	
			지역사회혁신과 지역경제 활성화포럼	
			지방의정아카데미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
			국민주도형 작은연구	국정목표 실천 경진대회
		국제협력	일본 CLAIR 및 전문기관 교류협력	
			국제기구 및 학회 활동	
			국제세미나	
		발간	지방자치정책브리프	지방의정브리프
			인포그래픽스	카드뉴스
			지방자치이슈와포럼	지방행정연구
			세계지방자치동향	연구성과물 콘텐츠(유튜브)
	수익사업	수탁용역 연구과제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	조사사업	지방투자사업 타당성조사		
		지방자치단체 자체타당성조사 검토		
		출자·출연 타당성 검토		
		투자사업 이력관리		센터연구과제
		센터정책과제		타당성 조사 지침개정
	조사관련사업	세미나 개최		공무원 교육
		내부 역량강화		
	조사지원사업	지방자치단체 컨설팅 지원사업		

5. 주요 연혁

- 1984.09. (재단법인)지방행정연구소 개소
- 1986.02. (재단법인)한국지방행정연구원으로 개칭
- 1986.05.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 제정 공포(법률 제13809호)
- 2014.11.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 설치(지방재정법·행정자치부 고시)
- 2016.12. 청사이전(서울 서초동 → 원주 혁신도시)
- 2020.06.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 기관 설립 「타당성 검토 전문기관」으로 지정 (행정안전부 고시 제2020-27호)
- 2020.10. 지방공기업 타당성 검토 전문기관 지정 재고시(행정안전부 고시 제2020-51호)
- 2021.11.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 원주 이전

2 조직 현황



구 분	원장	연구직	전문직	투자분석직	행정직	공무직	계
현원/정원	1 / 1	55 / 63	1 / 1	17 / 20	19 / 19	10 / 11	103/115

2022년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성과보고서



Ⅱ 연구보고서

1. 기본연구과제

2. 행정안전부 정책연구과제

3. 지방자치단체 정책연구과제

4. 정책이슈리포트

5. 자체연구 & 지침연구과제

1. 기본연구과제



자치분권제도

1) 주민자치회 모델 재설계 방안 연구 023
(전대욱, 최인수, 최지민, 유수동)

2) 지방의회 주민참여 모델 개발 및 활성화 방안 026
(김지수, 김건위, 고경훈, 주희진)

지방행정혁신

3) 지방자치단체 플랫폼 정부(platform government)의 효과적인 운영방안 연구 030
(이경은, 박재희, 유란희)

4) 지방공무원 역량지표 개발 및 역량 강화 방안 연구: 과장급 인력을 중심으로 036
(이재용, 박현욱, 이병기)

지방재정경제

5) 지방자치와 교육자치 재정사업의 연계·협력 강화방안 039
(김성주, 김진, 황해동)

6) 지방교부세를 통한 특별지방자치단체 재정지원에 관한 연구 042
(이서희, 전성만, 김윤승)

지역균형발전

7) 탄소중립을 향한 지방자치단체 정책추진 강화방안 045
(박진경, 김현호, 이원도)

8) 지역통계를 활용한 지역경제 동향분석: 시공간 큐브 및 동태적 요인 모형을 활용하여 048
(여효성, 김도형, 윤소연)

9) 포스트 코로나 시대, 지방자치단체의 회복력 강화방안 연구 052
(이제연, 이소영)

지방투자사업관리

10) 도서지역 연도·연륙교 건립의 사회경제적인 편익 연구 055
(김지훈, 김상기, 김성규)

11)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한 지역별 B/C 기준 차등화 방안 연구 060
(송지영, 이민기)

1-1 주민자치회 모델 재설계 방안 연구

[주제어] 주민참여 / 지방행정일반(주민자치회) / 지역사회·공동체

연구책임 전대욱 | **연구진** 최인수, 최지민, 유수동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주민자치회 시범실시의 현황을 진단하고 향후 추진방향 정립

- 지난 2013년 이후 2022년 중반까지 지속된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의 현황을 진단
  - 주민자치회의 현황과 향후 추진방향에 관한 심도깊은 연구를 통해, 지난 10여년간의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와 2023년 이후 전면 또는 시범실시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한 방향을 정립

주민참여 촉진과 주민밀착형 지방행정의 구현을 위한 주민자치조직의 활성화

- 주민밀착형 지방행정을 위한 주민자치회와 읍·면·동 행정기구와의 관계 재정립을 위한 기초연구 및 법·제도적 개선방안의 제안
  - 기존 협력형 모델에 기반한 시범사업의 한계를 넘어서, 지방자치단체 기관구성 다양화 등의 최근 제도적 변화에 맞는 새로운 형태의 주민자치 모델의 도입 가능성과 발전전략을 검토

2 연구의 주요 내용

주민자치 정책의 이론과 쟁점에 대한 논의

- 주민자치 정책의 흐름 및 주민자치 조직과 관련된 문헌연구

- 이론·실제적인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주민자치회의 제 이론과 정책 추진현황 리뷰
-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의 기반이 된 협력형 모델과 보다 선진적인 모델로서의 통합형 및 주민자치형 모델 등의 개념과 특징 등을 분석

• 주민자치 플랫폼으로서의 주민자치(위원)회에 관한 쟁점 도출 및 검토

- 주민자치(위원)회의 법·제도, 조직·구성, 운영 및 사업·활동, 재정·재원조달 등 쟁점 검토
- 다양한 쟁점의 도출을 통한 주민자치 조직의 공공성 및 자치역량의 분석틀 제시

주민자치(위원)회의 현황 및 시범실시의 성과분석

• 주민자치 정책의 흐름 및 주민자치 조직과 관련된 문헌연구

- 전국 247개 주민자치(위원)회의 현황자료(제20회 전국주민자치박람회 제출서류)를 바탕으로 주민자치(위원회)의 현황 진단을 위한 통계분석을 실시
- 시범실시를 통해, 기존 주민자치위원회로부터 시범사업을 통해 전환된 주민자치회에서 전반적으로 공공성과 자치역량의 제고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음

선진형 주민자치 플랫폼 및 조직에 대한 국·내외 사례분석

• 주민자치 플랫폼 및 조직이 발달된 선진형 해외사례에 대한 제도 및 현황 분석

- 일본의 정내회, 영국의 패리쉬위원회, 독일과 스위스의 게마인데 등의 사례를 중심으로 도입배경, 관련 제도, 조직 운영방식, 재정 운영 등을 분석

• 국내 주민자치(위원)회의 사례분석

- 경기 성남시 수정구 단대동 주민자치회, 당진시 신평면 주민자치회,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자치위원회와 민회, 전남 곡성군 주민자치회 등의 현황·구성, 조직·운영, 주요 특징 등 분석

향후 다양한 주민자치회 추진 모델에 대한 수요분석

• 공공성 및 자치역량을 중심으로 한 협력형·통합형·주민조직형 등의 설문조사 및 분석

- 주민자치위원, 학계 및 연구기관 종사자 등 전문가 설문 및 인터뷰를 통해 공공성 및 자치역량이라는 큰 두 개의 축을 구성하는 각 구성 요인 간 우선순위를 추출

• 수요분석을 통한 주민자치회 향후 추진 모델의 심화에 필요한 전략적 방향을 도출

- 공공성과 자치역량의 구성요소를 기준으로 각 요인별 중요도, 주민자치회 모델별 평가, 주민자치모델의 진화경로 방향 등을 도출

3 연구 결론 및 기대효과 / 정책제언

중·장기적인 새로운 주민자치회 도입방안을 제시

• 근(近)미래부터 원(遠)미래까지의 다양한 주민자치회 정책추진 로드맵의 제안

- 전술한 분석결과를 종합하여, 공공성과 자치역량의 고른 견인을 통한 궁극적인 주민자치 플랫폼 및 조직의 발전방안을 포괄적으로 논의

• 민·관의 자치역량 강화를 통한 공공성의 제고 전략과 중장기 발전전략

- 주민조직의 공공성과 자치역량 제고를 통해 주민자치회가 진정한 읍·면·동의 대표적인 주민조직으로 성장하기 위한 5가지 전략을 제시
- 읍·면·동 행정기관과 주민조직의 협력적 관계의 형성 및 지속을 위한 민·관의 역량 강화와 교육, 학습을 통한 자치역량 강화 전략 등 제시

주민자치 조직의 자치권 제고를 위한 정책제언

• 법률 제·개정 및 자치법규(조례)의 개선방안을 논의

- 자치입법권 및 자치행정권, 자치조직권, 자치재정권 등의 측면에서 주민자치조직에 대한 공적 권한부여를 통한 공공성의 강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 도출
- 다양한 층위에서의 지방행정 및 주민자치 관련 법률의 제·개정 및 자치법규(조례)의 개선방안 등 논의

1-2 지방의회 주민참여 모델 개발 및 활성화 방안

[주제어] 지방의정 / 주민참여 / 지방분권

연구책임 김지수 | **연구진** 고경훈, 김건위, 주희진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지방의회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 모색 필요성

- 2022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권한과 역할이 확대
  - 지방의회가 주민대표기능을 강화하고, 주민과 신뢰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주민참여 제도의 보다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
- 지방의회에 대한 주민참여 연구 부재
  - 그러나 주민참여는 지방자치단체(집행부)의 정책결정과정에서의 주민참여에 한하여 논의
  -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에 대한 주민참여 필요성에 대한 인식 부재
- 지방의회에 대한 주민참여 모델 개발과 활성화 방안 연구 필요

2 연구의 주요 내용

지방의회 주민참여 모델 개발을 위한 이론적 논의

- 지방의회 주민참여 필요성에 대한 3가지 관점
  - 대의민주주의 한계 극복의 대안으로서의 관점, 풀뿌리민주주의에 근거한 주민자치의 관점, 정부-주민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수용성·신뢰성 제고의 관점에서 지방의회 주민참여 필요

- 지방의회 의정활동의 전 과정에 대한 주민참여 유형화
  - 법적으로 의원의 고유한 권한에 해당되는 영역(예: 의결권)을 제외하고, 모든 단계에서 주민참여 가능(단, 지방의회의 기능과 시기별로 적합한 주민참여 방법이나 수준은 상이할 수 있음)
  - 미주의원연맹(PalQmericas)이 개발한 입법 프로세스 전과정에서의 주민참여 툴킷을 참조
  - 주민의 힘(power)과 커뮤니케이션 방향에 따라 주민참여 유형 분류하고, 지방의회 기능 및 정책프로세스 단계별로 지방의회 주민참여의 기본 모델을 개발 필요

| 표 | 지방의회 주민참여 기본모델 개발(안)

지방의회 기능	주민대표기능	의결기능	감시기능	
정책 프로세스	정책형성 및 계획수립단계	정책결정단계	정책평가 및 환류단계	
주민참여 유형	양방향 직접적 주민참여 일방향 직접적 주민참여 양방향 간접적 주민참여 일방향 간접적 주민참여 비참여	양방향 직접적 주민참여 일방향 직접적 주민참여 양방향 간접적 주민참여 일방향 간접적 주민참여 비참여	양방향 직접적 주민참여 일방향 직접적 주민참여 양방향 간접적 주민참여 일방향 간접적 주민참여 비참여	참여수준 高 참여수준 低

지방의회 주민참여제도 운영실태

- 법률상 보장된 지방의회 주민참여는 방청, 정보공개 등 주로 일방향 간접적 주민참여
  - 단, 주민조례발안은 예외적으로 직접적 주민참여가 가능
  - 조례에 근거한 지방의회 주민참여는 서울·경기 등 광역의회의 경우 상대적으로 다양한 주민참여방안을 모색하고 있음. 그러나 전반적으로 주민참여는 일방향 간접적 주민참여에 그침

• 지방의회 주민참여 활성화에 대한 공무원 인식 개선 필요

지방의회 주민참여제도 운영실태

• 국내사례

- 국회 e-청원 시스템, 경기도의회 정책토론대축제와 지역상담소, 광주광역시 바로소통 광주, 서울중구의회 주민소통공청회, 국회톡톡, 광양시의회 시민참여형 행정사무감사 등

• 국외사례

- 영국·독일 전자청원, 아일랜드 개헌을 위한 시민회의와 시민의회, 동벨기에 상설 시민의회 등

지방의회 주민참여 모델 및 활용 가이드라인

• 각 지방의회의 다양한 상황에 맞는 주민참여방법을 선택·조합하여 활용할 수 있는 모듈형 모델 개발

- 지방의회의 기능별(주민대표기능, 의결기능, 감시기능), 정책 프로세스 단계별(정책형성 및 계획수립단계, 정책결정단계, 정책평가 및 환류단계), 참여주민의 유형별(전문가, 일반주민), 참여의 방법별(온·오프라인방식) 다양한 주민참여 설계의 방법을 제시등
- 각 지방의회가 지역의 상황(예: 인구구성, 주민의 인식, 예산 및 여건 등)에 맞게 주민참여의 방법을 선택·조합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함

지방의회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

• 법제도적 차원, 제도운영적 차원, 인식론적 차원, 조직·인력·재정적 차원에서 활성화 방안(14가지)을 제시

3 연구 결론 및 기대효과 / 정책제언

정책제언

• 「지방자치법」상 주민의 기본권리와 의장의 역할 등에서 주민참여 촉진의 의무를 부여

• 「청원법」개정을 통한 주민의 직접청원권을 보장하고, 온라인 청원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

• 지방의회 주민참여 매뉴얼 활용을 통해 지방의회에 대한 주민신뢰를 제고하고 지방의회 기능강화 기반 마련 필요

• 지방의회 의원 및 사무기구 직원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확대 필요

기대효과

• 향후 지방의회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1-3 지방자치단체 플랫폼 정부(platform government)의 효과적인 운영방안 연구

[주제어] 스마트지방행정

연구책임 이경은 | **연구진** 박재희, 유란희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디지털 대전환에 대한 대응의 일환으로 '플랫폼 정부' 개념 등장

-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세계 각국의 정부들은 새로운 정보화 패러다임에 대응하기 위하여 다양한 정보화 전략들을 추진해 왔으며, 최근 '플랫폼 정부'라는 개념이 주목을 받고 있음
  - 윤석열 정부도 디지털 전환 시대의 정부의 모습 또는 정부의 역할에 대해 '디지털 플랫폼 정부' 혹은 '플랫폼으로서의 정부(Government as a Platform, GaaP)' 라는 청사진을 제시한 바 있음

지방자치단체의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을 위한 전략 필요

-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특수성과 고유성을 기반으로 어떻게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지역 단위에서 현실화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미흡한 상황임
  - 지방자치단체들은 기존에 중앙정부에 의해 구축된 기반시설 및 시스템을 유지하고 보수하는 데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으며,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지역 단위의 정보화 정책에 주력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매우 드문 실정임

2 연구의 주요 내용

플랫폼 정부의 개념과 공공플랫폼의 유형

-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를 살펴보면서 플랫폼 정부의 개념과 특성, 그리고 공공플랫폼의 유형들을 보다 명확하게 제시하고자 하였음
  - 플랫폼 정부는 "정부의 내부 구성원과 시민들이 함께 참여하여 방대한 데이터를 서로 공유하고, ICT 기반의 다양한 협력 기술을 활용함으로써 새로운 공공 가치를 창출하고,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혁신을 일으킬 수 있는 열린 장(場)을 마련하는 정부"임
  - 플랫폼 정부의 핵심 기제라고 할 수 있는 공공플랫폼은 핵심기능과 정책 결정 및 행정 서비스의 흐름과 방향을 기준으로 정보제공형 플랫폼, 정책제안형 플랫폼, 민간역량중개형 플랫폼 등으로 구분할 수 있음

지방자치단체 플랫폼 활용 실태분석

-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총 96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회수된 응답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디지털 플랫폼 활용 실태분석을 수행함
  - 지방자치단체 간 공공플랫폼의 운영 수준에 있어 양적·질적 격차가 매우 크며, 공공플랫폼의 형태 다양성의 정도가 낮고, 기술 수준 또한 높지 않음(3개 이하의 공공플랫폼 운영 지자체 55.2%, 11개 이상의 공공플랫폼 운영 지자체 7.3% (총 96개 지자체 中, 홈페이지, SNS 등 단순 기능 플랫폼 운영 지자체가 대부분)
  - 디지털 플랫폼 전담 조직 운영 지자체의 비중이 매우 낮으며(정보제공형 18.6%, 정책제안형 11.3%, 민간역량중개형 7.2% (총 96개 지자체 中)), 1명 이하의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는 지자체의 비중이 매우 높음(정보제공형 47.4%, 정책제안형 53.6%, 민간역량중개형 30.9% (총 96개 지자체 中))
  - 1천만 원 미만의 예산으로 플랫폼을 운영 중인 지자체의 비중이 높게 나타남(정보제공형 11.3%, 정책제안형 45.4%, 민간역량중개형 19.6% (총 96개 지자체 中))
  - 디지털 플랫폼에 대한 지자체장의 관심 정도는 대체로 낮은 수준으로 조사됨(정보제공형 평균 2.80, 정책제안형 평균 2.78, 민간역량중개형 평균 2.68 (5점 만점))

- 지방자치단체 단독으로 플랫폼을 운영하는 사례가 대부분임(정보제공형 76.3%, 정책제안형 66.0%, 민간역량중개형 21.6% (총 96개 지자체 中))
- 디지털 플랫폼의 이용현황에 대해 별다른 관리를 하고 있지 않은 지자체 비중이 15~20%로 나타남(정보제공형 16.2%, 정책제안형 19.2%, 민간역량중개형 16.4% (총 96개 지자체 中))
- 공공플랫폼에 대한 주민의 만족도가 낮은 현상에 대해서는 '제한적인 정보 및 서비스의 양', '플랫폼에 대한 홍보 부족', '플랫폼에 참여하는 범위의 한계', '플랫폼 참여자 부족', '플랫폼을 통해 거래되는 정책 및 서비스 부족' 등이 주요한 이유로 조사됨

지방자치단체 플랫폼 활용 국내 사례분석

• 경기도 「버스정보시스템」, 서울시 은평구 「참여의 큰 숲」, 경기도 「배달특급」 및 「공정구매플랫폼」 사례를 선정하여 국내 지방자치단체 플랫폼 활용 사례에 대한 분석을 수행함

- 지방자치단체장의 공공플랫폼에 대한 관심 정도에 따라 플랫폼에 투입되는 자원의 규모나 플랫폼에 대한 공무원들의 인식 정도가 달라지고, 디지털 플랫폼 정책의 상대적인 우선순위가 다르게 설정되고 있음
- 디지털 플랫폼 운영 업무에 대한 이해와 플랫폼 필요성에 대한 공감도가 높고, 새로운 기술에 대한 활용과 신사업에 대한 수용도가 높은 인력들에 의해 운영될 경우 플랫폼 운영이 활성화되고, 부서 간 업무협조 및 정보공유와 같은 협력적 조직문화가 존재할 경우 플랫폼 운영에 도움이 됨
- 법적 규제가 강하고, 높은 진입 장벽이 있으며, 정확성을 갖춘 기술 서비스가 요구되는 플랫폼에 대해서는 해당 법제도적·기술적 지원을 필요한 상황이며, 플랫폼의 양적 확장 및 질적 개선을 위해서는 외부 지원체계가 필요하다고 인식함
- 민간플랫폼 기업과의 기술 및 서비스 교류를 통해 기술적 한계를 극복해 나가고 있으며, 장애인 및 노숙자 등 소수 이용자를 배려하는 다양성과 공공가치에 중심을 두고 운영되고 있음

플랫폼 활용 해외 우수 사례분석

• 싱가포르의 'Smart Nation', 영국 런던의 'Talk London',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의 'Amsterdam Smart City Platform' 사례를 선정하여 해외 지방자치단체 플랫폼 우수 사례를 분석함

- 싱가포르의 'Smart Nation'은 데이터 과학, AI 등 디지털 기술에 대한 역량을 보유한 인재들에 의해 운영되고 있으며, 국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풍부한 재정적 자원을 사용하고 있고, 국내외 대학 및 민간 기업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있음
- 런던시의 'Talk London'은 최고 데이터 책임자인 CDO가 총괄책임을 맡고 있으며, 런던 전역의 데이터를 분석하는 LODA와 교육 프로그램을 통한 지방자치단체 담당자들의 역량 향상을 담당하는 GLA, 스마트 런던 정책을 담당하는 스마트 런던팀, 외부 고위급 자문위원회로서 스마트 런던 위원회 등 다양한 조직들을 체계적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음
- 암스테르담의 'Amsterdam Smart City Platform'에서 시정부는 거버넌스의 주체 간 상호작용을 지원하는 '촉진자(지원자)'로 역할을 수행하고, 시민이 주도한 아이디어가 상향식으로 모아지는 형태로 운영되어 시민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유도하고 있음

민간 우수 플랫폼 기업 사례분석

• 민간 우수 플랫폼 기업인 「당근마켓」, 「강남언니」, 「배달의민족」 담당자들에 대한 심층 인터뷰 내용을 분석함

- 성공적인 민간플랫폼 기업은 이용자들의 편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면서, 일종의 공공 가치를 플랫폼에 담고자 하며, 공급자의 관점이 아닌 플랫폼 이용자의 관점에서 사고하는 문화를 강조함
- 플랫폼의 설계, 품질유지, 고객관리 등 플랫폼 운영 전반에 인공지능, 머신러닝 등 고도의 ICT기술을 사용하고 있으며, 플랫폼의 이용자 유입에 차별화된 홍보 및 마케팅 전략을 사용하고 있음

- 매트릭스 조직 구조를 활용하여 전 조직이 현안에 대해 긴밀하게 협력하고,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구조를 활용함
- 인터뷰 대상자들은 공공플랫폼이 민간플랫폼과 경쟁하기보다는 민간플랫폼이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영역 중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중점적으로 개발할 필요성이 높으며, 모든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려하기보다는 필요성이 높은 서비스를 단순하고 쉽게 제공한 후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야 하고, 플랫폼 기획 및 운영에 필요한 중장기적 재원 마련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고 제언함

3 연구 결론 및 기대효과 / 정책제언

지방자치단체 플랫폼 정부 운영 전략

- 조직 내부 측면에서 플랫폼 정부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취해야 할 전략은 다음과 같음
  - △공공플랫폼 운영에 대한 단체장의 역할 조례상의 명문화 및 지자체장의 디지털 역량 강화, △디지털 혁신을 주도할 수 있는 고위 직급 설치, △공공플랫폼 운영의 전문성 및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중장기적 인적 자원 확보 및 역량 개발 계획 수립, △공공플랫폼 운영에 적합한 조직구조 재설계, △하위 부서 간 개방적·협력적 협업 체계 구축, △민간플랫폼 및 기존 공공플랫폼 사각지대에 역량 집중, △공공플랫폼 구축 및 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 조직 외부 측면에서 플랫폼 정부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취해야 할 전략은 다음과 같음
  - △민관협의체를 통해 공공-민간 협력 거버너스 구축, △민간플랫폼과의 협력 방안 개발, △주민 디지털 리터러시 함양 방안 수립, △공공플랫폼 홍보 강화
- 플랫폼 특성 측면에서 플랫폼 정부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취해야 할 전략은 다음과 같음

  - △사용자 중심의 플랫폼 구축 및 개선, △공공플랫폼 지속적 이용을 위한 유인책 개발, △정보제공형 플랫폼, 주민 필요에 따른 양질의 데이터 및 정보 확보, △정보제공 플랫폼, 주민들의 정책효능감 향상 방안 마련, △민간 역량 중개 플랫폼, 민간 역량 교류 생태계 조성

유관기관의 지방자치단체 플랫폼 정부 지원 방안

- 행정안전부를 포함한 유관기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플랫폼 정부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은 다음과 같음
  - △지자체 플랫폼 정부 지원을 위한 '디지털 플랫폼 정부위원회' 하위 조직 설치, △공공협의체를 활용한 중앙-지방, 지방-지방 간 협력체계 구축, △지방자치단체 공공플랫폼 컨설팅 프로그램 운영, △지방자치단체 플랫폼 정부 구현을 위한 표준 조례안 마련 및 과도한 규제 완화, △메타플랫폼 및 공동플랫폼에 대한 구상, △공공플랫폼 지역 간 격차 해소 방안 수립, △공공 데이터 품질 관리 체계 구축

1-4 지방공무원 역량지표 개발 및 역량 강화 방안 연구: 과장급 인력을 중심으로

[주제어] 역량 평가지표 / 역량 평가체계 / 역량강화

연구책임 이재용 | **연구진** 박현욱, 이병기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지방분권 시대, 행정 수요 대응을 위한 과장급 지방공무원 역량 관리 및 강화 필요

- 지방분권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및 권한 확대
- 정책 집행 및 행정 서비스 제공 역할 수행자인 지방공무원의 역량 강조
- 특히 중간관리자인 과장급 공무원의 역량 관리 필요성 증대
  - 과장급 지방공무원의 효과적 역량 관리를 위한 역량 평가지표·체계 검토 및 개선, 역량 강화 방안 마련 필요

2 연구의 주요 내용

- 과장급 지방공무원 역량의 이론적 논의 및 개선방안 제시
  - 과장급 지방공무원 역량 관련 개념 정립 및 주요 고려사항 도출
  - 역량 평가 지표 검토 및 개선안 도출

| 표 | 과장급 지방공무원 역량평가 지표 내용

구분	역량	내용
사고	전략적 사고	- 목표달성을 위한 구체적 방안 제시 - 조직 내 혁신적인 조직문화 및 일하는 방식 제시
	정책 기획	- 현안파악과 타당성 검토, 대안의 제시
업무	성과관리	- 성과향상 방안 제시 - 구체적 업무 방향성 제시 및 실행 모니터링
	문제해결	- 문제 재정의 및 구체적 해결방안 도출 - 특정 사안에 대한 위기관리
	행정수요 파악	- 지역 내 특수한 행정수요 파악
관계	조직자원관리	- 구성원 동기부여 및 자원 파악, 확보 - 중간관리자로서의 구성원 수요 파악
	이해관계조정	- 의사소통 강화 - 중간관리자로서의 구성원 소통

- 역량 평가 관련 현황 분석 및 역량강화를 위한 지원방안 제시
  - 자치단체 수준에서의 역량 평가 및 역량 강화 교육 관련 환경, 장애 요인, 문제점 등 분석
  - 평가방법 및 역량 향상 측면의 정책방안, 평가체계 관련 개선방안 도출
    - (평가방법 측면)
      - 승진 인사 방식의 다양화 차원에서의 다면평가 활용, 역량 교육 프로그램 활용과 함께 자치단체 차원에서의 역량 평가의 활성화를 위한 역량 평가의 제도화, 평가의 공정성 확보, 역량 평가 관련 구성원의 인식 개선 등
    - (역량 향상 측면)
      - 역량 교육 프로그램 개선, 역량 교육 프로그램 방식의 다양화

3 연구 결론 및 기대효과 / 정책제언

- 과장급 승진 인사 시 지방공무원 역량 평가 지표의 활용
  - 본 연구에서 도출한 지표 개선안을 활용하여 과장급 승진대상자의 전략적 사고, 정책기획, 성과관리, 문제해결, 행정수요 파악, 조직자원관리, 이해관계 조정 관련 역량 평가 가능
- 과장급 지방공무원 역량 평가체계 개선에 활용
  - 본 연구에서 현행 지방자치단체별 승진평가 3가지 유형(역량 평가, 역량교육 프로그램 이수제, 다면평가)에 따라 제시한 구체적인 평가체계 개선안을 실무적 차원에서 활용 가능

1-5 지방자치와 교육자치 재정사업의 연계·협력 강화방안

[주제어] 교육자치 / 지방 교육 연계협력 / 교육재정사업

연구책임 김성주 | **연구진** 김진, 황해동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 모두 선출직임에 따른 한계

- 2006년 교육감 및 교육위원 선거방법을 주민 직선으로 전환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교육행정기관 간의 연계를 강화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
- 이후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은 모두 선출직이 됨에 따라 사업의 시급성이나 경제적 합리성보다는 주민에게 돋보이는 가시적 교육사업을 추진하는 경우가 빈번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임성일, 2015)

교육자치에 대해 재정 쪽과 교육 분야 전문가들 사이의 이견 존재

- 재정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의 규모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학령인구는 줄어드는 지금 시대에 인구가 증가하던 50년 이전에 설계된 교부금 배분 구조의 적합성 문제가 지속됨
- 반면, 미래교육 수요가 늘고 있고 교육체계 개선을 위해 전체적인 교육 재정 수요는 오히려 늘고 있다는 교육계의 주장이 맞서고 있는 상황임

보완 장치로써 지방자치와 교육자치의 연계·협력 필요성 제기

- 이처럼 이견들이 있는 가운데 보완 장치로서 통합이나 분리가 아니라 서로 연계·협력하자는 주장이 있어왔음

• 혁신교육지구 등 연계협력 사업을 추진한 사례도 있으나 실질적인 협력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인 가운데, 지방교육재정 운영 틀의 불완전성으로 인한 재정 효율성 한계 등의 문제가 상존함

2 연구의 주요 내용

지방자치와 교육자치 연계·협력 대상 사업의 발굴

• 한 곳의 사례 광역지자체와 같은 지역 교육청에서 수행하는 교육사업들을 전수 분석, 유사하거나 중복적인 사업들을 기준으로 연계·협력 대상 사업을 선별하였음

• 자치분권위원회와 교육부 공동으로 개최한 지방자치-교육자치 연계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수상한 사례를 바탕으로 연계·협력 사무나 분야를 발굴하였음

• 이상의 분석결과, 연계·협력 대상 사업은 다음과 같이 선정되었음

- 우수인재 양성, 수학능력 향상, 방과 후 학교, 돌봄, 다문화 가정 지원, 교육환경 개선, 학교시설 정비, 농어촌·진로 체험, 대회 개최, 예체능 지원, 원어민 교사, 소외계층 평생교육, 평생학습관, 장학사업, 통학로 개선 등 15개 사업이 도출되었음

연계·협력 대상사업들에 대한 지자체와 교육청 공동의 공급방식 제안

• 단기적으로는 현재의 법·제도 내에서 추진 가능한 방안을 제시함

- 현재 설치되어 있는 교육행정협의회의 상설화 및 지방의회의 역할 강화를 위해 지방자치법 제64조(위원회의 설치) 제2항 근거에 따른 특별위원회의 설치, 지방교육행정협의회 실무협의회의 분과별 운영을 제안하고 있음

• 장기적으로는 법·제도를 제정하는 부분까지도 고려한 방안을 제시함

- 본 연구의 장기적 방안은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113번과 관계가 깊은데, 주요 내용은 지역인재 양성을 위해 지자체·교육청·지방대학이 함께 협업하여 재원을 공동편성·집행하는 공동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한다는 것임

- 이러한 국정과제 수행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이 공동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공동으로 집행할 수 있어야 함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가칭)시도교육공동위원회의 신설을 제안함

- (가칭)시도교육공동위원회는 범부처 조직인 국가균형발전위원회나 사회보장위원회 등 예산의 편성권과 집행, 사후관리 권한이 있는 국가위원회의 개념을 지방에 도입해서 행정권한을 가지는 행정기구로서의 역할을 하는 위원회의 형태임

3 연구 결론 및 기대효과 / 정책제언

(가칭)시도교육공동위원회를 신설할 경우, 관련 법의 개정 필요

• 지방자치법 제135조제2항의 개정이 필요함

- 즉, '제1항에 따른 기관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법률로 정한다. 단,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간 연계·협력 대상 사업의 수행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공동으로 기관을 설립할 수 있다'로 법 개정 검토가 필요함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개정 필요

•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제2조는 다음과 같음

- 유아교육 및 초·중등교육의 내실화, 교육복지의 증진, 평생교육의 진흥, 단위학교 재정운영의 자율화 및 효율화, 합리적인 세입을 고려한 재정지출과 건전재정 운영 등 5개의 원칙을 제시하고 있음

• 이에 덧붙여 '6. 연계·협력 사업에 대한 협조' 원칙을 추가할 필요가 있음

1-6 지방교부세를 통한 특별지방자치단체 재정지원에 관한 연구

[주제어] 지방재정조정제도 / 지방교부세 / 특별지방자치단체

연구책임 이서희 | **연구진** 전성만, 김윤승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논의와 재정지원 검토 필요

-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일정 연합이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해 지방의회 및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설치되는 법인을 특별지방자치단체라고 정의함
  - 특별지방자치단체는 인접지역의 중첩되는 대규모 사업에 대한 기능을 조정하여 수도권에 집중된 일극체제를 극복하고, 상당 수준의 인프라를 구성하여 인구를 유입하려는 이유로 활발하게 논의되었음
- 특별지방자치단체 구성에 따른 재정지원 수단으로써 지방교부세 반영이 논의됨
  - 특별지방자치단체의 분담금 출연분에 대해서 일정 비율을 적용하여 특별수요로 반영하기로 하였으며, 새로운 수요의 변동은 지방교부세제도 교부에 영향을 전체 지방자치단체로 미치기 때문에 이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함

2 연구의 주요 내용

특별지방자치단체 개념 및 범위와 해외사례 분석

- 사례분석을 통해서, 특별지방자치단체가 특정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설립배경이 중앙주도적인지, 지방주도적인지를 확인함으로써, 향후 운영에 필요한 재정지원 수단

과 연계할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특별지방자치단체 구성 관련 적합한 재정지원 수단에 관한 이론적 검토

- '재정은 기능을 따른다(finance follows function)'는 보수주의적 재정연방주의 접근이 특별지방자치단체 구성과 같은 새로운 환경변화에 따를 때 어떤 이론적 시사점을 줄 수 있는지를 논리적 차원 및 법·제도 차원에서 접근함

보정 수요 반영을 통한 보통교부세 재정지원 및 지방자치단체 간 영향 분석

- 특별지방자치단체 구성에 따라 분담금 10%를 보통교부세 보정수요에 반영하는 현행안을 기반으로 광역 간 연합(부울경), 기초 간 연합(지리산권, 폐광 기금)으로 구분하여 규모의 변화, 재원 배분 효과(재원 보장 기능) 및 재원 영향 효과(재원 조정 기능)로 살펴봄
  - 특히 2022년 10월까지 활발하게 논의되었던 부울경 연합(현재 부울경특별연합 규약 폐지 행정예고 등 연합이 사실상 중단)을 중심으로 규약에서 명시한 1~3단계 사무를 토대로 재정지원 효과의 충분성과 타 자치단체와의 영향 관계 등을 살펴보았음
  - 지방교부세로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하는 것이 효율적인가, 규모의 측면에서도 충분한가 등에 집중하였으며, 기존 지방교부세 지원안 외에도 지방교부세 틀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기타 방안과 지방교부세 틀 외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으로 구분하여 규모, 재원 배분 및 영향의 시나리오를 구성하여 분석하였음

3 연구 결론 및 기대효과 / 정책제언

연구 결과 및 정책제언

- 지방교부세를 통한 특별지방자치단체 재정지원 관련 영향 분석 결과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음
  - 현(現) 재정지원 방식은 광역자치단체를 중심으로 구성되다 보니, 기초자치단체의

재원 규모가 광역자치단체로 이전되는 효과를 나타낼 수밖에 없었음. 보통교부세의 절대적 총액이 정해진 상태에서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 구성은 경북, 전남, 경남을 구성하는 기초자치단체의 규모가 가장 크게 줄었으며 재원 보장기능으로서 상대적 빈곤 등의 지표가 개선되는 등의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음

- 현 재정지원 방식이 아닌 지방교부세 내에서 재원을 지원하면서 충분한 규모를 지원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의 시나리오를 구성하여 분석하였음
  - 1)기준재정수입 산입률 조정, 2)내국세 법정률 인상, 3)특별교부세로 교부하는 방안의 시나리오를 구성하여 각각의 배분 재원 규모 변화를 제시하였고, 보통교부세보다 특별교부세로 지원할 때, 그 설립 취지와 지원 목적에 부합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해석되었음
- 현 재정지원 방식이 아닌 지방교부세 외에서 효과적으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음
  - 단순히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재정조정의 틀을 검토하고, 지역 간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큰 틀을 제시하고자 함
  - 광역은 보통교부세를 교부받지 않고, 지방소비세 전체를 조정하여 배분받고, 나머지 보통교부세는 기초자치단체만 교부받는 방식을 제시하였으며, 지방소비세 안분이나 조정교부금 충당 여부 등을 고려하지 않고 우선 단순 금액 산출 수준에서 분석하였음
  - 추계 결과, 2022년 지방소비세는 19조 원 정도이고, 지방소비세를 기초수입액에서 제외한 보통교부세 산출액은 53조로 추산되었음. 기존에 보통교부세는 광역이 16조, 기초가 39조 원을 교부 받았기 때문에 물론 법정률 배분에 있어서 규모가 줄겠지만 틀을 바꿔서 광역과 기초가 재원을 자유롭게 활용하여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재원을 주는 것도 하나의 정책 대안으로 고려할 수 있음

1-7 탄소중립을 향한 지방자치단체 정책추진 강화방안

[주제어] 탄소중립 / 탄소중립기본법 / 분권적 탄소중립 추진 / 탄소중립이행책임관

연구책임 박진경 | **연구진** 김현호, 이원도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지구환경위기 증가로 인해서 지자체 탄소중립 대응 필요

-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온도 상승을 2℃로 억제하기 위해 국제사회의 탄소중립 선언에 발맞춰 우리도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이를 위해 국가뿐 아니라 삶의 현장인 지자체의 탄소중립 강화가 절실함

지자체의 탄소중립 추진 강화 방안 개발 필요

- 현재 중앙부처 중심의 탄소중립에서 벗어나 분권적 차원에서 지역특성을 고려한 탄소중립 추진 강화방안을 개발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임

2 연구의 주요 내용

탄소중립에 대한 이론적 논의 검토

- 지속가능발전, 녹색성장, 그린 뉴딜 등 탄소중립 관련 개념의 변천과 차이 등에 대한 논의 검토
- 탄소중립의 실천에 중요한 개념, 방향과 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분석의 틀 도출

시도별 탄소중립 실현 여건 분석

- 「탄소중립기본법」 상의 감축 목표 부분을 새롭게 재편, 구성하여 시도별 직접 배출량과 소비기준 배출량 비교
- 지자체 차원에서 탄소배출의 특성과 특화된 탄소중립 추진전략 수립의 한계점과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 전북 전주시를 대상으로 한 사례 분석 시행

지자체 탄소중립 추진실태 분석

- 243개 지자체 조례분석을 통해서 시군구의 탄소중립 추진 의지, 실태, 한계 등을 포함한 제도 기반의 구축을 분석
- 243개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120부의 설문조사 응답지를 통해 지자체 탄소중립 추진현황 애로사항 등을 분석
  - 제도기반 측면에서는 지자체별로 기반구축의 차이가 있었으나, 현재까지는 계획 수립등은 대체로 미비한 상황이었음
  - 협력 측면에서는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협력이 미흡한 채 중앙부처 중심으로 시책이 추진되는 문제점 보유
  - 기반 측면에서는 탄소중립 인벤토리 구축 능력의 부족, 추진체계 구축 미흡, 탄소배출원 관할권의 불합리 등 문제점 보유

외국의 탄소중립 정책 분석

- EU, 영국, 네덜란드의 유럽과 일본의 정책사례를 분석하여 본 연구의 방안 도출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
- 유럽의 국가들은 국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나 민간 등의 탄소중립에 대한 자발적 참여를 촉구하는 시책과 제도 운영
- 일본은 지역이 주도하는 '지역 탈탄소 로드맵'을 통해 국가는 지역을 지원하며, 지역 주도의 지역 성장동력과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수단으로 탄소중립을 추진하고 있었음
- 외국 정책의 시사점은 중앙부처보다는 지자체나 민간의 정책추진을 기획하고, 추진하는 특징을 보유

3 연구 결론 및 기대효과 / 정책제언

지자체 탄소중립 추진 원칙

- 중앙집권에 의한 중앙주도의 탄소중립 탈피, 탄소중립 추진 시 주체간 갈등과 긴장의 해소, 탄소중립의 지역 성장 모멘텀화, 단기보다는 중장기 관점의 탄소중립 추진

지자체 탄소중립 추진 방향

- 분권적 방향의 탄소중립 추진, 지역특화, 연계협력적 추진, 데이터에 바탕한 과학적 추진기반 구축

주요 과제 및 시책

- 지자체가 시책을 주도할 수 있는 탄소중립 추진의 분권 시스템 구축, 지역의 실정과 여건에 부합하는 특성화 전략과 계획의 수립 및 시책 개발, 교육 및 홍보 등을 통한 지자체 추진역량 강화, 공간정보와 연계한 지역탄소 모니터링 체계 구축 및 정비

지자체 추진체계 정비

- 공공이나 지자체 일반의 탄소중립 추진보다는 지역사회 주체 모두가 참여하는 중앙-지방, 지자체 간, 지자체 주체 간 협력적 추진 시스템 구축

제도적 지원체계 정비

- 탄소중립이행책임관 뿐 아니라 탄소중립 관련 부서 모두가 참여하는 지자체 추진기구정비, 지자체 자율성이 강화된 탄소중립기금의 지자체 이관, 다원적 탄소중립 평가 및 점검, 탄소중립 관련 법률의 정비

1-8 지역통계를 활용한 지역경제 동향분석: 시공간 큐브 및 동태적 요인 모형을 활용하여

[주제어] 지역통계 / 지역경제 / 시공간 큐브 분석 / 동태적 요인 분석

연구책임 여효성 | **연구진** 김도형·윤소연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지역경제 환경변화

- 유례없이 낮은 저출산 고령화를 경험
  - 급격한 저출산 고령화가 지역사회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인구절벽의 시기를 앞당김
- 주력산업의 침체에 따른 지역사회 쇠퇴
  - 자동차 및 조선산업의 불황은 지역사회 실업률 증가, 인구 유출로 이어짐
  - 지역경제의 동향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단기적 그리고 중·장기적 대응책에 대해 마련하는 것이 시급함

지역 고유의 경기순환 사이클

- 코로나19와 같은 위기 상황에서 지역별로 체감하는 경제적 고통지수는 달랐음
  - 위기대응도 중앙보다는 지자체가 주가 되어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
- 지역경제와 관련한 통계 현황을 파악하고, 지역경제의 시·공간적 특성을 분석
  - 베이지안 VAR모형을 추정하여 외생적 충격에 대한 지역경제의 충격반응이 시·도별로 또는 시점별로 차별성이 존재함을 제시

2 연구의 주요 내용

지역경제와 관련한 통계 현황 파악

- 지역경제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산재되어 있는 지역통계를 통일된 틀에서 취합하고 분석하는 것이 필요
  - 시·도별로 지역의 고유한 특성에 따라 활용하는 통계 목록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전국적으로 지역경제 동향을 파악하고 서로의 상대적인 위치를 비교·분석하기 위해서는 통일된 지표와 분석 틀이 제시되어야 함
  - 시·도별 통계 및 활용 현황은 지역별 경제동향 비교에 활용할 수 있을 것임

지역경제의 시·공간적 특성을 분석

- 지리적 공간을 대상으로 중·장기적인 시·공간 분포의 특성에 대해 파악
  - 고용률, 실업률, 광업·제조업 사업체 수 및 종사자 수, 1인당 급여액, 국내인구이동의 핫 스팟·콜드 스팟 분석을 통해 최근 11년간 지역적으로 핫스팟인 지역과 콜드스팟인 지역을 분류함
  - 개별 지표별로 분석의 결과를 제시하여 지역별 유형을 분류하였으며, 해당 지역이 핫스팟으로 분류된 원인에 대해서는 앞으로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

베이지안 VAR 추정 및 지역경제의 충격반응 차별성 제시

- 외생적 충격에 대한 지역경제의 충격반응이 시·도별로 또는 시점별로 차별성이 존재함을 제시
  - 외생적 충격에 대한 시점별 충격반응이 지역별로 상이함. 경기순환 사이클이 대조될 수 있는 경기도와 전라남도를 대상으로, 최근 20년간 경제 침체 시기의 외생적 충격에 대한 반응함수를 실증 분석
  - 지역경제 동향 파악과 이를 통한 지역별 경기변동 대응이, 지역별로도 또는 시점별로도 다른 정책조합이 필요함을 시사

- 지역경제의 사이클을 면밀하게 관찰하고, 지자체가 주가 되어 시점별로 적합한 정책조합을 제시하며 이를 국가에 제안하고자 하는 노력이 요구됨
- 시·도별로 경제동향 분석을 위한 역량을 충분히 확보되어야 함

3 연구 결론 및 기대효과 / 정책제언

지역경제 분석 전담 조직의 설치 및 운영

• 전담 조직의 설치로 산업 및 경제동향의 분석, 지역경제 진단 및 현안 연구 등의 업무를 수행

- 경제위기 시 지역 자체적으로 원인을 분석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
- 현재 각 시·도에서 경제동향을 발표해오고 있지만, 지역 차원에서의 전문성이 부족해 코로나19 등을 포함한 경제위기 상황에서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산업구조의 변화 대응이 미흡하고 매뉴얼을 마련하는 데 한계가 나타남
- 지역의 산업구조에 중점을 둔 경제동향의 분석을 위한 전문 기관이 설치되어, 지역의 특성과 여건을 고려한 경제분석과 전망을 통해 경제위기에 대비

지역통계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지역경제분석시스템 도입

• 분석모형을 활용한 지역내총생산의 실시간 당분기 예측

- 통계인프라 확충과 관련해서는 지역경제와 관련한 통계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지역주민 및 지자체 실무자가 쉽고 빠르게 지역통계를 통해 현황을 파악하고 인사이트를 얻도록 돕기 위한 통합 플랫폼 구축도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
- 지역 내 총생산의 당분기 전망이 제시된다면 그간 연도별로만 분석이 가능하며, 시점에 따라 2년간의 통계공표 기간이 존재하던 지역 내 총생산에 대한 보다 다양한 분석 및 활용이 가능

권역별 분류에 따른 지역통계 생성 및 분석

• 시공간 분포 특성을 활용하여 행정구역별, 권역별로 도시권역의 확장 및 쇠퇴를 추적 관찰

- 현재 행정구역별로 생성되는 지역통계는 분류의 타당성이 낮으며 행정구역과 도시-비도시(urban-rural area)는 불일치 하는 경우가 증가
- 시공간 분포 특성을 활용하여 행정구역별, 권역별로 도시권역의 확장 및 쇠퇴를 추적 관찰하여 실체에 가까운 지역경제 현황을 정책관계자들에게 제시하는 것이 필요

1-9 포스트 코로나 시대, 지방자치단체의 회복력 강화방안 연구

[주제어] 지속가능발전 / 지역사회·공동체

연구책임 이제연 | **연구진** 이소영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다양한 위험에 노출된 사회

- 오늘날 사회는 기후변화나 환경오염, 테러, 대규모 전염병 같은 각종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사람, 조직, 사회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침
- 이번 코로나19와 같은 팬데믹인 경우에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재난이라서 막대한 피해와 함께 대응에도 어려움을 겪음

지역별 회복력 진단과 강화방안 마련 필요

- 우리 사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재난은 국가나 자치단체의 대응 역량, 다시 말해 회복력에 따라 인명 피해와 경제적 손실이 결정되기 때문에 이를 진단하고,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
- 이를 위해 226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회복력 수준을 측정·비교해 보고, 영역별로 핵심 시책을 추진해온 자치단체의 사례분석을 통해 시사점을 도출, 이를 증진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2 연구의 주요 내용

지역회복력 지수 개발과 진단

- 지역회복력을 진단하기 위한 지표를 사회적, 경제적, 도시기반 영역으로 구분하고, 최종 18개의 지표를 도출한 뒤 표준화와 가중치를 적용하여 영역별 회복력 지수와 이를 종합한 지역회복력 지수를 산출하여, 두 시점(2010년, 2020년)간 비교, 분석

사회적, 경제적, 도시기반 영역별 사례분석 및 시사점 도출

- 완주군(사회적 영역), 통영시(경제적 영역), 인천광역시(도시기반 영역)를 대상으로 관련법이나 조례와 같은 제도적 기반, 그리고 추진시책과 프로그램, 추진체계에 대해 살펴보고, 시사점 도출
  - 사회적, 경제적, 도시기반의 영역별로 살펴보았기 때문에 관련 추진체계는 다원화될 수밖에 없는 구조임에도 우리나라에서 회복력에 대한 논의는 재난관리정책차원에서 접근되는 경향성을 가짐
  - 국제사회에서도 회복력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주요하게 제시하고 있는 성공요인은 거버넌스 체계 구축과 운영임
  - 지역회복력에 대한 정책 차원에서 지역회복력 지수 및 진단 결과의 활용은 종합적 측면뿐만 아니라, 사회, 경제, 도시 영역으로 나누어 정책 시사점을 도출할 필요가 있음

3 연구 결론 및 기대효과 / 정책제언

회복력 강화를 위한 기본방향

- 미래위험시대 대응, 회복력 있는 지역 육성
  - 지역회복력 지수를 활용한 지역회복력 측정을 통해 지역사회의 회복력에 대한 인식 및 이해를 제고
  - 계획을 위한 진단기술을 개발하고 대응 전략을 수립

추진 전략

- 사회적 영역에서의 '지역사회의 역량 강화'
  - 구체적인 이행을 위한 전략 마련과 중앙정부 차원의 제도적 지원과 주민역량 강화 사업 등은 여전히 필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의 인적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경제적 영역의 '지속가능한 지역경제구조 조성'
  -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의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정책방향 수립이 중요하며, 경제적 영역의 회복력이 낮은 지역에서는 경기 흐름을 파악함으로써 해당 지역이 필요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함
  - 코로나 이후 지역 고용시장에서 가장 취약한 계층이라 할 수 있는 고연령층과 청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일자리 정책을 지속적으로 마련
- 도시기반 영역의 '미래위험대응 도시인프라 확충'
  - 각종 시설이 재난을 예방하고 피해를 저감할 수 있는 인프라로 확충
  - 안전한 도시환경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고밀·복합개발정책 보다는 저밀도의 도시환경 구축을 위한 도시구조 재편을 고려
  - 관련 부서 및 유관기관 간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것을 제안

1-10 도서지역 연도·연륙교 건립의 사회경제적인 편익 연구

[주제어] 지역발전 / 지역사회·공동체 / 타당성조사

연구책임 김지훈 | **연구진** 김상기, 김성규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기존 연도·연륙교 분석 방식의 검증 필요

- 유발수요 반영 방식의 적정성 검토 필요

연도·연륙교 사업의 직·간접적 효과에 대한 규명 필요

- 접근성(교통) 외 생활환경 및 지역개발에 미치는 직·간접적 영향을 검토
  - 상대적으로 비용이 높은 연도·연륙교 사업에서 기존 도로사업 방식을 적용함에 따라 경제적 타당성 확보가 어려움
  - 기존 도로사업의 편익 외 연도·연륙교의 효과(편익)를 규명하여 타당성조사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연구의 주요 내용

연도·연륙교 유발수요 반영 방식의 신뢰성 검토

- 과거 예측수요와 개통 후 실제 교통량의 비교·분석
  - 기존 연도·연륙교 사업 사례의 교통수요추정 방식을 고찰(기존 통행 가산 방식, 통행발생 원단위 변경 방식, 관광수요 반영 방식)

- 과거 수요추정이 진행되었으며 현재 개통하여 운영 중인 6개 연륙교(석모대교, 장보고대교, 천사대교, 칠산대교, 임자대교, 무의대교)를 대상으로 수요추정 방식 및 수요추정 결과의 예측오차를 비교 검증함

연도·연륙교 개통에 따른 생활환경 변화에 대한 실증 분석

• 연륙화된 도서지역의 사회경제지표 변화 검토

- 인구 및 인구이동(전입/전출), 자동차등록 대수, 업종별 취업자 수를 대상으로 연륙교 개통 이전/이후의 변화를 검토하고 변이할당분석을 통해 검증

• 연륙 효과에 따른 토지효용의 변화 검증

- 연륙에 따른 지가상승률 검토를 위해 시계열분석 및 이중차분모형 분석 수행

연도·연륙교 개통에 따른 도서지역 거주자 만족도 조사

• 연륙교 개통에 따른 생활환경 변화의 체감도 분석

- 강화군과 신안군 거주자를 대상으로 섬 생활 만족도, 소득 및 자산의 변화, 통행의 변화, 관광부문의 변화 등에 대해 설문조사를 수행함(유효샘플 419개)
- 도서(섬) 생활
  - 도서지역 생활 만족/불만족 요인
  - 연도·연륙교 개통 이후 거주지 이동 여부 및 사유
  - 연도·연륙교 개통에 따른 생활여건에 대한 만족도
- 소득부문
  - 연도·연륙교 개통에 따른 소득 변화 및 사유
- 자산부문
  - 보유자산 현황
  - 보유 자산의 가치 변화 및 사유
- 교통부문
  - 연도·연륙교 개통 이전 통행실태(횟수, 비용, 시간)
  - 연도·연륙교 개통 이후 통행실태 변화 및 사유(목적)

- 관광 및 자연환경 부문
  - 관광객 증감 여부
  - 관광객 증가에 따른 만족도 및 사유

3 연구 결론 및 기대효과 / 정책제언

연도·연륙교 사업의 수요추정 방식에 대한 검토 결과 및 정책제언

• 기존 수요추정 방식의 결격한 문제는 도출되지 않았으나, 주말/관광 특성 고려 필요

- 사업의 교통수요 예측 오차 검토결과 과대/과소 예측의 방향성은 특정할 수 없으나, 예측오차의 범위가 일반도로 대비 높은 수준임. 다만 도로 공급 용량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수요예측의 실패로 간주하는데 한계가 있음
- 대부분 유발수요는 기존 통행의 50%를 적용하고 있으며, 본 연구 설문조사 결과 추가 통행횟수 증가분이 약 55%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기존 수요 추정 방식에 결격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일반도로와 달리 평일 교통량 대비 주말 교통량이 높은 특성을 보이는 도로가 많으므로 주말 또는 관광수요를 고려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교통부문 외 생활여건에 변화를 유발

• 인구 및 산업구조에 대한 영향

- 연륙교 개통으로 인구이동의 자율성이 증가하였으며, 특히 20대와 30대의 인구감소를 유발하여 고령화를 유발하는 것으로 분석됨
- 또한, 연륙교 개통 이후 농업, 임업, 어업 부문 취업자수가 감소한 반면, 서비스업 및 도소매업 취업자수가 증가하는 등 지역 내 산업구조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됨

• 토지효용의 변화 유발

- 연륙화된 권역(암태도)이 비연륙화 권역(매화, 고이, 장산, 흑산) 대비 지가의 증가율이 높은 시계열적 특성을 보임
- 천사대교로 연륙화된 암태도 권역이 비연륙 도서(비금-도초, 신의-하의) 대비 지가의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천사대교 개통으로 인한 지가 상승 효과가 약 19.6% 수준으로 검토됨

연륙교 개통에 따른 만족도 수준이 높으나, 환경훼손에 대한 고려가 필요

• 연륙교 개통이 섬 생활에 미치는 만족도는 높은 수준으로 판단

- 섬 생활 중 교통접근성 및 자녀교육에 대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연륙교의 개통이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평가함
- 응답자 대부분이 연륙교 개통이 긍정적 효과가 큰 것으로 응답하였으며, 소득 및 자산의 증대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답변함

• 부문별 효과의 체감도

- 연륙교 개통이 거주지 선택의 자율성을 증진시킬 수 있으나, 인구 유출의 주된 원인으로 볼 수 없음. 다만, 30대의 경우 거주지 이전 비율이 타 연령 대비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소득의 경우 연륙교 개통 이후 약 25%가 증가한 것으로 응답하였으며, 음식점업 및 숙박업, 농어업의 직업군에서 관광객 증가에 따른 매출 증가 등으로 소득이 증가한 것으로 해석됨
- 주택, 토지, 건물 권리 등의 가치가 약 10% 이상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접근성 개선에 따른 이동수단(차량) 구매가 자산의 증가로 이어진 것으로 판단됨
- 연륙교 개통으로 통행시간 및 통행비용이 감소한 것으로 응답하였으며, 개통 이전 대비 추가적인 통행(기존 통행 대비 약 55%)이 증가한 것으로 응답함
- 관광객 증가에도 기여하였으나, 자연환경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에 대한 답변 비율이 타 부문 대비 낮은 바, 연륙교 건설에 따른 환경문제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

후속과제 보완사항

• 신안군(전남) 외 섬 지역에 대한 확장을 통해 연구결과의 보편성 확보 필요

• 통계분석 결과의 유의성 증진을 위한 추가적인 영향요인 고려

• 연도·연륙교의 다양한 효과를 타당성조사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

1-11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한 지역별 B/C 기준 차등화 방안 연구

[주제어] 지역균형발전 / 타당성 조사 / B·C / 지역발전지수

연구책임 송지영 | **연구진** 이민기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 LIMAC 외 타당성 분석을 수행하는 대부분의 기관들은 이미 균형발전의 가치를 타당성 조사에 반영하고 있는 반면 LIMAC은 복수의 지역발전지표를 지역별로 단순 나열하여 서술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을 뿐, 이를 종합점수화 하여 사업추진 의사결정에서 직접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연결하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이에 본 연구에서는 그간 수행해온 연구결과와 지방재정투자사업의 의사결정체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LIMAC에서 수행하는 타당성 조사에서 실질적인 균형발전 분석이 수행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 보다 구체적으로는 지역의 발전정도를 고려하여 지역별 B/C 기준의 차등화 방안을 제시함

2 연구의 주요 내용

- 국가재정투자사업과 지방재정투자사업의 의사결정체계를 비교하고 지방재정투자사업에서의 균형발전 분석을 위해 국가사업과 차별화된 방법론의 개발이 필요함을 제시함
  - 사례분석 결과, B/C의 지역별 격차는 분명 존재하고, 투자사업 추진여부의 판단 역시 지역별 격차가 존재하므로 특정지역에 대한 정책적 고려의 필요성과 당위성은 충분함. 지방재정투자사업의 경우 국가 사업에 비해 B/C가 더 낮은 것으로 분석되는

현상을 확인하였으며, B/C의 지역별 격차 역시 뚜렷하게 나타났음
  - 특히 인구감소지역이나 군지역 등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에서는 통과율이 낮은 문제 뿐 아니라 해당 지역에서 추진하는 재정투자사업 건수 자체가 감소하고 있다는 점 역시 주목할 만한 사항임
- LIMAC의 타당성 조사 과정에서 균형발전의 가치를 분석할 수 있는 실질적인 분석체계와 방법론을 제안함
  - 지역균형발전의 가치를 타당성 조사에 반영하고, 지역별 격차를 고려한 평가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먼저 지역별 수준과 격차의 파악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음
  -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역발전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평가지표를 선정하고, 선정된 지표 간 중요도의 산정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지역발전지수를 산정·지역 간 발전수준의 격차를 규명하였음. 구체적으로 전국 229개 시군구 중 수도권 지역은 거의 대부분 100위 내에 위치한 반면, 비수도권 지역의 경우 36개 시군구를 제외한 총 127개 시군구가 100위 밖의 순위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남. 이러한 지역격차는 비단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뿐만 아니라 지역 내 격차 역시 분명 존재함
- 지역발전지수를 LIMAC의 타당성 조사에서 효과적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지역발전지수가 B/C에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하여 지역별 B/C 기준의 차등화 정도를 제시함
  - 지역별 B/C의 차등화 정도는 앞서 산정한 지역발전지수가 B/C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뒤, 지역별 지역발전지수를 기준으로 B/C를 추정하여 수도권의 B/C 추정치 대비 비수도권의 지역별 B/C 추정치 간의 차이(gap)를 바탕으로 도출함
  - 분석 결과, 수도권과 세종시는 B/C 1.0 기준을 하향 조정할 필요가 없으며, 충청권은 0.85~0.90의 차등화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됨
  - 그외 광역시의 경우 광역시간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으나, 대체로 0.80~0.95로 분석되었고, 전통적으로 낙후지역으로 알려진 강원권과 경상권, 전라권은 0.70~0.7로 도출되어 수도권 대비 B/C 기준의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더불어 본 연구에서는 지역별 B/C 기준의 차등화 정도에 대한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내외 유사 사례와 비교하여 그 적정성 여부를 간접적으로나마 검증함

- KDI의 경우 강원, 전북, 전남, 경북과 같은 전통적으로 수도권 대비 발전정도가 낮은 지역의 사업에 대해 평균적으로 약 25%대의 가점을 주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 직접 편익에 편익의 증가분을 40.6~47.7%로 반영하고 있음을 확인함
- KDI와 일본의 사례를 감안할 때, 본 연구에서 제안한 낙후지역(강원, 전북, 전남, 경북)의 B/C 기준을 0.70~0.75로 조정하는 것은 무리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제안된 지역별 B/C의 차등화를 실제 LIMAC의 타당성 조사에 적용가능성을 검토한 결과, B/C 기준 차등화로 기존에 경제적 타당성이 없다고 판정된 12개의 사업이 해당 지역의 발전정도를 고려할 때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3 연구 결론 및 기대효과 / 정책제언

• 본 연구는 LIMAC 타당성 조사 및 지방재정투자심사의 의사결정과정에서 균형발전의 가치를 반영할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을 모색하였다는 데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음

• 특히 '경제성'으로 표현되는 B/C의 기준을 지방의 본질적인 불리함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방법론을 여러 가지 제약하에서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했다는데 기여가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 제안한 B/C차등화 방식은 그 이론적 근거가 미약하고 제안한 B/C의 차등정도를 분석·도출하는 과정 상 분명한 한계가 존재함

- 이는 향후 지역발전지수의 고도화 및 B/C의 차등화에 있어 지역뿐만 아니라 사업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등의 후속과제가 필요함을 의미함
- 본 연구에서 제안한 'B/C의 차등화 방안'은 일반적인 타당성 조사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균형발전의 가치를 LIMAC의 타당성 조사에 제한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일종의 시도이며, 특히 사회적 가치 규범에 대해서는 관념적인 의견대립이 상존하기 때문에 초기 단계의 실험적 연구라 할 수 있음

2. 행정안전부 정책연구과제



자치분권제도

1) 시군구 특례제도 지정기준 구체화 연구 065
(유수동, 전대욱)

2) 지방자치단체 협력 활성화를 위한 합동평가지표 개발 069
(주희진, 박현욱)

3) 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인감 및 서명확인제도 개선 연구 073
(김건위, 고경훈)

지방행정혁신

4)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주민'의 범위 재정립 075
(김지수, 최지민)

5) 특별자치시·도 운영방향 연구 079
(최지민, 박해육, 김지수)

지방재정경제

6) 지역 간 균형발전 지원을 위한 재정체계 개선방안 084
(김성주, 이서희)

7) 지방자치-교육자치 연계 강화방안 088
(김진, 김성주)

8) 주소정보 고도화를 위한 재정 협력 체계 구축 방안 연구 092
(이서희, 유보람)

지역균형발전

9) 지역경제 정책 수립을 위한 도시통계 개선 및 활용방안 095
(여효성, 윤소연, 이원도)

10) 접경지역 특화발전방안 연구 098
(이소영, 김민영)

11) 자전거 관련 산업 실태조사 연구: 제도 및 시책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102
(김현호, 김도형, 김민영)

2-1 시군구 특례제도 지정기준 구체화 연구

[주제어] 지방분권 / 지방자치제도 / 지역발전

연구책임 유수동 | 연구진 전대욱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지역맞춤형 시군구 특례제도 본격 운영에 따른 지정기준 구체화 필요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2022.01 시행)으로 시·군·구에 특례를 두는 '시군구 특례제도' 도입
- '실질적인 행정수요', '국가균형발전', '지방소멸위기' 등 지정기준별 특성을 명확히 하여 명료성과 구체성 확보 필요

2 연구의 주요 내용

지역맞춤형 시군구 특례제도의 입법취지와 차별성

-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적·능률적 수행 및 지방의 균형있는 발전 도모
  - 지방자치단체의 현실적인 여건과 개별적인 역량을 고려하여 지역맞춤형 특례와 권한 부여
  - 국가균형발전 및 지방소멸위기를 고려하여 지역특화발전을 위한 특례를 부여하는 새로운 방식의 제도
  - 실질적인 자치권을 확대시킴으로써 주민의 편익을 증대시키기 위한 제도

지역맞춤형 시군구 특례제도 지정기준 구체화

• 지역특성을 고려한 실질적 행정수요

- 자연적 요소, 사회적 요소, 문화적 요소, 인구적 요소

• 국가균형발전

- 지역적 여건에 입각한 발전전략을 중심으로 지역역량 제고, 지역격차 해소, 인접 시·군·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등 상생발전,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등

• 지방소멸위기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상 인구감소지역으로서 지역적 여건에 입각한 발전전략을 중심으로 인구활력 증진, 생활여건 조성, 공간혁신 창출, 지역 인지도 제고 등

지역맞춤형 시군구 특례제도 심의기준 구체화

• 지정기준 충족 여부(하나 이상)

- '실질적인 행정수요'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해당 시·군·구의 자연적·사회적·문화적·인구적 특성 등에 따른 행정수요가 분명히 존재하는지', '실질적인 행정수요가 지속성을 띠는지'를 심의할 수 있어야 함
- '국가균형발전'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자립적 발전전략이 지역 여건에 입각하였는지', '발전전략 이행을 위해 특례가 필요한지', '지역경제 활성화 등 발전격차 해소에 기여할 수 있는지', '인접 시·군·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심의할 수 있어야 함
- '지방소멸위기'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상 인구감소지역인지', '지역 여건에 입각한 자립적인 발전전략인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및 관계 법령상 시책·지원과 중복되지 않는지 여부', '인구활력 증진 등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지'를 심의할 수 있어야 함

• 특례 내용의 실현가능성과 국가의 기본정책 방향과의 합치 여부

- '실현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책임성 있는 지역발전전략을 수립하였는지', '특례의 실현가능성', '목적 달성에 더 유리한 다른 수단이 존재하는지'를 심의할 수 있어야 함

- '국가 기본정책 방향과의 합치'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지역맞춤형 시군구 특례제도 취지 부합', '관련 국정과제 추진 방향 등 정책기조에 부합하는지', '관련 법 체계상 충돌 가능성'을 심의하여야 함

• 주민편익 등 기타 사항

- '특례 부여로 주민 편익 증진이 가능한지', '사회통념, 기타 사회질서와 부합하는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위해 노력하였는지'에 대해 심의할 필요가 있음

3 연구 결론 및 기대효과 / 정책제언

지역맞춤형 시군구 특례제도 발전방안

• 지역특성을 고려한 특례 발굴 방안

- 지역특화발전과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과제들을 발굴함으로써 정책 기획 역량을 강화하고, 제도 개선을 이끌어낼 수 있는 방향으로 특례를 발굴해야 함
- 시·군·구가 특례를 발굴할 때, 지역 내 행정수요를 우선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필요함

• 시·군·구의 중장기 발전방안과 연계된 특례 발굴 방안

- 행정수요의 특수성을 바탕으로 지역 정체성을 발굴함과 동시에 이와 연계하여 특례 발굴이 전략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시·군·구의 비전과 중장기 발전방안, 시정방향 등을 고려하여 기존 전략들을 달성하는데있어 도움이 되는 특례(사무)를 발굴해야 함

• 시군구 특례제도 컨설팅 활성화 방안

- 행정안전부가 추진하는 지역맞춤형 시군구 특례 집중 컨설팅에 필수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필요함
- 시·군·구가 개별적으로 운영하는 컨설팅을 전문화·체계화시킬 필요가 있음

• 시군구 특례제도를 통한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권한 부여

- 시·군·구에 권한 및 사무가 이양되면 재정권한 역시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행정·재정적 지원과 시군구 특례제도는 반드시 연계되어야 함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행정·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질 때는 시군구 특례제도를 활용한 권한 및 사무의 이양이 동시에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시·군·구 특례 발굴을 위한 범정부 지원체계 구축

- 지역맞춤형 시군구 특례제도가 활성화되고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범정부 차원의 지원체계가 구축되어야 함
- 이러한 지원체계는 시·군·구가 특례를 발굴하는 과정과 특례 부여로 인해 법령 또는 조례의 개정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 작동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 할 수 있음

2-2 지방자치단체 협력 활성화를 위한 합동평가지표 개발

[주제어] 지방자치단체 연계·협력 /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지표 / 지방자치단체 평가

연구책임 주희진 | **연구진** 박현욱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업무성과 점검을 위한 평가 지속적 확대

• 지방자치단체 평가는 그동안의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성과 향상 기여를 목적으로 함

• 매년 실시되는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는 2009년부터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통합하여 실시

새로운 행정변화에의 능동적 대처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간 연계·협력 필요성 확대

• 중앙집권적·성장중심의 경제개발방식 채택으로 극심한 지역불균형 문제 발생 및 광역행정의 중요성 강조

- 행정수요의 증가에 대응하고 지방재정의 비용 부담 감소를 위한 지자체 간 적극적 협력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으나 여전히 미흡한 수준

•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제도는 지방자치법을 통하여 명시되고 있으며, 2020년 12월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에서는 지자체 간 협력지원 규정 신설 등 지자체 간 협력을 중시됨

2 연구의 주요 내용

기존 지방자치단체 등 간 연계·협력 평가체계의 문제점

- 「지방자치단체 협력·갈등 관리 업무편람」, 「협업 우수사례집」, 「반갑다 협업」 등 유사·중복 평가 다수에 따라 피평가자의 피로도 가중
- 행위주체별 구분 없이 민-관, 관-관 형태 혼재하고 있으며, 사업발굴 과정·문제해결 방식 등에 있어서 민-관과 관-관 협력은 차이가 존재하므로 별도의 시각 필요
- 성과 위주의 우수사례 제출 및 평가가 이루어짐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현안이 발생하는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 평가체계

지방자치단체 간 연계·협력 평가지표의 개발방향

- '연계·협력'에 대한 개념 정의 및 구체적 범위 제시
- 지역적 여건 반영 및 연계·협력의 사업적 특성 고려
- 성과 측정의 어려움 등을 고려하여 성과보다는 과정평가에 초점
- 장기적 관점에서 지속적인 연계·협력이 가능할 수 있도록 지자체의 협력 기반 마련 노력 유도

지방자치단체 간 연계·협력 평가지표 도출

- 지방자치단체 간 연계·협력의 개념
  - 지방자치단체 간 연계·협력이란, "①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②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③자원과 노력을 투입하여 ④지역현안 문제를 해결하는 등 새로운 공공가치를 창출하는 행위"라고 정의할 수 있음
- 최종 지표 도출
  - 계획수립의 적절성 (사업착수단계): 현황·여건분석, 주민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 지자체 노력도 (사업진행단계): 협조체제 구축노력, 연계·협력의 주 책임 여부, 조직 내 관심도, 주민관심도
  - 효과성(사업완료단계): 문제해결 기여정도, 타 지자체로의 확산 가능성
  - 현장대응성(가점): 사업의 난이도, 갈등조정장치의 활용 여부

3 연구 결론 및 기대효과 / 정책제언

지방자치단체 간 연계·협력 합동평가지표 도입 가능성 검토

- 대부분의 제출된 평가내용에서 신규 평가지표 항목 반영 가능하여, 평가자료 작성을 위한 별도의 추가적 노력 불필요 및 평가 일원화 가능
  - 다양한 경로로 유사·중복하여 이루어지던 지자체 간 협력사업 평가를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로 일원화 가능
  - 현재와 유사한 수준의 평가내용으로 피평가자의 평가자료 작성을 위한 추가적인 부담 최소화
- 다만, 현재의 대부분의 평가자료는 '과정'보다는 '성과'에 초점을 둘 수 있도록 적극적 안내 필요
  - 사업수행의 과정에 보다 높은 가중치(총 70점)를 부여함으로써 피평가자로 하여금 평가자료가 성과보다는 과정에 보다 초점을 둘 수 있도록 유도
  - 사업의 설계(연계·협력의 필요성 검토)와 사업진행과정에 대한 초점으로 타 지자체에 벤치마킹 할 수 있는 방안 위주로 평가자료 작성 안내 필요

지방자치단체 간 연계·협력 사업 특성에 따른 평가사례의 중복 문제에 대한 대처

- 연계·협력은 그 속성상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수의 행위주체(지방자치단체)가 포함되기 때문에 두 개 이상의 지자체가 같은 사례를 평가사례로 제출할 가능성이 있음

- 본 지표는 과정평가와 성과평가로 이루어져 있으며, 특히 과정평가(계획수립의 적절성, 지자체 노력도)에 더 높은 가중치를 부여하고 있음

• 따라서 만약 두 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같은 사례를 평가사례로 선정하여도 이를 추진하는 초기단계와 수행과정은 각 지자체별로 상이할 것임

- 계획수립 단계는 연계·협력이 이루어지기 전 단계로서 지역문제에 대한 객관적이고 종합적인 분석이 이루어지는지 여부가 평가대상이므로 동일한 사례라 할지라도 각 지방자치단체의 상황에 따라 평가내용을 달라질 수 있음
- 지자체 노력도에서는 공동의 협의체를 구성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타 지자체와의 협의체 구성을 위한 내부적 노력 정도, 기관장의 관심 및 주민에게의 관심 유발 노력 등은 각 지자체마다 다를 것임

2-3 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인감 및 서명확인제도 개선 연구

[주제어] 지방분권 / 주민등록

연구책임 김건위 | **연구진** 고경훈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제4차 산업혁명시대 도래

• 디지털 환경변화에 따라서 인감제도는 물론 국가 증명제도가 디지털화하는 추세에 따른 변화 대응 필요

인감증명제도의 변화대응 필요

•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일본, 대만에서만 인감증명제도가 사용되고 있지만, 이러한 제도가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인감증명제도 개편이 요구

연구 목적

• 이 연구는 인감 및 서명확인제도의 재설계를 위한 기초자료 제시가 목적

2 연구의 주요 내용

국민대상 인감, 본인서명, 전자본인서명 문제점 도출 : 방문에 따른 불편함

• 인감증명제도 관련 불편사항을 조사한 결과

- 방문에 따른 시간·비용 발생(4,171명, 39.5%)이 가장 높게 나타남. 일과 후(18시) 발급이용 불가(2,945명, 27.9%)와 행정기관·민간기업 등에서 과도한 인감증명서 제출 요구(2,187명, 207%) 순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 및 사용하지 않는 이유

- 수요기관(공공기관, 등기소, 은행 등)에서 인감증명서만 요구(4,584명, 43.4%)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알지 못함(3,480명, 33.0%)이 높게 나타남
- 반대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이용이 불편함(1,081명, 10.3%)과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대리발급이 안됨(1,333명, 12.6%)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 전자본인서명확인서(무료)를 발급 및 사용하지 않는 이유

- 알지 못함(4,793명, 45.4%)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제출받는 수요처가 적음(3,307명, 31.4%)의 순

인감, 본인서명, 전자본인서명의 개편방향: 제도정비와 디지털 비대면

• 인감증명제도 개선 필요사항을 조사한 결과

- 제도 정비를 통한 인감증명 제출요구 사무 최소화(5,435명, 51.5%)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디지털 비대면 발급(정부24 등) 및 수요처에 온라인 제출(2,853명, 27.1%)의 순

3 연구 결론 및 기대효과 / 정책제언

기본방향

• 장기적 인감증명제도의 폐지와 본인서명확인제도의 활성화

- 초기: 제도 정비 및 법률 개정 검토
- 중기: 다양한 본인의사 확인 서비스를 통한 인감 대체가능성 검토
- 장기: 인감증명제도 폐지 및 본인서명제도 확산

2-4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주민'의 범위 재정립

[주제어] 지방분권 / 인구감소

연구책임 김지수 | **연구진** 최지민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연구배경 및 목적

• 국민의 라이프스타일 변화 등 행정환경변화에 따라 '주민' 범위 재정립 필요여부 검토 및 대안모색이 필요

2 연구의 주요 내용

법률 상 '주민' 범위 규정의 문제점

• 법률 상 주민의 범위는「주민등록법」상 주소(이중주소금지)를 근거로 정의

- 국민의 라이프스타일 변화에 따라 2개 이상의 거주지를 두고 생활하는 주민의 경우 행정수요 측정 오류가 발생됨에 따라 주민범위에 대한 근본적인 재정립이 필요

정책대상자 범위에 대한 추정

• 주소-거소 불일치 인구에 대한 측정 방법의 한계와 추정규모

- 주소-거소 불일치 집단에 대한 현황조사는 공식적 집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예: 혁신도시 이주 공공기관 직원 중 2개 주소를 가질 수 있는 자, 타 지역 대학에 진학하여 거주하고 있으나 주소를 이전하지 않은 자, 5도2촌 라이프 스타일로 2개 지역에서 거주하는 자 등)

- 행정적 이유로 집계되고 있는 현황자료를 통해 최대치 추정을 한 결과 2개 이상의 주소를 활용할 가능성이 있는 집단은 전 국민의 약 1.67%로 예상

주요국 '주민'의 범위와 권리, 의무, 부주소제도 운영사례

- 영국의 경우, 부주소를 두는 주민은 대도시 밀집지역에 집중되어 있으며, 런던의 경우 인구 1천명 당 부주소를 가지는 주민이 185명으로 런던 외 도시 전체 평균 31명보다 많음
  - 주소에 대한 등록제도를 두고 있지 않지만, 센서스 조사를 통해 정기적으로 부주소를 두는 인구를 집계함
- 프랑스의 경우, 2019년 기준 개인 소유의 이차거주지는 약 2백만개로, 이 중 2/3은 60세 이상 가구의 소유이며 전체의 60%는 해안가 등 휴양지에 위치함
- 독일의 경우, 2021년 기준 약 121.9만명(전체 인구의 약 1.47%)이 부주소를 가지고 있으며, 지역에 따라 부주소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기도 함
  - 부주소에 대한 세금 부과시 부주소 이용자 수가 급격히 감소되는 사례가 발견됨
- 주요국 주민의 범위와 권리, 의무는 다음과 같이 편차가 있음

| 표 | 주요국 주민의 범위와 권리·의무

국가	주민범위/등록제도	권리	의무
미국	- 개념 정의가 없는 것이 일반적 - 등록제도 없음	- 참정권x - 주민참여권x - 서비스수혜권o (납세조건부)	- 납세의무
영국	- 개념 정의가 없는 것이 일반적 - 등록제도 없음	- 참정권x - 주민참여권x - 서비스수혜권o (납세조건부)	- 납세의무
독일	- 법률상 주민의 개념을 정의 (주주소-부주소 개념 명시) - 등록제도가 있음(주주소-부주소 구분 없이 신고의무 부여)	- 참정권x - 주민참여권o - 서비스수혜권o (납세조건부)	- 있음 - 부주소에 대한 세금부과 가능
프랑스	- 법률상 주민의 개념 정의 (주소기반) - 등록제도 없음(단, 의무교육기간 자녀가 있을 경우는 등록의무 부여)	- 참정권x - 주민참여권△ - 서비스수혜권o (납세조건부)	- 납세의무
일본	- 법률 상 주소에 기반한 주민범위 규정(이중주소 금지) - 등록제도 운영	- 참정권x - 주민참여권x - 서비스수혜권o (납세조건부)	- 납세의무

3 연구 결론 및 기대효과 / 정책제언

연구결과와 제언

- 제도 도입의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므로, 그에 대한 정량적 분석을 위해 통계 자료 축적이 필요
  - 해외사례 등을 참고할 때 제도 도입시 대도시로의 집중 현상이 발생될 가능성이 있어 인구소멸지역의 인구증가를 위한 대안이 되기는 어려우나, 정확한 행정수요 측정을 통해 정부의 행정서비스 제공 품질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 향후 정밀만 분석을 바탕으로 제도 도입 여부를 재검토하는 것이 필요
  -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 법제도의 현행유지 및 단계적 확대가 적절하다는 것이 일치된 의견임
  - 만약 '주민' 범위 재정립에 대한 법제화를 할 경우, 주주소에 대해서는 현재와 동일하게 신고의 의무를 부여하되, 부주소에 대해서는 신고제를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
  - 주주소-부주소의 권리는 납세의 의무이행 범위와 관련하여 단지 행정서비스 수혜권만을 부여할지 아니면 그에 상응하는 주민참여의 권리를 인정할 지 판단해야 할 필요가 있음
  - 부주소에 대한 세금부과에 대해서는 지역의 맥락에 따른 전략적 선택이 가능하도록 유연한 법제화가 필요함
  - '주소'에 관한 법을 개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생활인구 등에 대한 측정을 통해 실제 행정수요를 측정하고, 이를 제도에 반영하기 위한 대안의 모색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2-5 특별자치시·도 운영방향 연구

[주제어] 지방자치제도 / 행정체제 / 중앙-지방 관계

연구책임 최지민 | **연구진** 박해육, 김지수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다수의 "특별자치" 개념의 등장과 개념 재검토 필요

- 윤석열 정부에서 국가균형발전 및 자치분권 선도를 위해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이 공식화됨
- 행정체제 특수성을 고려해서 "특별자치" 명칭을 부여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법률적으로 특례사항을 두는 것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지역에 비해 확실한 차별성이 존재해야 한다는 것을 뜻함
- 그러나 현행법 상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체제의 특수성" 의 개념은 법률상 의미가 명시적으로 정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방자치법 제197조 제2항의 특례부여의 조건으로 제시되고 있음

"행정체제의 특수성"의 개념재정립에 따른 운영방향의 일관성 확보필요

- 행정체제의 특수성에 대한 개념의 재정립 이후, 특별자치의 목적과 수준에 따라 운영범위와 수단을 정교하게 설정하는 것이 필요함

2 연구의 주요 내용

1. 특별자치시·도 논의분석

• 특별자치적용 논거분석

- 일본(홋카이도), 중국(홍콩), 영국(스코틀랜드), 포르투갈(마데이라) 등 ▲고유한 원인 측면과 ▲특례를 통해 달성할 결과, ▲특별자치 원인과 결과를 매개해 줄 수단의 3차원으로 구분됨

• 본 연구의 검토방향 설정

- (검토방향 1) 지방자치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행정체제의 특수성"을 특성(속성, 방식)에 따라 다음의 3가지 세부 개념으로 구분하고 이를 판단할 세부기준을 다음과 같이 설정함
- (검토방향 2) 특수성 요건의 우선순위를 차등화하기 위해 AHP 기법을 적용
- (검토방향 3) 특별자치시·도의 특수성의 수준은 기존의 지방분권의 수준별 논의와 연계하여 논리적 연계성을 확보하고자 함

2. 특별자치시도 운영사례 진단

• 진단지표의 개발과 유형화

- 관할구역의 특수성(지리적 특수성·지위적 특수성·제도적 특수성), 행정계층의 특수성, 기능배분의 특수성을 한축으로 하고 해당 조건이 핵심 혹은 선택적 요건인지를 조합하면 세 가지 유형으로 도출

| 표 | 행정체제의 특수성의 진단지표 개발

세부개념	세부항목	개념	특수성 판단기준
관할구역의 특수성	지리적 특수성	구분되는 독특한 지리적, 물리적 경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 도서지역 • 접경지역
	지위적 특수성	타 지역과 구분된 지역의 위상과 지위가 존재하는지 여부	• 수도 • 행정수도
		관할구역경계조정에 다른 광역지위가 부여되었는지 여부	• 기초와 광역의 관할경계 일치여부
	제도적 특수성	경로의존성	• 국가공약사업 및 장기간의 추진시도
		파급효과	• 가시적 성과창출 • 제도의 파급정도
행정계층의 특수성	행정구역의 구조 및 운영의 특수성	행정구역의 폐지 및 통합	• 기존 기초행정구역의 변화 여부
		하부행정기관의 조정	• 하부행정기관의 조정여부
기능배분의 특수성	기능의 특수성	종전의 수행되지 않은 국가의 지방권한이양(특례영역)과, 기존에 수행하고 있으나 권한의 실질적 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한 부여 (실행수단)	• 영역특수적 특례의 부여 (특례권한) • 출범목적 달성위한 운영권한부여(특례실행수단)
	배분방식의 특수성	특례사무의 이양과 확대를 법적으로 부여받고 있는지 여부 (국가와 지방간 기능조정)	• 특례확대 방식의 포괄성 (포괄위임 > 개별위임> 위임없음)
		행정계층 변화로 인해 광역-기초사무를 통합수행하는지 여부 (광역과 기초 간 기능조정)	• 광역과 기초기능의 동시수행

| 표 | 행정체제의 특수성 수준의 진단 및 유형

세부개념	세부항목	우선순위	특별자치시·도 도입가능		
관할구역의 특수성	지리적 특수성	1	O	O	O
	지위적 특수성	3	O	O	O
	제도적 특수성	5		O	O
행정계층의 특수성	행정구역의 구조 및 운영의 특수성	6			O
기능배분의 특수성	특례 기능의 특수성	2	O	O	O
	배분방식의 특수성	4		O	O
행정체제 특수성 수준			낮음 1유형	보통 2유형	높음 3유형

• 제주와 세종에 적용

- 제주는 필수요건 3개와 선택요건 1개를 충족하는 2유형의 특수성 수준에 해당함
- 세종은 제한적인 1 유형의 특수성 수준에 해당함

3. 특별자치시도 운영 재정립 방향

• 특별자치시·도 제도의 문제점 진단을 통해 “제도의 구체성 및 예측가능성 확보”를 재정 다음의 3가지 개선과제를 설정함

- (과제 1) 법상 행정체제의 특수성 개념 규정
- (과제 2) 행정체제의 특수성 판단절차의 도입: 요건충족에 대한 사전검토를 통한 특별자치시·도 전환의 사회적 비용 절감
- (과제 3) 특별자치시·도의 통합관리체계구축: 특수성의 수준과 부여된 특례와의 적정성 확보관리체계의 마련 및 특례성과의 평가

3 연구 결론 및 기대효과 / 정책제언

향후 제도도입 검토지역

• 법상 “행정체제의 특수성” 개념의 모호성을 개선하기 위해, 최대한 근거법에 세부 조건을 규정하여 의원입법을 통해 지방자치제도에 편입되고 있는 특별자치제도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전절차를 거치는 것이 필요함

현행제도 운영 지역

• 특별자치 조성 또한 전술한 특성한 수준과 범위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유형화하여 관리

- 1유형(지방자치강화형)의 경우 국가의 경우 특별자치단체를 지원하고 특별자치단체의 경우 자치단체 별로 차등화되고 탄력적인 행정기능을 수행할 것이 요구됨. 조직 및 인력의 주요 운영 방식은 환경·복지 지원에 국한됨
- 2유형(광역지방정부형)의 경우 국가 수준에서 인력 및 시설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특별자치단체의 경우 자기 책임성에 근거하여 자치권을 행사하는 것이 필요함

2-6 지역 간 균형발전 지원을 위한 재정체계 개선방안

[주제어] 지역 간 균형 / 균형발전 지원 / 재정체계 개선

연구책임 김성주 | **연구진** 이서희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지역 균형발전 관점에서 2022년 현재 지방분권의 한계에 따른 개선 필요

- 2022년 현재 지방분권은 지역 간 균형발전차원에서 한계가 있음
  - 즉, 지역균형발전의 뒷받침을 위한 지방재정제도의 마련이 달성되지 못하였다는 한계가 지적됨
- 이에 향후 세 가지 정도의 방향성을 가지고 지방분권의 추진이 필요함
  - 첫째, 지자체의 자율적·맞춤형 발전을 위해 지방세 확충과 사무이양의 지속, 둘째,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재정운영체계 개편, 셋째, 지자체 형태 다변화에 따른 균형장치 고려가 필요함

지방세 확충, 지역 간 불균형 개선에 초점을 두고 연구 수행

- 본 연구는 세 가지 방향성 중 특히 첫 번째와 두 번째 내용에 중심을 두고 수행되었음
- 즉, 지방세 확충방안 제시와 함께 동시에 수반될 수 있는 지역 간 불균형을 개선하기 위한 재정조정제도나 운영체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데에 목적이 있음

2 연구의 주요 내용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 및 지역 간 불균형도 분석

- 강력한 재정분권 추진에도 재정력은 오히려 하락함
  - 재정분권이 강력하게 추진된 2017년 이후 재정력 지표인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 재정력지수 모두 하락함
  - 2022년 (당초)예산기준 재정자립도 50% 미만 지자체가 230개로 전체의 94.7%, 30% 미만이 174개(71.6%)로 나타남
  - 30% 미만의 재정자립도 지자체 수가 2012년 157개→ 2015년 165개→ 2020년 170개로 점차 증가하고 있음
- 특히, 기초지자체의 재정력 격차가 심화됨
  - 광역지자체의 경우는 2017년 대비 2022년도에 불균형도가 개선되었고, 기초지자체의 경우는 불균형도가 심화된 것으로 나타남
  - 광역과 기초 모두 2017년부터 각 연도별로 불균형도 지수가 등락을 반복하고 있는 가운데 기초의 경우 전반적으로 불균형도가 상승함

지방교부세제도의 기능 분석

- 지방교부세제도 기능이 약화되고 있음
  - 2022년 현재 내국세의 19.24%로 설정되어 있는 정률분 지방교부세 재원의 규모는 보통교부세를 교부받아야 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족액을 모두 합한 금액보다 그간 작았음

| 표 | 보통교부세와 지방자치단체 재정부족액의 관계

(단위: 조 원)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보통교부세 총액	23.2	25.8	29.2	31.4	31.9	32.1	33.2	37.6	42.5	45.8	45.0	42.9	53.0
재정부족액 총액	27.3	28.3	30.6	34.3	35.4	35.6	35.8	38.5	44.7	53.0	53.9	58.1	61.7
조정률	0.824	0.882	0.925	0.890	0.873	0.867	0.897	0.941	0.915	0.864	0.836	0.739	0.860
조정률 100%인 경우 추가 재원	4.8	3.3	2.3	3.8	4.5	4.7	3.7	2.3	3.8	7.2	8.9	15.2	8.7

자료: 행정안전부, 「지방교부세 산정해설」, 각 연도.

- 주목할 점은 최근 여건 변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부족재원을 이전재원(보통교부세)으로 확보하는 그간의 지방세입 시스템을 그대로 유지하기 쉽지 않다는 것임
  - 저성장에 따른 국세의 약화, 재정분권과 연계된 국세의 지방세 이양 등으로 말미암아 지방교부세 재원규모가 꾸준히 줄었고, 향후에도 이와 같은 양상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됨

3 연구 결론 및 기대효과 / 정책제언

지방자치단체 자체재원의 확충 필요

- 지방소비세 및 지방소득세의 인상이 필요한데, 지자체가 책임성과 자율성을 갖고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방재정의 근간을 자체재원 중심의 체계로 바꾸어주어야 함
  - 일본의 경우도 지방소비세가 소득과세인 개인주민세나 법인二稅, 자산과세(고정자산세)에 비하여 지역 간 편재성이 적은 것으로 알려져 있음
- 지방세 신세목 도입의 검토가 필요함
  - 환경세나 지방복지세, 지방법인세, (가칭)로봇세, 반려견세 등 신세목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지역 간 균형발전 지원을 위한 새로운 제도의 모색

- (방안 1) 기존의 제도 내에서 지역균형발전기금을 설치하는 방안임
  - 지역상생발전기금의 재정지원계정, 전환사업 보전계정, 지방소멸 대응기금을 묶어 (가칭)지역균형발전기금으로 정비하여 지역 간 균형발전을 지원하는 장치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을 것임
- (방안 2) 새로운 제도를 모색하여 추진하는 방안임
  - 현행 보통교부세는 재정분권이 강화될수록 수평적 불균형 완화 기능에 한계를 드러낼 수 있으므로 기준재정수요 산정시 보정수요액을 제외하고 [기초수요액과 수요자체노력]만으로 한정, 각 지역의 표준적 행정수요를 뒷받침하는 재정보장기능만을 수행하도록 개혁함
  - 지역 간 재정형평화 기능과 관련된 보정수요액은 분리, 지역균형발전기금에 포함할 필요가 있을 것임

2-7 지방자치-교육자치 연계 강화방안

[주제어] 지방교육자치 / 연계·협력

연구책임 김진 | **연구진** 김성주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지방자치-교육자치 제도 연계 강화 방안 모색의 필요성

- '일반자치-교육자치 간 관계'는 지방자치단체와 교육계 간 첨예한 논쟁으로 자리 잡았음
  - 동일한 지방자치단체 내에서 교육자치가 이루어지고 있어 행정 및 재정적 비효율성이 증가하고 있다는 의견과, 교육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더욱 중요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립하고 있음
  - 최근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학령인구의 급격한 감소가 예상되는 반면, 내국세의 일정 비율로 충당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관한 학계의 논의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연구 목적

- 법적, 정책적, 환경적 필요성에 기반하여 지방자치-교육자치의 연계 및 협력 강화가 요구되는 바,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음
  - 첫째, 지방자치와 교육자치가 분리 운영됨에 따라 발생하는 행·재정적 문제점을 적시하고, 지방자치와 교육자치의 연계·협력의 실익과 논거를 제시함
  - 둘째, 이러한 논리를 통해 미시적인 수준에서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이 연계하고 협력하여 행정 및 재정의 효율성과 교육의 전문성 등을 통합적으로 제고할 수 있는 구체적 사업· 사무 · 분야 등을 발굴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연구의 궁극적 목적으로 함

2 연구의 주요 내용

지방자치-교육자치 연계 실태

- 법적 연계·협력 실태
  - 「교육자치법」 및 개별법 상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간 연계 및 협력의 법적 근거 존재
- 제도적 연계·협력 실태
  - 조직 및 인력 분야에 있어 교육협력관제도 존재하며 「교육자치법」상 의무사항인 '지방교육행정협의회'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시행령상 임의 기관인 '지방교육정책협의회' 제도 존재
- 재정적 연계·협력 실태
  -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자치에 대한 권한은 없지만 법적 근거에 기반하여 합법적으로 교육에 대한 지원과 투자를 시행하며,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로부터의 교육 지원이 이루어지는 비법정이전수입과 교육경비보조 제도는 다른 국가에서 찾아보기 힘든 제도임

지방자치-교육자치 분리 운영에 따른 행정 및 재정적 문제점

- 행정적 문제점
  - 동일한 지역 내에서 하나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두 개의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이 존재하여 정책 대상자가 필요한 서비스를 받지 못하거나 중복되는 비효율성 존재
- 재정적 문제점
  - 학령인구 감소라는 교육 관련 핵심적인 환경 변화가 지방교육재정 규모에 전혀 반영되지않아 연성예산제약(soft budget constraint)과 관련한 교육행정기관 자체적인 재정 책임성의 문제와 지방자치단체 재정 경직성의 문제 존재

언론 보도 분석 결과

• 갈등 내용 분석 결과

- 교육재정, 교육감 선거 제도, 도서관 운영, 학교시설(재개발 및 재건축 갈등, 학교시설 복합화 관련 등), 돌봄 관련 갈등 사례들이 추출되었음. 각각의 사례들을 분석한 결과 현재 지방자치-교육자치 분리 운영과 연계·협력 실제 사례에서의 갈등 현황을 다양하게 파악

사례 및 인식 조사 분석 결과

• 연계·협력 가능 사업 후보군 도출

- 1) 교육행정협의회 관련 조례 상의 협의사항 검토, 2) 실제 교육청과 광역 지방자치단체 한 곳을 선정하여 현재 분리·운영하고 있는 교육 관련 사업 계획서 전수 조사, 3) 2021년, 2022년 자치분권위원회 지방자치-교육자치 연계 우수 사례 수상 사업 정리, 4) 전문가 협의회 및 지방자치단체 교육 담당 공무원 인식조사 등을 종합하여 연계·협력 가능 사업 후보군 도출

3 연구 결론 및 기대효과 / 정책제언

연구 기대 효과

• 교육자치 전문성과 독립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계·협력 사업을 진행하여 지역 주민의 만족도와 체감도 제고

지방자치-교육자치 연계·협력 가능 사무 제안

• 연계·협력 가능 사업 후보군을 토대로 연구 결과가 적용되는 시간적 범위와 실현 가능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미시적 관점에서 연계·협력 가능 사무 제안

- 단기적으로 1) 학교 교육 분야에서 우수 인재 양성 지원, 학습 능력 향상 지원 등, 2) 진로 교육 분야에서 진로 체험 프로그램 지원, 3) 교육 환경 분야에서 통학로 정비, 통학원 버스 노선 조정, 지역주민과의 공동 시설 및 공간 조성 등, 4) 교육 복지 분야에서는 학업 중단 청소년 지원 및 저소득층, 다문화 가정 지원 등을 연계·협력할 경우 행정 및 재정 비효율성을 줄이고 정책 목적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봄
- 중·장기적으로 교육복지 분야, 평생교육 및 진로, 학교 교육, 교육 환경 분야를 들 수 있음

중·장기적 사무 실천 방안 제시

• 사업별 공동협의체 구성

- 비중 있는 개별 교육 사업에 대해 지자체와 교육청 등이 공동 협의체를 구성, 개별 사업의 계획 단계부터 집행, 환류까지 협조하여 추진하는 방안 제시(사례: 경남 고성군 진로교육지원센터, 경기 안양 인재육성재단 등)

• 업무 전반 공동협의체 구성

- 지자체와 교육청 간 중간조직을 설치하여 교육 관련 사업 전반을 다루는 방식 제안 (사례: 전북 교육협력추진단, 시흥 행복교육지원센터 등)

2-8 주소정보 고도화를 위한 재정 협력 체계 구축 방안 연구

[주제어] 행·재정체제 / 중앙-지방 관계 / 공모형 국고보조사업

연구책임 이서희 | **연구진** 유보람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주소정보 고도화를 위한 재정협력 필요성 대두

- 국가발전을 위한 핵심 기반 기술이면서, 윤석열 정부의 국정 과제 중 하나로 주소정보 고도화에 관한 논의가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음
  - 현재 전자 지도, 도로, 드론 배송, 스마트 시티 등 다양한 영역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별로 사업을 진행하여 주소정보를 축적하고 있으나, 이를 표준화하지 않을 경우에 사무의 유사·중복으로 인한 막대한 재정적 비효율이 발생할 가능성이 큼

국고보조사업을 활용한 주소정보 사업 연계·적용을 통한 기초자료 마련 필요

- 각 부처에서 시행하는 지자체 국고보조사업 특히 공모사업을 조사하여 관련된 사업 현황을 조사하는 동시에, 앞으로 추진될 공모사업의 사업설계 단계부터 주소정보 사업과 연계·적용될 수 있도록 부처간 협업을 위한 기초자료 구축이 필요함

2 연구의 주요 내용

주소정보 고도화를 위한 재정협력 거버넌스 체계 구축 검토

- 주소정보를 기반으로 다양한 생활·행정 서비스가 제공되는 시점에서 (1)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활용하기 위해 분산되어있는 주소정보 통합과 더불어 (2)국제표준에 맞는

주소정보 플랫폼 설계가 필요함

- 특히 재정협력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첫째, 주소정보와 관련된 유사 사무를 선별할 수 있는 방안을 발굴하는 법, 둘째, 선별된 사업 내에서 중앙과 지방이 재정을 협업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이 요구됨
  - 연구수행을 위해 중앙 및 지방의 다양한 재원 유형 및 성격을 분류하여 상대적으로 사업 간 협력이 용이한 국고보조사업을 선제적 분석 대상으로 설정하였고, 국내외 사례분석, 주소정보 고도화 유사 사무 선별을 위한 키워드 분석, 공모사업 전수조사 및 주소정보 키워드 매칭 분석을 실시함

주소정보 관련 유사 사무 선별을 위한 핵심 키워드 발굴

- 언론 및 행정안전부 주소정보 활용 기본계획을 토대로 주요 키워드를 추출하고, 주무부서와의 협의를 통해 최종 39개 재정 협력 키워드 도출을 확정함

| 그림 | 주소정보 고도화 핵심 키워드(39개)

공간

주소일반 / 도로 관련

주소정보 도로정보 건물주소 및 번호 국가주소 주소기능정보 국가지점번호 지적관리 공간연계, 공간정보 위치정보 내부도로 이동경로 주차 야외주소 물류서비스 내부도로 교통정보 환승센터

전자 지도 관련

입체주소 드론서비스 디지털 주소정보 실내 네비게이션 건물 주소 신규 발굴

신기술

신사업 관련

무인서비스 사물인터넷(IoT) AI(인공지능) 자율주행 미래형 공간 가상(공간) 모빌리티 서비스 로봇 스마트 자동차 고밀도, 고정밀 도시 다차원 공간 스마트 도시 자율형 건물번호판 디지털 플랫폼 무인서비스 배달서비스

국고보조사업과 주요 키워드 매칭을 통한 유사 사무 발굴

• 2022년도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사업 리스트(2,132개)를 중심으로 주요 키워드를 매칭한 결과 전체 64개 사업이 추출되었고, 전체 내 공모형 국고보조사업 23개가 도출됨

3 연구 결론 및 기대효과 / 정책제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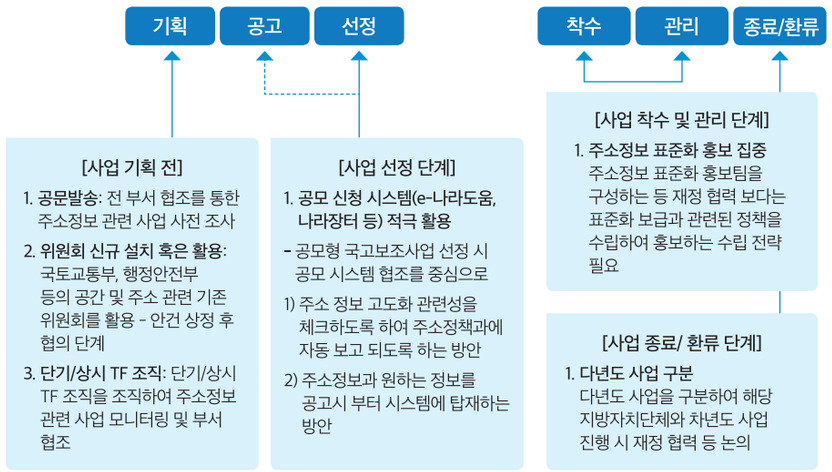
연구 결론 및 정책제언

• 재정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공모형 국고보조사업을 중심으로 사업체계 일반화 및 단계별 협상력을 제시하였음

- 일반적으로 기획→공고→선정→착수→관리→종료/환류로 A~F 총 6단계로 구분하였고, 주체는 소관부처, 지방자치단체, 전담기관으로 3분류가 가능하였고, 공모형 국고보조사업 단계별 재정협력 가능성(협상력) 탐색 가능성을 종합하여 제시하였음

• 단계별 협상력 등을 고려하여 공모 사업체계 내 재정 협력 체계 구축 방안을 제언함

| 그림 | 재정 협력 체계 구축 방안(종합)



2-9 지역경제 정책 수립을 위한 도시통계 개선 및 활용방안

[주제어] 지역경제 / 지역발전 / 지역통계 / 지자체 역량강화

연구책임 여효성 | **연구진** 윤소연, 이원도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양질의 지역경제 통계지표 제공

• 지역경제 통계의 수집, 저장, 처리 및 관리를 한곳에서 진행하는 플래폼 구축

- 다양한 지원방식으로 제공하며, 사용자에게 필요한 탐색적 분석 및 시각화 결과물 제공 추세
- 행안부의 도시통계 활용성을 높이고 사용자 편의성 향상을 위한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

도시통계 한계점 도출 및 실효성 제고방안 제언

• 실효성 제언을 위해 도시통계 시계열 분석을 통해 광역시도별 시사점도출

- 지역경제 통계지표에 대한 문헌조사 및 사례조사를 통해 도시통계의 활용성 제고 방안 모색

2 연구의 주요 내용

도시통계 개요

• 도시통계는 인구, 거주, 노동, 복지, 안전 등 15개 분야 58개 항목 74개 지표를 공표함으로써 지자체의 기본여건과 사회·경제적 특성을 비교할 수 있어 지역경제 연구 및 정책의 기초자료로 널리 활용

- 도시통계는 최종 확정된 통계자료를 행정안전부 홈페이지(PDF)와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엑셀파일)에 공표·제공

도시통계 현황분석

• 도시통계의 자료조사 체계 및 절차, 방식, 내용 등 특성과 관리 현황 검토

- ① 종합통계로서의 도시통계, ② 통계자료의 수집 및 검증, ③ 통계작성 주기와 공표시점을 토대로 분야별 지표현황 및 문제점 분석을 수행

• 도시통계 활용의 4대 저해요인

- ① 개별지표에 대한 상세 설명자료 부재, ② 통계작성 주기 및 공표 시기에 따른 통계적시의성 미흡, ③ 자료의 정확성 문제로 인한 신뢰도 저하, ④ 유사 통계자료와의 차별성 악화

통계서비스 플랫폼 사례조사

• 지역통계는 일반적인 통계에 공간적 개념이 추가

- 주로 행정단위로 주로 제공되지만, 조사·가공통계에선 사회경제적 특성을 세분화한 공간단위의 통계지표가 제공

- 지자체 연구기관에서 생산·공표하는 주요 지역경제 통계지표는 공통적인 조사통계자료를 활용하지만, 지역별 정책목표 및 방향설정에 필요한 자료제공을 위해 조사가공통계를 활용하거나, 조사통계 지표의 가공을 통해 주요 지표·지수를 작성하여 지역경제 정책 수립 및 연구에 기여하고 있음

• 통계서비스 플랫폼

- 사용자 친화적인 통계서비스 플랫폼 개발은 이용자의 데이터 활용역량 차이에 따른 활용격차를 극복하고,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시각화 결과물 및 공간정보와 연계하여 지도로 제공하여 한눈에 쉽게 살펴볼 수 있게 함으로써 사용자 효용성 증대에 기여하고 있음

3 연구 결론 및 기대효과 / 정책제언

품질개선 방안

• 도시통계는 지역사회 전반의 중요한 지표를 포괄적으로 정리하여 제공하는 종합통계

- 연속성 있는 동일한 지표로 발간되어 긴 시계열 정보를 축적하고 있다는 장점이 존재

• 하지만 현황분석 및 사례조사를 통해 다른 통계자료와 품질 및 생산체계를 비교하였을 때, 한계점 확인

- 도시통계 품질개선을 위해 통계자료의 품질을 평가하는 기준 중 하나인 사용 목적의 적합성 5가지 차원

- ① 관련성, ② 정확성, ③ 시의성/정시성, ④ 비교성/일관성, ⑤ 접근성/명확성의 관점에서 품질개선

사용자 편의성 향상방안

• 도시통계관리 선진화 활용증진을 위해 급증하고 있는 통계이용자 및 다차원적 요구대응을 위한 정책제언 방안을 제시

- ① 거버넌스 확립 및 인프라 개선, ② 새로운 지표개발 및 개선, ③ 통계데이터 서비스 다양화 및 공유확산을 제언

2-10 접경지역 특화발전방안 연구

[주제어] 지역발전 / 지역경제

연구책임 이소영 | **연구진** 김민영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신정부 국정과제에 부합하는 접경지역 발전방안 마련 필요

- 접경지역 시민의 삶의 질 향상, 접경지역의 규제완화, 거점별 관광테마 개발 등 접경지역 관련 지역공약 등을 고려하여 접경지역 발전방안 도출 필요

접경지역 특화발전 및 제도개선 방안 도출

- 접경지역지원특별법상 규정되어 있는 접경특화발전지구의 현실적 운영방안 모색
  - 접경특화발전지구의 지정 기준 마련 및 지구 지정안 제안
  - 기존 특화발전지구 관련 제도 분석을 통한 접경특화발전지구 제도개선방안 마련

2 연구의 주요 내용

지역특화발전지구 관련 제도 분석

- 지구 지정의 목적 및 유형을 대상으로 ① 낙후지역개발형, ② 투자유치 및 산업육성형, ③ 특화발전형으로 구분하여 유형별 제도 실태 분석
  - 특정지구 제도의 활용 목적은 특별하게 선정·관리되는 지구를 대상으로 지역발전을 지원할 수 있는 각종 특별 혜택을 제공하는데 있음

  - 특별지원의 명목하에 구성될 수 있는 특례의 유형은 ① 각종 세제 감면 등의 특례, ② 각종부담금감면 등의 특례, ③ 각종 규제완화 등과 관련된 규제완화 특례, ④ 입주기업 등 제도 관련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각종 임대료 감면 등의 기타 지원사항으로 대별
  - 특정지구 관련 특례는 기본적으로 개별법상 규정되어 있는 여러 개발 규제들의 법적 완화 규정들을 나열한 것이며, 실제 적용되기 위해서는 해당 지구의 선정 절차, 지구에 적용될 특례에 대한 관계 장관과의 협의 등의 법적 절차가 선행되어야 이행 가능
  - 접경지역지원특별법 상에서도 사업시행자에 대한 특례가 부여되고 있으나, 사업시행자가 해당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개별법에 의한 관련 부처의 허가, 지원 등이 선행되어야 이행 가능

접경지역 특화발전도 분석

- 특별법에 규정되어 있는 접경특화발전지구 지정 요건(경제 성장동력, 교통 중심축, 생활권 거점지역 등)을 고려하여 23개 분석지표 선정
  - 접경지역 시군을 대상으로 요인분석과 군집분석을 실시하여 유형화 방안 제안

| 표 | 접경지역 유형화 방안 종합

구분	유형화 I	유형화 II	유형화 III
유형 1	강화군, 고성군, 옹진군, 동두천시, 포천시, 연천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강화군, 고성군	강화군, 고성군
유형 2	고양시, 파주시, 김포시, 양주시, 춘천시	옹진군, 동두천시, 포천시, 연천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옹진군, 동두천시, 포천시
유형 3	-	고양시, 춘천시	고양시, 춘천시
유형 4	-	파주시, 김포시, 양주시	파주시, 양주시
유형 5	-	-	김포시
유형 6	-	-	연천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3 연구 결론 및 기대효과 / 정책제언

지역특화발전지구 선정안 제시

• 분석결과 지역특화발전지구 선정기준에 모두 부합하는 지역은 없음

- 따라서 지역특화발전지구 선정을 위한 단계별 선정절차로 ① 접경지역의 특성에 따른 유형별 권역 구상안 마련, ② 권역중 거점지구 선정의 방식으로 지역특화발전지구 선정을 제안

접경지역 권역별 특화발전방안 제안

• 권역별 지역특성 및 기존 수립계획 등을 검토하여 접경지역의 권역별 특화발전방안 도출

| 표 | 접경지역 권역별 특화발전방안

구분	권역 구상안	특화발전방안
유형 1	강화권 (강화군, 옹진군)	• 서해 북방한계선 지역의 남북간 긴장 완화를 위한 서해평화협력특별지구 구상 • 서해의 갯벌자원 등을 활용한 해양생태평화관광 거점 육성
유형 2	파주권 (고양시, 파주시, 김포시, 양주시)	• 신산업 경제특구 육성으로 산업 및 물류 거점화 (산업형 남북교류발전지구 추진) • 미래지향적 첨단산업 유치를 통한 경의축 메가리전 조성
유형 3	포천권 (동두천시, 포천시)	• 한탄강 세계지질공원 중심의 한반도 생태관광벨트 거점 육성 • K-영상촬영지구 조성으로 연계관광 육성

구분	권역 구상안	권역 구상안
유형 4	철원권 (연천군, 철원군)	• 친환경 에너지형 특화발전지구 육성 • 한탄강 유역 생태자원 남북 공동 활용 및 육성
유형 5	춘천권 (춘천시,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 워터프론트 삼각관광벨트 육성 • 다양한 안보관광자원을 활용한 DMZ평화관광거점 육성
유형 6	고성권 (고성군)	• 동해 북방한계선 지역의 남북간 긴장 완화를 위한 동해 평화협력특별지구 구상 • 동해안 해양관광자원 등을 활용한 해양관광거점 육성

지역특화발전지구 관련 제도 개선방안

•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및 접경지역지원특별법 개선방안

- 전략별, 시군별로만 수립되어 있는 발전종합계획에 권역별 구상 및 특화발전방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수정계획 마련
- 접경지역지원특별법 상 접경특화발전지구의 지정 절차 등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접경특화발전지구의 지정신청 등의 법률 개정안 제안

2-11 자전거 관련 산업 실태조사 연구: 제도 및 시책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주제어] 자전거 산업 / 자전거 이용 활성화 / 자전거 진흥원 / 자전거 산업조사

연구책임 김현호 | **연구진** 김도형, 김민영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코로나 등으로 인해 자전거 수요 증가

- 코로나 영향, 웰빙(Well-being)에 대한 관심 증가로 자전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자전거 관련 산업의 진흥은 미약

제도 시책 측면에서 자전거 산업진흥방안 마련

- 본 연구는 국내 자전거 산업실태조사를 통해 자전거 관련된 시책이나 제도 등의 측면에서 자전거 산업진흥 방안을 마련하는 것임

2 연구의 주요 내용

국내외 자전거 시장 분석

- 세계시장 규모는 2021년 1,116억 5,000천만 달러에서 2023년 1,861억 8,000천만 달러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
- 국내 자전거 시장은 2021년 경우, 수출은 4,044천달러, 수입은 199,973천달러로 무역수지 적자 발생

국내 자전거 산업 실태분석

- 통계분석 결과, 2019년 자전거 관련 사업체 수는 8.696개, 종사자 수는 14,729명이며, 서울과 경기가 43.3%를 차지
- 인터뷰 분석 결과, 산업 및 도로 등 기반 조성, 자전거 안전검사 및 교육, 자전거산업 통계 생산, 자전거 산업 육성 관련 행사 및 이벤트 개최, 자전거 총괄기구 설치 및 지원 등에 대한 수요가 많았음

사업체 설문조사 분석

- 전국 소재 1,559개 사업체 중 무작위 추출로 설문시행, 100개 응답 사업체 통계분석
- 조사결과 사업체 규모가 영세하고, 절대 다수가 부품조립 업체의 형태로 조업, 경영애로는 임대료 및 인건비 등의 운영비, 산업활성화 저해요소로 공공부문 지원부족, 기반시설 미흡, 국내 생산기반 부족 등 제시

| 표 | 사업체 설문조사 결과

사업운영기간	• 사업체 운영기간은 '20년 이상'인 경우가 44.0%로 가장 많고, '10~20년 미만' 30.0%, '5~10년 미만' 16.0%, '1~5년 미만' 10.0% 순
사업체 규모	• 종업원 없이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가 83.0%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종업원 수가 '10명 이상'인 경우 10.0%, '1~9명'인 경우 7.0% 순
주력 상품	• 사업체에서 판매하는 자전거 중 대수 기준 '국내 브랜드'가 85.8%, '수입 브랜드'가 14.2%
매출 추이	• 최근 5년 동안 매출 추이에 대해 '매우 감소함'과 '감소함'이라고 응답한 업체가 전체의 82.0%를 차지
경영 애로	• '운영비(임대료, 인건비 등)' 49.0%, '거래선 확보' 21.0%, '홍보·판촉' 10.0% 순
산업활성화 저해 요소	• 지자체 등 공공부문 지원 부족' 61.0%, '기반시설(자전거 도로 등) 미흡' 49.0%, '국내 생산기반 부족' 29.0% 순
산업 활성화 필요 사항	• 기반시설(자전거 도로 등) 정비' 34.0%, '정부, 지자체 등 공공부문 지원 강화' 27.0%, '국내 생산기반 육성' 23.0% 순

국내외 자전거 정책분석

- 국내는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자전거 산업지원은 사각지대로 존재
- 독일, 일본의 경우 자전거 산업을 미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본산업으로 육성시책 추진

3 연구 결론 및 기대효과 / 정책제언

미래 일자리 창출산업으로 육성 방향 전환

- 자전거 산업 지원에 대한 정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소극적 대응에서 탄소중립 규제 등에 대응할 뿐 아니라 미래 일자리 창출의 핵심산업으로 방향 전환

자전거 산업 육성 관련 대 과제 추진

| 표 | 자전거 산업 육성 관련 대 과제 추진

부문	내용	비고
생산기반 조성	• 구동체, 자체 등 핵심기술 타겟 지원 - 목표는 핵심 및 기반 기술의 빠른 추격, 일본 시마노가 구동체 세계 점유율 70% 차지 • 자전거 주력산업 선정 및 국가적 연구기반 설치 및 강화 • 자전거 전문 산업단지 조성 및 운영, 기존 노후 및 유휴 산단의 업그레이드 활용	• 목표 자전거 선도국가 추격
자전거 산업 통계 조사	• 자전거 산업통계 조사 시행, 자전거 이용자 통계는 산출되지만 산업 통계 미산출	• 도로현황 2년마다 조사
자전거 산업 박람회 개최	• 자전거 산업 이벤트로 KOREA BIKE SHOW 혹은 BIKE 박람회 개최	
자전거 총괄 기구 설치	• 자전거진흥원 설치 및 운영 - 국가의 자전거 총괄기구 부재 대응 필요, 법적 지위는 정부 출연기관으로 설치 - 사무는 자전거 이용 및 산업진흥과 관련된 제반 사항을 관장	• 연구개발, 통계 조사, 시책개발, 안전점검, 교육, 평가 등
통합법 제정	• 자전거 통합법 제(개)정 - 자전거 산업지원에 대한 법적 기반 부재 대응, 자전거 이용과 산업 통합적 추진 기반 마련	• 산업지원 부재 대응

3. 지방자치단체 정책연구과제



서울특별시

1) 서울시 인구영향평가 도입 및 제도화방안 (이원도, 여효성) 107

부울경(부산·울산·경상남도)

2) 부울경 초광역 협력사업이 부울경에 미치는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전대욱, 박승규, 최인수, 최지민, 여효성, 이경은, 추병주) 109

대구광역시

3) 대구 인구영향평가제도 도입 방안 (이소영, 박진경) 113

인천광역시

4) 인천광역시 외국인 근로자 실태조사 및 지원방안 (박현욱, 주희진) 117

광주광역시

5) 광주광역시 시민참여예산제도 개선 방안 (전성만, 김윤승) 121

경기도

6) 평택항만의 효율적 재난대응을 위한 소방력 강화방안 (윤소연, 이제연) 125

강원도

7) 강원도 폐광지역 지자체 간 협력사무 발굴 및 추진방안 (박재희, 이재용) 129

경상북도

8) 데이터 기반 정책평가 체계 연구 (이병기, 박현욱) 134

제주특별자치도

9) 빅데이터를 활용한 문화예술사업의 경제적 효과 분석 (이원도, 김민영) 137

3-1 서울시 인구영향평가 도입 및 제도화방안

[주제어] 인구감소 / 인구변화대응 / 인구영향평가 / 제도화 방안

연구책임 이원도 | **연구진** 여효성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한 서울시 인구변화대응 전략

- 서울시 정주인구는 2020년 이후 계속 감소하지만, 서울과 인접한 수도권의 정주인구는 계속 증가하고 있어 광역적 정책대상 인구를 고려한 시정사업 계획 및 정책이 요구
  - 서울 생활권은 서울 및 인접 수도권 정주인구의 주요 일상생활의 장소로서 외연적으로 계속 확장되고 있음

서울시 인구영향평가 운영 및 추진

- 서울시 인구영향평가제도는 제도적 기반(조례, 시행 2023.01.01.)을 일상적 삶에 미치는 시정정책의 인구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적절한 대응 방안과 대안 제시를 기본방향으로 함
  - 기존 지자체의 지역소멸 및 인구감소 대응을 목적으로 한 인구영향평가와는 달리 서울시 인구영향평가제도는 서울 정주인구의 삶의 질 향상과 함께 도시경쟁력 강화 및 생활인구 활력증진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음

2 연구의 주요 내용

서울시 인구변화 현황분석

• 광역적 정책대상 인구개념 고찰과 사회적 인구감소(인구유출)의 결정요인 분석

- 인접 수도권에 거주하면서 서울 행정서비스를 이용하는 광역적 정책대상 인구개념(생활인구)의 검토
- 서울에서 인접 수도권으로 정주인구 및 생활인구 유출의 인구이동 요인을 작성된 다변량 회귀모형을 통해 확인

서울시 인구영향평가 설계(안) 제시

• 인구영향평가 시범사업을 위한 시범사업 선정기준 및 평가 실효성 강화방안 제시

- 인구전략기반 인구변화 대응 핵심과제와 지역별(자치구) 인구특성을 고려한 인구영향평가제도 제언

3 연구 결론 및 기대효과 / 정책제언

조례 개정(안) 제시

• 도시경쟁력 증진 및 생활인구 활력제고를 위한 조례 개정(안)

- 인구변화대응팀의 인구변화대응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한 인구영향평가 지표개발 및 협의체 (인구변화대응위원회) 기능강화를 통한 인구 모니터링 제언

서울시 인구변화 대응 핵심과제별 평가지표 제언

• 저출산, 고령화, 청년인구, 1인 가구, 도시노후화 및 지역 불균형 개선 측정지표

- 핵심 주제와 연관된 정주여건, 주택시장, 일자리, 인구·가구구조의 영향평가를 위한 개선 측정지표(안) 제시

3-2 부울경 초광역 협력사업이 부울경에 미치는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주제어] 지방자치제도(특별지방자치단체) / 행정체제 / 지역경제·일자리

연구책임 전대욱 | **연구진** 최인수, 박승규, 여효성, 최지민, 이경은, 추병주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부·울·경 초광역 협력사업에 따른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필요

• 초광역연합(특별지방자치단체)의 무산 이후에도 관련 초광역 협력사업의 추진 전망

-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추진에 따른 초광역권 발전계획은, 무산 이후 각 광역자치단체간의 초광역 협력사업의 추진으로 변경되면서, 이에 따른 사회경제적 효과분석 필요
- 사무의 광역연계 또는 각 시·도의 초광역 협력사업에 의한 지역경제 성장 및 각종 유발효과의 추정, 행정비용 절감 및 경제적 편익의 창출 등 시너지 효과의 추정이 요구됨

초광역 협력에 의한 행·재정적 및 경제적 시너지 효과의 추정

• 지역경제 성장 측면에서의 미시·거시적 효과추정 및 행·재정적 시너지 효과의 추정

- 부·울·경 초광역 협력사업의 정책적(행·재정적) 측면의 시너지 효과의 추정
- 지역생산 및 소득 증대 등 초광역권의 거시경제적 성장을 전망
- 다지역 산업연관효과분석의 수행을 통해 생산, 부가가치, 소득 및 고용유발효과 등을 분석

2 연구의 주요 내용

행·재정적 시너지 효과의 분석을 위한 설문조사 및 통계분석

-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 또는 초광역 협력사업의 내적 효율성에 관한 설문조사
  - 내적 효율성에 관한 엄밀한 정량적 추정보다, 특별지방자치단체 위임사무 또는 초광역 협력사업에 대해 잘 인지하고 있는 관계 공무원 및 연구자 등 60여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실시를 통한 정성적 추정치 또는 전망치를 제시
  - 특별지방자치단체 또는 초광역 협력사업의 필요성 및 전략적 기대효과, 행정비용 절감가능성, 규모·범위의 경제, 투입예산의 확보가능성 등의 추정결과 제시
- 초광역 협력사업에 대한 필요성 및 행·재정적 시너지 효과에 대한 긍정적 기대 도출
  - 초광역 협력사업의 필요성, 전략적 기대효과, 재정적 효과 등 긍정적 인식이 높게 나타났으며, 부·울·경의 전략적인 대응으로 위임사무 또는 초광역 협력사업의 사무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 지역특성을 감안하여 초광역 협력사업을 통해 시너지가 나타나는 특정 분야를 중심으로 추진하고, 주민 등 민·관의 이해관계자와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추진할 필요성이 있음

초광역권의 거시경제 성장모형에 의한 장기 성장전망

- 2040년까지의 초광역권 경제성장 효과 추정을 위한 시스템 다이내믹스 시뮬레이션 수행
  - 산업정책, 인력양성·R&D, 교통인프라의 확충 등 초광역 협력사업의 투자효과를 보기 위해, 내생적 경제성장 이론과 사회간접자본 기여도에 기반한 경제성장 모형 구축 및 시뮬레이션 실행
  - 이를 위해 BAU(협력없이 현 추세 유지), S1(협력사업 2023~2027년 투자계획 집행), S2(협력사업 2040년까지 지속) 등의 시나리오에 의한 성장효과 추정

- 초광역 발전계획 상 경제성장 비전의 달성은 현재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음
  - 초광역 협력사업의 투자를 2040년까지 지속시키는 경우 초광역 발전계획의 경제성장 비전 달성이 가시적이나, 인구의 경우 현재의 전반적인 감소추세를 일정 수준 완화시킬 수 있음
  - 즉 협력사업은, 협력이 없는 경우 381조 원 정도에 머물 GRDP의 규모를 중장기적으로 약 30~100조 원 증가시키며, 인구도 약 15만 명에서 30만 명 정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남

초광역권의 다지역 산업연관효과분석을 통한 경제적 유발효과 분석

- 미시적인 관점에서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을 위해 정부지출의 투입 전·후 영향을 산출
  - 부·울·경 지역별 산업연관표를 활용하여 개별 지역에 대한 산업연관분석 및 지역 간 통합 산업연관분석인 다지역 산업연관분석을 실시
  - 거시적 성장전망 분석의 2022~2040년 초광역권 투자계획의 추정치를 활용, 부·울·경 개별지역에 대한 14개 산업에 관한 정부지출 투입의 변화를 가정한 시나리오 구축 및 분석
- 초광역 협력사업으로 인한 생산·부가가치·소득 및 고용유발효과의 추정
  - 초광역 협력으로 인한 생산유발 효과는 2025년 약 46.5조 원으로 예상되며 2040년까지 약105.1조 원으로 증가, 소득효과는 2025년 약 22.5조 원, 2040년까지 약 50.9조 원으로 증가
  - 부가가치효과는 2025년 약 30.2조 원, 2040년까지 약 68.3조 원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고용유발효과는 2025년 5,700억 원(약 18천명), 2040년까지 약 1.3조 원(약 40천명)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3 연구 결론 및 기대효과 / 정책제언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분석결과 종합

- 초광역 협력사업의 내적 효율성으로서의 행·재정적 시너지 효과에 대한 긍정적 기대
  - 초광역 협력사업의 필요성, 전략적 기대효과 및 재정적 효과 등은 긍정적이며, 향후 추진에 있어서 전략적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한 집중과 다양한 민·관 이해당사자와의 조율에 기반한 협력을 지속해야 함
- 협력사업의 외적 효율성으로서의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구현하기 위한 지속적 노력 필요
  - 협력사업의 지역경제에 대한 거시적·미시적 파급효과는 높은 수준으로 볼 수 있으나, 협력사업에 의한 투자계획에 관한 각종 위험요인에 대한 지속적 관리와 함께, 재원조달 및 중앙정부로부터의 지속적인 권한이양의 도모 등 사업관리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함

3-3 대구 인구영향평가제도 도입 방안

[주제어] 지역발전 / 인구감소

연구책임 이소영 | **연구진** 박진경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대구광역시의 저출산·고령화 심화 및 인구구조 변화 급변

- 2020년 기준 합계출산율이 가장 낮은 광역자치단체로 서울, 부산, 대구

인구정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대구시 인구영향평가제도 도입방안 제안

- 시는 2018년 8월 인구정책 기본조례를 제정하고 매 5년마다 인구정책 기본계획 수립
- 인구정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대구시 맞춤형 인구영향평가 제도 도입방안 제안 필요

2 연구의 주요 내용

관련 영향평가제도 분석

- 규제형 영향평가제도와 규범형 영향평가제도 운영사례 분석
  - 인구영향평가는 규범형 영향평가제도에 가까우므로, 성별영향평가, 고용영향평가 등 사례 분석

기존 인구영향평가제도 분석

- 인구정책 관련 조례상 인구영향평가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자치단체 사례분석

대구시 인구정책 여건분석

• 대구시 인구현황 및 인구이동 특성 분석, 대구시 인구계획 및 관련 평가 현황 분석

3 연구 결론 및 기대효과 / 정책제언

대구시 인구영향평가제도의 단계별 도입방안 - 단기적 인구영향평가제도의 설계

| 표 | 도입여건

구분	상세내용	비고
관련 제도적 기반	• 대구광역시 인구정책 기본조례 제3조 • 시장은 인구구조와 규모를 개선하기 위해 인구정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고, 지역별 인구특성을 고려한 제도 마련과 여건 조성을 위해 노력해야 함	인구영향평가 규정 없음
관련 계획	• 대구광역시 인구정책 기본조례 제5조 • 대구광역시 인구정책 종합계획(2020~2024) 기수립 • 2022년 대구광역시 인구정책 시행계획 기수립	기본계획상의 인구정책은 간접계획을 포함
조직 및 인력	• 미래인구정책팀(팀장 1명, 주무관 3명)은 인구정책 외 시정발전 업무 함께 수행 • 인구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경기도의 경우, 현재 주무관 1인이 수행하고 있는 인구정책 업무를 팀 단위에서 수행 중	현재 업무만으로도 업무 과중

| 표 | 단기적 인구영향평가제도의 설계

구분	상세내용
평가 주관	• 인구정책팀
평가 절차	• 중점 인구영향평가 대상의 확정 • 담당 사업부서의 체크리스트 작성 • 관련 전문가의 심층평가 실시 • 심층평가결과서의 개선 및 권고사항 사업부서 송부 • 개선대책 수립 등 반영계획 제출
평가 시기	• 예산상 단년도 사업기간 해당년도에 맞추어 평가 실시 • 현재 평가시기와 동일하거나 예산반영을 위해 조기에 실시 가능
평가 대상	• 청년인구 유지라는 현재의 대구시 인구목표 달성에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소관 정책을 선정 • 민선자치단체장의 변화 등 정책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2022년 새롭게 추진되는 신규사업 중에서 선정
평가 환류	• 종합결과에 따른 차년도 예산 및 사업계획 환류 조치

대구시 인구영향평가제도의 단계별 도입방안 - 중장기적 인구영향평가제도의 설계

| 표 | 도입여건

구분	상세내용	비고
관련 제도적 기반	• 대구광역시 인구정책 기본조례상 인구영향평가 규정 추가 • (조례 개정안) 현재 인구정책사업의 시행이 규정되어 있는 제7조를 개정하여, 2항 규정 신설 • (조례 신설안) 시장은 인구정책이 인구에 미칠 영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인구정책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인구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인구정책 기본조례 제7조 2항 신설

구분	상세내용	비고
관련 계획	• 대구광역시 인구정책 기본조례 제5조 • 대구광역시 인구정책 종합계획(2025~2029) 수립시 적용 • 계획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도록 사전적 인구영향평가제도 도입	2차 종합계획 수립시 적용
조직 및 인력	• 인구정책만을 대상으로 하는 조직으로 확대 개편 • 인구영향평가제도를 전담할 주무관 1인 확보 (전국 광역자치단체에서 유일하게 인구영향평가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경기도의 경우, 주무관 1인이 인구영향평가 업무 전담 수행 중) • 인구영향평가센터 설립 검토	미래업무 이관, 인구정책 조직으로 확대

| 표 | 중장기적 인구영향평가제도의 설계

구분	상세내용
평가 주관	• 인구정책팀 또는 인구영향평가센터
평가 절차	• 종합계획 수립전 사전 인구영향평가 실시 • 계획안 대상 시민, 관련 전문가, 공무원 등의 체크리스트 항목 검토 및 의견 수렴 • 관련 분과 구성을 통한 종합보고서 작성 및 정책 수립 • 시행계획 수립에 따른 매년도 사후 영향평가제도 실시
평가 시기	• 사전영향평가는 5개년 종합계획(2025~2029) 수립 이전인 2024년도에 실시 • 사후영향평가는 예산상 단년도 사업기간 완료시점에 맞추어 평가 실시
평가 대상	• 사전영향평가는 5개년 종합계획안을 대상으로 실시 • 사후영향평가는 시행계획상 중점정책과제를 대상으로 실시
평가 환류	• 사전영향평가 결과는 종합계획 수립에 반영 • 사후영향평가 결과는 매년도 시행계획상 사업내용에 반영

3-4 인천광역시 외국인 근로자 실태조사 및 지원방안

[주제어] 지역사회·공동체 / 주민참여

연구책임 박현욱 | **연구진** 주희진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국가·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 복지, 생활, 의료에 대한 지원이 늘어나고 있지만, 여전히 상당수의 외국인 근로자는 내국인에 비해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음
- 증가하는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제도적·정책적 지원 노력이 필요함
- 외국인 근로자 실태조사 및 면접조사를 통해 정책수요자인 외국인 근로자가 겪고 있는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외국인 근로자의 인식을 바탕으로 정책수요를 파악하여 외국인 근로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 및 사업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함
- 실태조사를 통해 인천광역시의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정책 및 사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함

2 연구의 주요 내용

외국인 근로자 설문조사 주요 내용

- 여러 가지 이유로 한국(인천)에 거주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경제적인 이유가 한국 체류에 크게 작용한다고 볼 수 있음
- 응답자의 절반 정도가 한국어 능력 수준을 보통 이상으로 진단한 것으로 보아 한국어에 대한 초급반과 중급반, 고급반 등으로 수준별 교육프로그램을 세분화하여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한국에서의 어려운 점에 대하여 '언어 문제'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나 한국어 교육의 중요성이 다시 한 번 강조되고 있음
- 두 번째로 어려운 점으로 '자녀 양육 및 교육'의 문제가 지적되어 특히 외국인의 거주 및 정착이 증대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온전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포함되기 위한 다문화 정책적 관점의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한 이유를 살펴보면 "한국어를 잘하지 못해서"가 가장 큰 부담인것으로 나타났고, 그 뒤로 "치료비가 부담돼서(13.6%)"가 두 번째로 높은 비중으로 나타남
- 직장동료 및 직장에서의 차별 경험에 대해서는 약 60% 이상에서 부정적인 측면, 즉 갈등 및 마찰이 있었으며 차별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함
- 가족관계, 인간관계, 주거 및 전국적인 한국 생활에 대한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외국인(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인천광역시의 제도 및 정책에 대한 만족 정도에 대하여 약 80%는 보통 이상의 수준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

3 연구 결론 및 기대효과 / 정책제언

정책제언

- 외국인 근로자 지원 기관 및 부서 설치
  - 외국인 근로자지원센터 및 법률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 복지, 교육, 권리 향상을 위한 지원이 필요함
- 고려인 동포 근로자를 위한 제도 마련
  - 고려인 동포를 위한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 실시가 필요함
  - 고려인 동포 자녀들을 위한 보육비 지원 및 맞춤형 교육 서비스(예, 이중언어교육) 제공이 필요함
- 포용적 사회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캠페인 실시
  -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줄이고, 지역 주민들이 외국인 근로자를 지역 사회의 구성원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 및 캠페인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함
- 외국인 근로자 근로 인권을 위한 관리 감독 강화
  -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 인권에 대한 정기적인 조사 ·감독이 필요함
- 외국인 근로자 고용 플랫폼 개발
  -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며 취업을 희망하거나 이미 취업하고 있는 외국인의 노동수요 및 고용주의 일자리 공급 매칭 플랫폼 개발 필요
- 잠재적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교육 실시
  - 현재 인천광역시에 거주 중인 외국인 근로자의 90%는 E-9과 H-2 비자를 소지하고 있지만, 다른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도 추후에 외국인 근로자가 될 가능성이 있음

- 인천광역시에서는 이들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예, AI, 통계 등)을 실시하여, 양질의 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유학생의 경우, 인천광역시 차원에서 산학협력 인턴십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한국에서의 일자리 경험을 제공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인천광역시의 산업·노동정책과 외국인노동자 정책의 조화

• 민관협력 강화

- 사회문제가 다양화되고 복잡해지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사회의 모든 현안을 직접 해결하기 어려워지고 있음. 이에 따라, 일부 행정서비스는 민간에 위탁하고,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함
- 인천광역시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기본적인 정책 방향을 정하고, 시민단체가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인 것은 위탁을 하는 것이 필요함

• 외국인 근로자 근로환경에 대한 표준화 및 가이드라인 마련

-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다국어 표준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산재 처리 매뉴얼, 기타 사업장별 안전 관련 사항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작 및 배포가 필요함

3-5 광주광역시 시민참여예산제도 개선 방안

[주제어] 주민참여예산 / 시민참여 / 중앙-지방 관계

연구책임 전성만 | **연구진** 김윤승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시민참여예산제도 운영 10년 이후 참여 활성화 필요

• 2004년 광주 북구 도입 이래, 2011년 지자체 시행 의무화 이후 10여년 동안 양적 발전에도 불구하고, 질적 제도 운영에 관한 논의 미흡

• 광주광역시청은 2011년 시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해서 주민과 소통하는 참여예산제도를 운영하면서, 시민참여예산제도의 취지를 살린 참여예산운영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제도개선 연구 필요

- 참여예산제도를 운영하는 1) 적정규모 및 사업유형, 2) 참여예산사업 심사 절차 및 선정 기준, 3) 참여예산위원회 역할, 4) 참여예산제도의 인식개선, 5) 의회의 예산 심의 &의결권 등의 제도현황 분석을 통한 개선방안 마련 필요

• 이에, 광주광역시의 맞춤형 참여예산제도의 개선방안을 마련 함으로써, 광주광역시의 운영 내실화로 참여예산제도의 활성화에 기여하며 향후 참여예산제도 운영계획에 반영할 수 있는 제도개선방안 마련 목적

2 연구의 주요 내용

6대 광역시 제도 및 운영 비교 분석

• 광역시별 참여예산 제도운영은 유사하나, 지원조직에 관한 운영은 지자체별 차이가 나타남

- 제도 운영설계 측면에서, 참여주체(주민의 정의), 참여 범위 운영, 제안사업의 유형 및 공모절차, 사업선정 과정에서 주민 참여 기회, 민관 숙의, 공론화 과정의 제도운영, 참여예산운영 전담조직, 교육 및 홍보에서 큰 차이가 보이지 않음

광주광역시의 참여예산 과정 상 개선사항 검토

• (예산규모) 광주광역시의 참여예산규모는 광역시 중의 하위권 규모에 속하고 주민참여예산비중이 높지 않으나, 그렇다고 참여예산규모를 확대 또는 축소해야 한다는 진단을 하기 어려움

- 참여예산 규모 적정성은 1) 참여예산 제안사업의 속성, 2) 지자체장의 의지, 3) 참여예산제도의 취지 및 목적 등과 같이 지방재정 운용의 자율권 내에서 판단이 필요하다는 의견

• (사업유형화) 광주광역시의 사업유형의 적정성 문제는 광주광역시를 비롯한 다른 '특광역시' 주민참여예산이 경험하고 있는 어려움과 맥을 같이하는데, 이는 광역시의 사무와 연계된 사항으로 볼 수 있음

- 사업유형의 복잡함이 아니라 "광역시 주민참여예산에 어울리는 공간환경개선 문제, 이슈 및 과제 문제, 당사자(청소년, 청년, 다문화 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와 경로를 운영하는가"라는 문제
- 광주광역시 '시정참여형'은 지역의 공간환경개선(광역 차원의 공간 조성/정비/개선 등과 관련된 제안사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민참여 경로라고 볼 수 있는데, 광주광역시는 여기에 '그린 스마트펀시티 조성을 위한 사업'을 대상으로 하면서 지역의 이슈 및 과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민참여 경로와 결합하는 방식으로 운영

• (참여위원회 역할) 광주광역시를 포함한 참여예산의 논의사항은 주민이 제안하는 사업계획서를 어떻게 구체화하여 운영할 것인가에 주목

- 참여예산제 과정에서 참여예산위원회의 역할은 주민이 제안하는 사업계획서가 어떻게 제안되느냐에 따라 역할이 의존적
- 광역 사무와 어울리는 제안사업을 발굴하는 것과 제안사업을 구체화하여 예산에 편성하고 집행하는 것은 다른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제안사업의 수준이 사업화하기에 부족한 수준일 경우에는 과정상의 제도설계가 필요
- 참여예산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 지방자치단체 사업부서와 전문가 등이 함께 숙의를 진행하면서 제안사업을 구체화하는 과정을 진행하게 되는데, 이 숙의 과정은 많은 시간이 필요

• (참여예산제도의 인식) 공무원과 참여위원회를 대상으로 한 참여예산제도의 인식결과, 1) 공무원과 위원들 간 인식 격차, 2) 공무원 내 참여예산제도 담당자와 사업부서 간 인식의 격차가 참여예산 과정 상에서 나타남

- 공무원과 참여위원 간의 인식은 공모접수단계, 숙의결정단계, 사업집행단계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참여예산제도를 이끌어 가는 공무원의 입장과 참여예산제도에 참여하는 위원 간의 제도 운영 상의 차이로 볼 수 있고, 이는 광주광역시 뿐 만 아니라 타 지자체에서도 유사한 인식차이를 보이고 있음
- 반면, 제도의 필요성 측면에서 공무원과 시민참여예산 위원 모두 긍정적 인식이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공무원(2.77)들은 시민참여예산위원(3.54)보다 긍정의 비율이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공무원과 위원 들 간의 제도운영에 관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음

3 연구 결론 및 기대효과 / 정책제언

시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 방안-광주광역시 중심으로

- 광주광역시의 참여예산제도는 1) 공모접수 단계에서 투명성 제고를 통한 참여 확대, 2) 참여예산 운영 상의 실질적 예산제도와 연계를 통한 운영의 실효성 확보의 방안 필요
  - (공모접수단계) 주민들의 참여가 증가하지 않고, 주민들이 공모제안서의 내용이 추상적이며, 주민들의 역할이 제안서 제출 이후에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 문제임. 따라서, 정보공개를 투명화하기 위한 1) big-data 활용한 기존 제안사업 정보 제공, 2)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사업주제 선정을 통해 시민참여의 효능감 제고 필요
  - (운영의 실효성 확대) 광주광역시를 포함한, 지자체의 참여예산제도는 형식적으로 예산편성과 예산집행을 연계해 놓은 제도 설계로 운영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조례에서 1) 참여예산제 운영의 목적에 "재정투명성"에 "재정책임성"을 추가하고, 2) 주민참여예산사업의 심사기준을 신설 필요

3-6 평택항만의 효율적 재난대응을 위한 소방력 강화방안

[주제어] 지역발전 / 지역혁신

연구책임 윤소연 | **연구진** 이제연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평택항만 위험성 증가에 따른 소방력 강화방안 마련 필요

- 항만의 환경적·지리적 특성으로 인한 대형재난 위험성 존재
  - 평택·당진항은 복합화력발전소, 평택 LNG·LPG 기지 등 국가 중요기반시설이 위치한 지역으로서 전국무역항 중 화물처리량 5위, 여객이용률 3위, 위험물 취급률 6위를 기록할 만큼 각종 위험요인이 상존
- 평택·당진항 물동량 증가 및 인구 증가에 따른 소방수요 증가
  - 항만개발계획에 따른 항만이용객 및 위험물 적재 화물선의 운항 증가로 인해 평택항만의 재난 위험성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신속한 현장대응을 위한 소방력이 부족한 실정
- 평택항만 및 배후지역의 소방수요를 고려한 소방력의 적정성 검토 및 강화방안 마련 필요
  - 객관적 자료에 근거한 평택항만 및 배후지역의 소방환경 특성 및 현 소방력 규모의 적정성 검토를 바탕으로 대상지에 적합한 소방력 강화방안 마련 필요

2 연구의 주요 내용

국내·외 소방력 기준 및 항만 재난사례 조사

• 국내·외 소방력 정의 및 기준 조사

- 소방력이란 소방기관이 소방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을 포괄하는 용어로 우리나라는 소방력 배치에 있어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소방수요·특성을 반영한 등급화 방식을 적용함
- (미국, 일본, 영국의 사례조사 결과) 국외에서는 물리적 특성에 기반한 위험도 평가, 대응시간(이동시간), 초동대응 인원수 등을 고려함

• 국내·외 항만재난사고 사례 조사를 통한 특성 도출

- 국내·외 항만재난사고 사례를 조사·검토하여 항만재난사고의 주요한 특성 4가지 도출
- 첫째, 항만은 대량의 위험물이 보관·유통되고 있어 사고 발생 시 확산속도가 매우 빠르고 피해 규모가 큼, 둘째, 소방대상물 및 취급물질의 다양성으로 인해 일반적인 화재에 비해 진압과정이 매우 복잡함, 셋째, 인명구조 및 화재진압을 위한 시간과 자원이 많이 투입됨, 넷째, 직접적인 피해 외에도 위험물 유출로 인한 인명피해나 환경오염, 물류 지연에 따른 2차 피해 등이 발생할 수 있음

평택항만 현황 및 소방환경 분석

• 평택항만 일반현황 및 소방력 현황, 재난대응체계 등 분석

- 항만 및 배후지역 내 재난·안전사고 중 소방조직의 출동 범위를 기준으로 소방력, 대응체계 등 조사·분석

• 평택항만 소방과 관련한 내·외부환경 종합 검토(SWOT 분석)

- 강점(Strengths): 최근 현장 인력 보강 및 소방안전 인프라 확대, 유관기관 협력 지속 등
- 약점(Weaknesses): 항만 특성에 따른 높은 위험성, 사고유형의 특수성에 따른 현장 대응 어려움, 항만 내 시설·위험물질의 관리·감독기관 분산에 따른 정보공유 및 대응 어려움 등

- 기회(Opportunities): 사회적 안전 인식 수준 향상 및 실효적 법·제도 개선 요구 증가, 국가항만시설에 대한 국가 차원의 관리체계 마련 요구 증대, 항만 인프라 확충 및 시설 보강에 따른 안전성 강화 등
- 위협(Threats): 중장기 물동량 및 여객 증가로 인한 안전관리대상 증가, 위험성 확대, COVID-19 장기화로 인한 지자체 재무건전성 약화 등

평택항만의 소방력 적정성 검토 및 소방력 강화방안 제시

• 항만의 효율적인 사고대응을 위한 3가지 요소(신속성, 전문성, 충분성)를 중심으로 평택항만에 대한 소방력 적정성 검토

- 신속성 분석결과, 평택항 내 사고에 대한 관할 소방관서의 출동 소요시간은 5분으로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를 위한 골든아워(golden hour)를 고려했을 때 적정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재난대응단계별 소방력 운용기준에 따른 1단계 출동(4개 이하 소방서 출동)까지는 약 40분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남
- 전문성 분석결과, 위험물 및 화학사고는 관할 소방관서에 초동대응에 필요한 인력 및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형선박화재 및 수상사고의 경우 관할 소방관서에서 자체적인 역량만으로 대응하기에 한계가 있으나 가까운 거리에 전문성을 갖춘 유관기관이 존재하여 공동대응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남. 다만, 고층의 인명구조를 위한 장비 확보에는 최소 20분~40분 이상 소요되어 초기 인명구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됨
- 충분성 분석결과, 총물동량(2020) 처리기준 전국 상위 12개 항만과 비교했을 때, 하역능력과 총물동량, 배후 산업단지 규모에 비해 항만을 기준으로 반경 10km 이내 동원 가능한 소방관서 수가 상대적으로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남(전국 평균 약 12.5개소, 평택·당진항 4개소)

• 평택항만의 재난대응력 향상을 위한 소방력 강화방안 2가지 비교·검토

- (1) 평택항만 내 신규 소방정대 설치·운영, (2) 신규 소방관서 설치·운영

3 연구 결론 및 기대효과 / 정책제언

결론 및 정책제언

- 본 연구에서는 경기도 평택항만의 효율적 재난대응을 위하여 대상지 소방환경 특성 및 소방력 규모의 적정성을 분석하고, 소방력 향상을 위한 방안을 비교·검토하였음
- 평택항만의 재난대응력 강화를 위한 소방력 향상은 평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인력·장비의 증강뿐만 아니라 특수재난 중심의 역량 강화가 요구됨
  - 현재 평택항만 주변은 항만시설 및 배후단지 확충 등 개발이 진행되고 있고, 이에 따라 방문·상주인구 및 소방대상물이 증가로 인해 잠재적 사고 위험성이 높아질 것이므로소방력 증대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임
- 다만, 국가전략의 목표와 정부의 정책 기조를 고려할 때, 개발계획에 따른 수요와 예산, 시급성,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강화하는 것이 적절함
  - 2019년부터 최근 4년간 경기도 내 신규소방관서 신설과 소방인력·장비확충이 지속적으로 추진된 바 있고, 현 정부의 국정 운영 방침은 정원 확대보다는 조직 효율화를 목표로 하므로 단계적 접근이 필요
  - 단기적으로 수상구조대나 화학구조대를 119안전센터 내에 신설하고 인명구조를 위한 장비를 확충하여 특수사고 대응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것이 실효성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중·장기적으로는 평택항만 주변에 신규 소방관서를 신설하여 증가하는 소방수요에 대응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나타남

3-7 강원도 폐광지역 지자체 간 협력사무 발굴 및 추진방안

[주제어] 지방분권 / 지방자치제도 / 행정체제

연구책임 박재희 | **연구진** 이재용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지역 인구감소와 지역위기 심화

- 폐광지역은 급격한 인구감소 및 일자리부족, 지역 경기침체 등의 현상으로 인구구조의 변화가 지속적으로 심화되고 있음

중앙정부의 인구감소지역 지정 및 지원책 마련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및 시행령 개정(2021년 6월)으로 인구감소지역 지정 및 지원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음
- 행정안전부는 인구감소지역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통해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인구감소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행·재정적 지원안을 마련함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행정환경 변화

- 강원도 시·군들은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시행할 특례를 적용받기 위하여 공동으로 대응하고자 행정협의체를 발족하고 공동 특례 발굴을 계획하고 있음

폐광지역 지자체 간 협력사업 발굴 및 추진방안 마련

- 폐광지역 지자체 간 협력사업을 발굴하고 거버넌스 추진방안을 마련하여 폐광지역 지자체 간 협력제도 활용 및 협력사업 추진에 필요한 시의적절한 정책 자료를 제공하는 것임

2 연구의 주요 내용

폐광지역 지자체의 세출예산 비중

• 폐광지역 지자체의 세출예산 비중별로 그룹을 나누면 사회복지 및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상 그룹, 문화 및 관광, 산업 및 중소기업,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중 그룹, 수송 및 교통·보건 의료 분야는 하 그룹에 속함

분야별 협력의 필요성 순위

• 지자체 간 협력사업의 우선순위를 도출하면 문화 및 관광 분야와 수송 및 교통 분야는 상 그룹, 산업 및 중소기업,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중 그룹, 사회복지 및 일반 공공행정 및 보건의료 분야는 하 그룹에 속함

| 표 | 세출 예산 비중과 협력의 필요성

협력의 필요성 / 세출예산 비중	상	중	하
상			사회복지 및 일반공공행정
중	문화 및 관광	산업 및 중소기업, 국토 및 지역개발	
하	수송 및 교통		보건의료

협력사업 발굴 방향

• 광역적 협력사업의 구상 및 개발이 필요하며 지자체 간 시설 및 자원의 공동 활용이 요구됨

• '문화 및 관광'과 '수송 및 교통' 분야의 경우 협력의 필요성이 높아 전략적으로 협력을 실행해야 할 분야로 지자체의 세출예산 비중을 늘려가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문화 및 관광) 광업경제 비중 위축에 따른 대체산업 육성 및 관광자원 활성화 관련 지역 맞춤형 사업의 지원이 필요함. 시·군별 관광서비스의 연계와 여행사 지원 강화 등도 필요함
- (수송 및 교통) 폐광지역 접근성 향상을 위한 광역철도, 광역도로, 환승센터 등 광역 교통망 조성, 소외지역 맞춤형 교통지원, 화물운송 및 건설분야 활성화를 위한 공영 차고지 및 주기장 운영 등이 필요함

지자체 간 협력사업 추진방안

• 지방자치법을 근거로 폐광지역 지자체 간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한 추진모형을 유연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음

- 특별지자체뿐만 아니라 세부 사업별로 지자체 간 협력사업, 사무위탁, 행정협의회 설치, 지자체 조합 등의 방식을 활용해 볼 수 있음
- 지자체 간 협력 모형을 재설정하고 협력 모형에 대한 재정지원 방안 마련을 검토한 후,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각 모형별로 절차 및 내용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제공함

• 폐광지역의 광역적 협력사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형태의 협력 모형에 대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함

- 폐광지역 중심의 조례 제정보다 중앙정부 차원의 법령 제정을 통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국비 등 예산 확보에 용이할 수 있음
- 특별지자체를 새로운 형태의 지자체 간 협력제도로 고려 시 행정구역을 개편하는 작업도 고민해 봐야 할 것임
-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 시 폐광지역 개발에 대한 특례 규정을 담고 구체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음
- 특히,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시·군으로 이양 가능한 폐광지역 공통사무를 개발하고 폐광지역 기초자치단체 간 협력을 모색함
- 특별지방자치단체 등 제도적 기반 설계 과정에서 폐광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의견을 사전에 수렴하는 절차가 필요함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내 지원방안을 활용하여 지자체 간 협력사업을 추진하도록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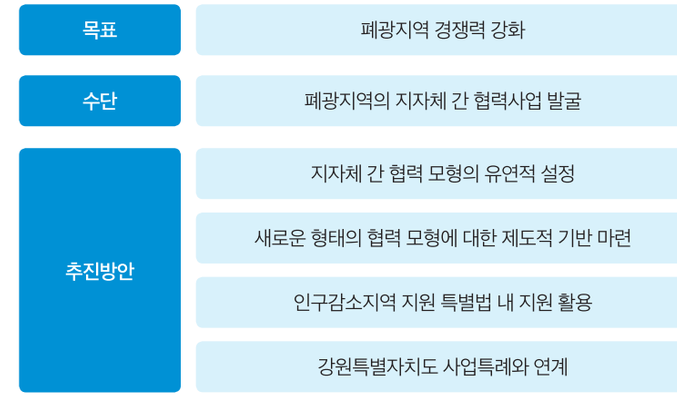
- 폐광지역 시·군은 2023년 5월말까지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준비하여 폐광지역 지자체 간 협력사업과 연계하도록 해야 함(예: 폐광지역에 방치된 석탄, 중석, 광미의 업사이클링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방안을 폐광지역 4개 시·군이 공동으로 사업화 추진)
- 인구감소지역 지원을 위한 특례 중에서 폐광지역에 적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 제·개정을 준비하도록 함(예: 수도권에서 폐광지역으로 이전하는 사람에게 공유지를 우선 매각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정비. 폐광지역 교육기반 확충을 위해 학교 설립 기준을 완화하고 유치원 및 학교를 통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 정비)
- 생활인구와 관련하여 폐광지역에 소재하는 직장에 근무하거나 학교를 다니는 경우, 관광지를 방문하여 체류하는 경우를 포함하게 됨에 따라 폐광지역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다양한 정책에 활용할 수 있음

3 연구 결론 및 기대효과 / 정책제언

• 연구 결론

- 강원도 폐광지역 지자체 간 협력사업의 추진 목표는 폐광지역 경쟁력 강화임
- 본 연구에서 제안한 폐광지역 지자체 간 협력사업 발굴 및 추진방안을 통해 인구감소지역인 폐광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함

| 그림 | 폐광지역 지자체 간 협력사업 추진(목표, 수단, 추진방안) 요약



3-8 데이터 기반 정책평가 체계 연구

[주제어] 행정체제 / 조직관리

연구책임 이병기 | **연구진** 박현욱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증거기반 정책 수립의 필요성

- 사회가 복잡·다변화되고, ICT 발전에 따른 사회문화적 환경과 삶의 행태 등이 급격하게 변화함에 따라 정책추진의 환경도 변화가 발생함
- 증거기반정책은 단순히 객관적 근거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기능적 측면의 정책추진 효과뿐만 아니라, 국민이 정부를 신뢰하는 기준의 하나로 증거기반정책의 중요성이 부각될 개연성이 증대됨
- 증거기반정책의 추진을 통하여 정책결정자들은 근거에 기반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음. 이는 증거에 기반한 정책추진을 통하여 정치적 신념이나 주관적 가치관에 의한 정책추진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함

2 연구의 주요 내용

증거기반정책 추진 논리 및 평가체계

- 증거기반정책 추진은 과학적인 데이터와 디지털 자원을 활용하여 정책을 수립하고, 정책추진 성과를 로직 모델, PDCA 정책평가 사이클에 의한 성과관리 등을 통해 최적의 정책 성과를 창출하고자 함. 이를 통해 도정의 효율성과 생산성 극대화를 추구하고자 함

- 증거기반정책의 추진에 따른 성과평가는 로직모델에 기반함
  - 로직모델은 Input(투입자원), Activity(활동), Output(활동에 의한 산출물), Outcome(정책성과) 사이의 논리적 관계를 간결하게 표현하는 도구임
- 증거기반정책에서는 로직모델을 활용하여 정책추진 과정을 논리적으로 도식화한 후, 구체적으로 정책이 어떠한 경로나 논리에 의해서 효과를 나타내는지를 목적과 수단의 관련성이나 논리성을 명백하게 파악하여 효과 검증에 활용함
- 로직 모델이 증거기반정책에 필요한 최적의 도구로 평가하는 이유는 증거기반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책 목적을 명확하게 하고, 그 정책 목적 달성에 필요한 효과적인 행정 수단이 무엇인가 등을 증거에 기반하여 명확화하는데 최적화되어 있기 때문임
- 증거기반정책의 정책평가 단계는 정책과정 단계상 정책추진의 실질적인 성과가 효과를 측정하여 평가하는 것임
  - 증거기반정책 통한 정책추진을 위해서는 그 정책의 "목적을 명확화"하고, "해당 정책에 근거가 되는 논리를 명확히" 하는 것을 전제로 함
  - 반면, 정책평가는 정책에 대한 경제성·능률성·효과성 등 정책목적에 부합하는 측정에 필요한 근거 데이터 등의 성과를 토대로 평가하는 것이 기본적인 구조임

3 연구 결론 및 기대효과 / 정책제언

양질의 행정 빅데이터 구축

- 증거기반정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빅데이터의 구축이 필수적임
- 단순히 다량의 데이터를 생산하는 것을 넘어, 정책 및 사업에 즉각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양질의 데이터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함
- 빅데이터 사용을 통한 효과적인 증거기반정책가 추진되기 위해서는 경제, 교통, 의료, 복지, 환경, 도시와 관련된 데이터의 통합적 관리가 필요함

증거기반정책을 위한 제도 정비

- 정책 과정 단계별 계획 간 연계체계 구조화를 시행할 필요가 있음
- 증거기반정책 추진을 위한 조례 재·개정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본청과 의회와의 협력이 필요함

증거기반정책 추진을 위한 조직체계 정비

- 증거기반정책의 활성화에 적합한 부서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각 유관 부서 간 협조체계의 구축과 위원회 등을 활용한 전문성을 보강하여 추진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일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증거기반정책이 갖는 특성을 고려하면 데이터, 정보정책과 시스템 운영, 통계 전문성등의 측면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는 부서에서 주관하고 관련 위원회 등을 통한 종합적인 증거기반정책 관리가 현실적인 것임

데이터 활용 인재 확보

- 공무원들의 데이터 이해 및 활용 능력을 강화하고, 실무에서 데이터를 적절하게 활용하기 위한 역량 강화 교육 프로그램 제공이 필요함
- 지역 대학·연구기관에 위탁을 통해 데이터 인재를 육성·확보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공공부문 내 데이터 인재 육성과 더불어 민간의 통계 및 빅데이터 전문가를 채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3-9 빅데이터를 활용한 문화예술사업의 경제적 효과 분석

[주제어] 지역발전 / 문화예술사업 / 경제성 분석 / 지역경제 파급효과

연구책임 이원도 | **연구진** 김민영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문화예술사업의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 필요성

- 제주특별자치도는 다양한 문화예술사업을 지원하여 지역경제 발전, 도시경쟁력 강화에 기여
  - 하지만 대부분의 문화예술사업은 소규모 지원 형태로 경제성 분석을 위한 방문객 설문조사가 부재

빅데이터를 활용한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 제안

- 사후 경제성 분석이 가능한 빅데이터를 활용한 경제적 효과 분석을 제언
  - 세부적인 방문객 특성(예: 연령대별, 성별, 거주지역)에 관한 정보획득이 용이하며, 사업개최 후 이른 시일 내 데이터 획득과 전처리 과정을 거쳐 경제적 성과지표 작성이 가능

2 연구의 주요 내용

제주 문화예술사업 현황조사

• 제주 전역의 문화예술사업 현황과 지역경제 파급효과 관련 분석기법 확인

-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정책과는 제주 전역의 문화예술사업 전반을 관리하고, 제주와 서귀포 시청 문화예술과 문화예술팀에서 각종 문화예술 행사를 기획하고 추진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 문화예술사업의 지역경제 파급효과는 소비매출액 기반 경제성 성과지표를 바탕으로 산업연관분석모형을 통해 추정

현지조사(방문객 설문조사)와 사후조사(빅데이터 활용)의 경제성 분석결과 비교

• 제주국제관악제 및 제주해비치아트페스티벌을 사례로 경제적 효과 분석을 수행

- 빅데이터를 활용한 지역경제 파급효과는 현지조사에 비해 과소추정되는 결과를 보임

3 연구 결론 및 기대효과 / 정책제언

정책제언

• 적합성 확보를 위한 빅데이터 처리 고도화

- 빅데이터를 활용한 경제적 효과 분석의 적합성 확보를 위해선 빅데이터의 더 세밀한 처리가 필요
- 행정경계(예: 읍면동)가 아닌 주요 개최지점의 일정한 범위 내 일정 시간을 체류하는 인구를 방문자로 더 정밀한 방문객 정의가 필요
- 업종별 소비매출액은 1인 기준으로 재산정될 필요가 있으며, 가맹점 지점별 매출액을 바탕으로 집계될 때 더 신뢰성 있는 분석결과 작성이 가능

• 소규모 문화예술행사를 포함한 장기적인 모니터링을 위한 제언

- 사후조사(빅데이터 활용)는 장기적으로 현지조사(방문객 설문조사)보다 객관적인 자료수집이 가능하지만 설문조사는 직접 방문한 관람객을 대상으로 개인·사회적 영향 및 만족도 조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비용을 줄이고 효과적인 정보획득이 가능한 온라인 혹은 모바일 설문조사로의 전환이 필요
- 향후 소규모 문화예술사업 경제적 효과 분석을 위해선 운영 및 성과평가를 위한 지표개발이 추가로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 지자체와 한국관광공사, 문화관광연구원 등 간의 협업이 필요하며, 상시적인 운영인력의 도입을 통해 단위사업별 정기적인 모니터링과 경제적 효과 분석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4. 정책이슈리포트

부산광역시

1) 부산형 공정관광 활성화 방안 (이소영, 박진경) 141

대구광역시

2) 직업계고 졸업생의 기업정착률 제고방안 (고경훈, 김건위) 144

인천광역시

3) '인천형' 주민참여예산제도 정립 방안 (김윤승, 전성만) 146

대전광역시

4) 효과적인 어린이공원 이용을 위한 권역형 공원화 사업 방안 (이제연, 김도형) 150

울산광역시

5) 울산광역시 고향사랑 기부금 답례품 선정에 대한 연구 (전성만, 신두섭) 153

세종특별자치시

6) 세종 반려동물 미래 신성장 산업 육성방안 마련 (전대욱, 김해솔) 156

강원도

7) 강원도 주민제안 활성화 연구 (전대욱, 최인수) 159

충청북도

8) 소방활동의 사회·경제적 효과 분석 연구 (윤소연, 여효성) 162

충청남도

9) 성과중심의 지역균형발전사업 평가지표 개발 및 분석체계 연구 (박진경, 이소영) 166

전라북도

10) 전라북도 지방자치(도·시군)-교육자치(교육청) 협력사업진단 및 발전방안 (김성주, 김진) 170

경상북도

11) 신산업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 설립 검토 (이병기, 고경훈) 174

제주특별자치도

12) 제주지역 양돈산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분석 (전대욱, 최인수) 176

4-1 부산형 공정관광 활성화 방안

[주제어] 지역발전 / 지속가능발전 / 지역사회·공동체

연구책임 이소영 | **연구진** 박진경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환경파괴적인 대중관광에서 지역주민이 만족하는 뉴투어리즘으로 패러다임 변화

- 특정지역에 관광객이 집중되어 지역사회에 피해가 발생하는 오버투어리즘 문제 발생
  - 지역사회에 피해를 끼치지 않고 지역주민도 만족하는 지속가능한 관광 전환 필요

지역주민이 함께 하는 공정관광 정책 도입 필요

- 부산시는 2021년 부산광역시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하며 추진기반 마련
  -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5년 단위로 공정관광의 육성 및 지원계획을 수립해야 함
  - 지원계획 수립 및 사업 추진에 앞서 공정관광 정책동향 및 국내외 사례조사 등을 실시
- 감천문화마을 등 사례조사를 통해 지역주민이 함께 하는 공정관광 정책 도입 방안 제안

2 연구의 주요 내용

공정관광 관련 정책 동향 분석

- 국내 공정관광은 2007년 12월 이매진피스가 공정여행 가이드라인을 개발하면서 도입
  - 2007년 사회적기업육성법이 제정되면서, 관광분야에서는 공정여행사가 사회적기업으로 지정

- 2010년 공정거래법이 개정되면서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촉진을 위하여 관광분야의 불공정거래행위 등도 금지하며, 여행사와 관광객간 공정한 거래문화 조성 노력
- 2010년 한국관광공사는 공정여행 움직임을 확산하기 위해 공정여행 공식 블로그 개설
- 2019년 국내에서도 오버투어리즘 문제가 대두되면서, 관광진흥법을 개정, 제48조의3(지속가능한 관광활성화)에 지역주민의 삶과 균형을 이루며 지역경제와 상생발전할 수 있는 관광 추가

• 자치단체로서는 2017년 대전광역시가 처음 공정관광 조례를 제정한 이후, 전북, 제주, 경기, 서울, 경북 등에서는 공정관광 조례 제정

- 광역자치단체 중에서는 10개 단체가, 기초자치단체 중에서는 14개 단체가 공정관광 조례 제정

자치단체의 공정관광 정책사례

• 조례 제정은 2020년에 이루어졌지만, 서울시의 공정관광 운영 경험이 오랜 역사를 지님

- 2016년부터 서울공정관광포럼을 개최하며, 과잉관광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
- 2018년에는 제7차 UNWTO 세계도시관광총회와 연계하여 세계적 관광도시들과 협약 체결
- 서울관광재단과 세계관광기구(UNWTO)의 공정관광캠페인도 공동 진행
- 대표적 오버투어리즘 장소이기도 한 북촌한옥마을을 사례로도 다양한 공정관광 캠페인 추진

• 제주도는 2007년 제주올레길 탐방 시작으로 공정여행의 실제 프로그램이 운용되기 시작

- 관광객 증가로 인한 혜택이 지역주민에게 환원되지 않는 문제로 공정관광 이슈 등장
- 관광객, 주민, 여행지 모두가 만족하는 공정여행 추진을 위해 다양한 사회적 기업들이 활동중

• 산티아고 순례자의 길, 이탈리아 베니스와 일본 시라카와촌 사례 분석을 통해 함의 도출

3 연구 결론 및 기대효과 / 정책제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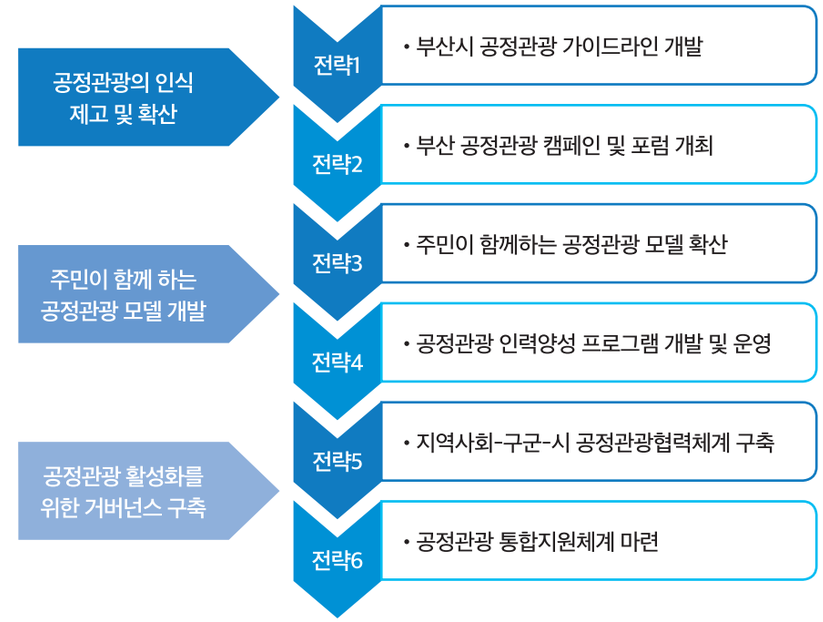
부산시 공정관광 활성화를 위한 기본방향

• 부산시 공정관광 육성을 위한 기본방향으로 ① 공정관광의 인식 제고 및 확산, ② 주민이 함께 하는 부산형 공정관광 모델 개발, ③ 공정관광 활성화를 위한 거버넌스체계 구축 제시

부산시 공정관광 활성화를 위한 추진전략

• 공정관광 활성화를 위한 기본방향에 대응하는 2개 추진전략을 6개 전략으로 다음과 같이 제안

| 그림 | 기본방향 및 추진전략



4-2 직업계고 졸업생의 기업정착률 제고방안

[주제어] 지역경제 / 일자리 / 지방자치

연구책임 고경훈 | **연구진** 김건위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 일자리 부족 현상과 병행하여 지역 간 교육격차와 함께 수도권·비수도권 일자리 불균형이 발생. 연구개발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SKY대학에 필적하는 거점 국립대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듯이 생산 현장 인력의 양성과 역외유출 방지를 위해 직업계고에 대한 정책적 관심과 지원이 필요함

2 연구의 주요 내용

- 산업현장 맞춤형 심화교육의 현실적합성 제고방안으로 직업계고 지원프로그램의 통합적 활용, 직업교육혁신지구 사업의 다변화 추구, 직업계고 구조개혁을 통해 마이스터고나 IT관련 학과 비중확대, 직업계고 학점제와 연계한 교육과정 운영의 신축성 제고, 직업계고 학과개편 우수사례의 적극적 벤치마킹, 직업계고에 기업맞춤형 계약학과를 도입, 지역사회와 연계한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운영 등을 제시하였음
- 고졸 사원의 초기 기업적응력 제고방안으로 직업계고 예비졸업생을 대상으로 인성캠프와 시민교육 제공, 선취업 후진학에 주력하는 정책기조의 완결성 확보, 기업의 조직문화 혁신과 인사노무관리 선진화를 유도, 직업계고 출신 18~23세 취업자의 업무배치요령 전파, 사무직 여성 감정노동자의 취업유지율 장애요인 제거, 조직융합 마인드를 증진하는 교육기회의 확대, 직업계고 학생들의 이직요인에 대한 맞춤형 대책의 강화 등을 제시하였음

3 연구 결론 및 기대효과 / 정책제언

- 직업계고 졸업자의 취업률과 기업정착율 제고방안에 관한 연구성과는 일반계고는 물론 대학 인문사회계열 졸업자에게도 확대 적용이 가능함
- 직업계고 졸업자의 취업률과 기업정착율이 저조한 원인에는 군대와 진학이 핵심 변수로 작용해 왔음. 따라서 일·학습 병행이라는 정책목표 확산대상을 직업계고 졸업생을 초월해 보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일반화도 필요함

4-3 ‘인천형’ 주민참여예산제도 정립 방안

[주제어] 주민참여 / 지방예산회계 / 지방자치제도

연구책임 김윤승 | **연구진** 전성만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주민참여예산사업의 성과(현황)파악 및 활성화 방안 모색 필요

- 2011년 개정된 「지방재정법」 제39조를 통해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의무화된 이후 주민참여예산 제도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확대되어 왔으며 최근 주민참여 범위가 예산과정 전반으로 확대
- 인천광역시 주민참여예산의 경우 2013년 본격적 도입 이후 사업 및 예산 규모에 있어 비약적 성장을 이루었으나 제도의 실효적·지속적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해 운영성과에 대해 분석하고 개선 방안 모색이 필요한 시점임

2 연구의 주요 내용

인천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현황

- 인천광역시 주민참여예산은 2022년까지 사업 수와 예산반영 규모에서 양적으로 성장하여왔으며 제도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사업유형 및 절차 측면에서 제도적 노력을 지속함
  - 2022년 확정된 주민참여예산 사업 건수는 397건이며 예산반영 규모는 485억 원으로 증가함

  - 사업유형은 2021년 5개 유형에서 2022년 3개 유형(참여형, 협치형, 주민자치회형)으로 개편되어 운영 중
  - 추진절차는 일반적인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방식을 따르고 있으며 지원조직의 경우 참여예산기구 기능강화 지원을 위해 ‘주민참여예산지원협의회’와 ‘주민참여예산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운영

인천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도 적정성 분석

- 인천광역시 주민참여예산의 사업유형(개편)은 시민참여 활성화 및 저변확대를 위한 제도적·정책적 지향점에 부합하는 것으로 사료되나 제도 운영방식의 개선 필요
  - 운영 중인 사업유형은 주민참여 및 지역 행정수요 충족(참여형), 민관 거버넌스 체계의 협력·숙의를 통한 사업 품질 향상(협치형), 마을밀착형 사업 발굴 및 주민자치 네트워크의 활용(주민자치형)의 강점을 가짐
  - 다만, 참여형의 경우 단년도 사업 성격이 강하여 장기적 지역수요 및 지역현안에 근본적 대응 한계, 협치형은 일부 시민(단체)과 사업부서 간 거버넌스 체계가 지나치게 공고하여 발생하는 공정성 및 투명성 문제, 주민자치회형의 경우, 구·군 참여예산제도와의 중복성 문제 등이 존재함
- 인천광역시 주민참여예산의 규모는 비약적으로 증가하였으나 총예산 대비 참여예산 반영비율을 고려하면 규모 자체가 과도하다고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사회적 합의를 통해 조정필요
  - 참여예산 반영액은 2022년 485억 원으로 타 광역시와 비교 시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다고 볼 수 있으나 주민제안 건수(주민수요) 증가 경향과 주민 시정참여 및 주권 강화라는 측면에서 총예산 중 참여예산의 비중이 1%도 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규모 자체가 과도하다고 판단하기 어려움
- 인천광역시는 사업심사 및 선정 절차 강화를 위해 운영기구를 설치하고 숙의과정 강화를 시도하였으며 참여예산제도를 예산집행 및 결산까지 확대하고자 노력하였으나 개선 필요 영역이 존재함

- 사업제안 및 심사과정에서 정보공개 및 공유 미비, 사업유형별 관리부서 상이 및 주민참여예산위원의 심사 권한 부재, 심의과정에서 숙의 과정 부족, 지원조직의 효과적 지원 부재 등의 문제가 존재
- 사업집행 및 평가·결산 절차에 대한 제도적 틀을 갖추어 가고 있으나 형식적 모니터링, 결산 및 평가 내용에 대한 환류 미비 등 실질적 참여 및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개선 필요

인천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도 개선방안

• (사업유형) 주민참여예산의 기본방향 및 유형특성을 고려하였을 때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나 제도의 실효성 확보 및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해 3가지 개선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1안) 2022년 시행된 주민참여예산의 3가지 유형을 유지하는 방안: 빈번한 유형 변경으로 인한 혼란을 막고, 각 유형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운영방식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편
- (2안) 주민자치회형을 폐지하고 참여형과 협치형으로 운영: 주민참여 및 호응도가 높은 참여형, 거버넌스 체계 및 숙의·공론화를 통한 협치형 유지 - 광역단위에서 운영·지원가능한 부분에 집중하여 효율화 가능
- (3안) 2022년에 운영되던 유형을 통폐합하여 참여형으로 단일화: 제도 운영의 초점을 주민 참여 사업에 맞추고 효율적인 관리 가능, 주민 혼란 감소 및 관리체계 단일화

• (예산규모) 주민참여예산 규모는 여러 가지 조건을 고려하였을 때 적정한 것으로 보이나 정치적 합의를 통해 조정할 필요가 있으며 운영에 있어 내실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지속적인 규모 확장보다는 지금까지 확장된 예산 규모를 활용하여 제도의 내실화를 추구할 필요가 있으며 추후 자치단체장, 시의회,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일반시민 사이의 토론 등을 통해 적절한 참여예산 규모에 대한 합의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주민 수요의 실질적 반영, 공정하고 투명한 주민제안 사업의 선정 및 심의,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서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사업 유형별 주민참여예산 배분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절차) 사업과정 전반에서 투명성·공개성을 높일 필요가 있으며 일반시민 등 주민참여 확대를 위한 방안 강구

- 사업발굴 및 제안과정에 참여하는 주민 및 예산위원에 정보공개 확대(빅데이터 등 활용), 숙의를 위한 온라인 플랫폼 제공, 사업제안 부적정자 스크리닝 및 예산한도 (실링)폐지, 컨설팅 확대 필요
- 사업심사·선정과정 투명하게 공개(트래킹시스템 구축), 숙의과정 실효성 확보를 위한 지원, 제안서 탈락 이유 상세히 명시하고 워킹그룹을 통해 사업실현가능성 검토, 제안사업 간, 타행정서비스와의 연계 모색필요
- 선정사업 추진에 대한 모니터링에 주민참여 확대 및 제안자가 집행 및 평가에 직접 참여하는 방안 고려

3 연구 결론 및 기대효과 / 정책제언

연구결론

• 인천광역시 주민참여예산은 사업유형, 규모, 절차 측면에서 적절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유형 및 절차에 있어서 개선의 여지가 존재하므로 제시된 개선방안을 참고하여 제도 보완이 필요

기대효과

• 본 연구는 향후 인천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가능함

- 본 연구는 인천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최근 운영 현황 파악 및 성과 분석을 통해 제도 운영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확인함
- 타시도 등 국내사례와 국외사례를 통해 주민참여예산 개선을 위한 시사점 도출
- 인천형 주민참여예산제도 모형 정립, 참여예산 절차별 개선방안 모색으로 제도의 질적 향상 도모 가능

4-4 효과적인 어린이공원 이용을 위한 권역형 공원화 사업 방안

[주제어] 지역발전 / 지속가능발전

연구책임 이제연 | **연구진** 김도형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저출산, 고령화 현상의 심화로 어린이공원의 기능과 활용도 제고 필요

- 어린이공원은 주거지와 가깝고 접근하기 쉬워 다양한 연령대의 수요가 존재하지만, 「도시공원법」에 따라 어린이를 중심으로 하는 시설로 조성
  - 저출산 현상에 따라 주 이용자인 어린이의 이용률 감소와 노후화되어 다양한 기능과 목적을 위한 리모델링이 요구
- 저출산 현상, 급속한 고령화 등과 같은 문제를 인지하여, 여전히 어린이공원은 어린이만을 위한 곳이라는 사고방식을 벗어날 필요가 있음

2 연구의 주요 내용

어린이공원 사례 조사

- 최근 어린이공원 신규조성 및 리모델링 사례를 4개 유형, 31개 조사
  - ① 어린이만을 고려한 놀이터 중심형 공원, ② 다양한 기능이 집약된 공원, ③ 연계형 공원, ④ 노인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공원

대덕구 어린이공원 현황 및 생활권별 특성

- 어린이공원은 총 49개소로 47개소가 조성 완료되었고, 2개소는 조성 중
  - 어린이공원은 대덕구의 북쪽인 신탄진 지역과 남서쪽인 오정, 남동쪽의 송촌지역에 집중 설치
- 대덕구의 생활권은 4개(신탄진권, 연축권, 오정권, 송촌권)의 권역으로 구분되며, 권역별 인구와 지역적 특징을 분석

권역형 공원화 가능 후보지 도출

- 어린이공원 서비스권역과 인구구조(유소년 및 고령자)를 고려, 연계가능한 후보지와 정비 방향(어린이 특화형, 전세대 대상형)을 제시

3 연구 결론 및 기대효과 / 정책제언

신탄진권 어린이공원 연계 가능 후보지

- (전세대 대상) 석봉 어린이공원 - 망골 어린이공원
  - 신탄진초등학교와 연계 가능하고, 석봉동은 유소년과 고령자 비율이 동시에 높은 지역으로 어린이를 포함한 모든 세대가 이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비
- (어린이 특화) 여태말 어린이공원 - 목상 어린이공원
  - 목상초등학교와 연계 가능하고, 목상동은 고령자 비율이 높은 지역이지만, 해당 공원이 있는 지역은 유소년 비율이 높고, 고령자 비율이 낮아 어린이 놀이터에 특화하는 방향으로 정비
  - 특히, 정비 시 목상초등학교 서쪽에 연접해 있는 목상근린공원과의 연계를 고려

송촌권 어린이공원 연계 가능 후보지

- (전세대 대상) 다정 어린이공원 - 보라 어린이공원 - 미래 어린이공원

- 세 개의 어린이공원이 소재하는 중리동은 상가와 주거(아파트, 다세대)밀집지역으로 고른 연령대로 구성되어 있어 모든 세대가 이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비

• (어린이 특화) 여수금 어린이공원 - 진가쟁이 어린이공원 - 상수골 어린이공원

- 송촌초등학교와 연계 가능하고, 유소년 비율이 높은 주거(아파트)밀집지역으로 어린이 놀이터로 특화하여 정비

오정권 어린이공원 연계 가능 후보지

• (전세대 대상) 통매바위 어린이공원 - 봉촌 어린이공원

- 화정초등학교와 연계 가능하고, 고령자 비율이 높은 오정동의 특성상 편의시설과 쉼터 등 고령자 중심의 정비방향을 설정
- 초등학교와 가까운 통매바위 어린이공원은 놀이 기능 중심으로 정비하고, 효성공원을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가 필요

4-5 울산광역시 고향사랑 기부금 답례품 선정에 대한 연구

[주제어] / 고향사랑 기부금 / 답례품 / 지역발전

연구책임 전성만 | **연구진** 신두섭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2023년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에 따른 울산광역시의 대응 필요

• 비수도권 입장에서는 지역 인재들이 고장으로 돌아와 기여하는 선순환 직업구조 내에서지속가능한발전 방향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현실

• 고향사랑기부제는 지역 내 인구 뿐만 아니라, 지역의 관광 및 방문으로 연계된 생활인구(관계인구)를 연결해주는 제도로 울산광역시의 자생적 발전전략의 중요한 제도임

농산어촌 특산물 없는 도심지역의 답례품 선정전략의 필요

• 고향사랑기부제도는 지방자치단체 처지에서는 기부금이 세외수입(기금)으로 광역시 재정에 긍정적 영향을 줌과 동시에, 답례품 수여는 지역 내 생산자들의 상품으로 구성할 수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음

• 울산광역시의 경우, 울주군 이외에 농·산·어촌의 소속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하고 있지 않아, 상대적으로 답례품 선정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선정전략 모색 필요

2 연구의 주요 내용

일본의 주요도시 답례품 운영 시사점 도출

- 지역의 특산물 중심의 답례품 구성(가공품과 제조품의 조화)
  -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축산물의 가공품 중심의 답례품 구성
  - 지역에서 제조되는 제조품 중심으로 답례품 구성
- 납세금 수준에 따른 가격대별 답례품 구성
  - 납세자들의 납세금 기준에 따른 다양한 가격대의 답례품 구성
  - 가격대별로 다양한 품목을 설정하여, 납세답례품 내에서 다양한 선택 가능
- 지방자치단체 이미지를 브랜딩하는 답례품 구성
  - 와카야마현 태지촌은 고래를 지방자치단체의 이미지화하여, 제조품을 고래중심으로 답례품 구성
  - 다양한 가격대 구성하여 답례품 수집의 유인 유도
- 답례품별 기한, 한정판 등 답례품의 가치를 부여하여 수요 유발
  - 고향납세답례품 한정판, 계절성의 과일 등의 답례품을 구성하여 납세자들로 하여금 수요 유인 유도

지역자원 기준을 활용한 울산광역시의 답례품 발굴

- 지역자원 기준에 기초한 단계별 유형화 검토
  - (1단계) 답례품의 유형과 품목 선정에 있어 시행 초기에는 계절성, 고정성, 유한성, 보존형의 답례품 유형화를 통해 답례품 검토
  - (2단계) 답례품의 유형구분을 위해, 일본 민간 포털사이트 답례품과 비교하여 17개 유형 구분
  - (3단계) 답례품의 유형과 품목 선정에 있어 항시성, 이동성, 무한성, 개발성 등을 고려하여 각 유형별 답례품으로서의 발굴 우선순위 정함

- 가격대별, 향후 시계별 답례품 검토
  - 울산광역시가 제안해준 347개 품목을 유형화 (17개구분), 우선순위를 정한 후 시계별 (단기, 중기, 장기)의 품목 127개 품목을 울산광역시 답례품으로 추천

3 연구 결론 및 기대효과 / 정책제언

향후 울산광역시 답례품 선정 시 활용

- 단기적 및 중장기적 측면에서 답례품 발굴을 해 나간다면 단기적(6개월: 2023년 상반기)에는 4가지 성격이 10점 이상인 유형의 답례품을 가능한 많이 발굴하며, 중장기적(2023년 하반기 이후)에는 단계적으로 나머지 유형의 답례품을 발굴하는 것 (꾸러미 형태나 패키지 형태)도 검토가 필요
  - 답례품 공급의 안정성, 기부자들의 답례품 선호도나 만족도, 품질 및 제도 운영과 관리의 수월성 등 요소를 고려할 경우, 선정 과정에 있어 고려 요소가 더 추가될 필요가 있을 것임

4-6 세종 반려동물 미래 신성장 산업 육성방안 마련

[주제어] 지역정책 / 지역발전 / 지역경제·일자리

연구책임 전대욱 | **연구진** 김해솔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반려동물 관련 제도의 시행과 함께 지자체 수준의 대응 필요

- 반려인구 및 연관산업의 성장과 함께 관련 제도가 발전하고 있음
  - 반려인구는 전국적으로 1,500만 명을 상회하고 있고, 최근 반려동물 등록제 및 안전관리, 동물복지 등 관련 법제의 개선과 함께 제도적인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음

세종특별자치시의 반려동물 관련 산업생태계의 발전방안을 논의

- 전국 자치단체에서의 반려동물 관련 투자가 지속되고 있음
  - 2015년을 전후로 전국 광역 및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는 반려동물 테마파크, 반려동물센터, 반려동물 문화센터 등의 명칭으로 대규모 반려동물을 위한 산업 육성방안을 추진 중
- 본 연구는 세종특별자치시의 반려동물 관련 현황과 산업생태계 육성방안을 논의함
  - 세종특별자치시의 반려동물과 관련산업의 현황 파악을 통해 반려동물 관련 수요를 예측하고,
  - 반려동물 산업을 통한 지역경제의 중장기적 발전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세종특별자치시의 정책자료로 활용하는 데에 있음

2 연구의 주요 내용

반려동물 및 관련 법·자치법규 및 제도 현황

- 전국 및 세종시 반려동물 관련 제도 현황
  - 동물보호법 등 반려동물의 정의 및 범위, 동물등록제, 반려견 안전조치 의무, 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 유기·유실동물을 위한 동물보호센터 등 반려동물 관련 제도 개괄
  - 세종특별자치시 동물보호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반려동물 보호 및 반려문화 조성 지원 조례 등에 제시된 세종시 반려동물 관련 제도 현황

세종시 반려동물 관련 산업현황 및 수요예측

- 세종시 반려동물 관련 산업생태계 및 인적자원 현황
  - 세종특별자치시의 반려동물 연관산업 현황: 동물병원, 동물생산업, 동물수입업, 동물판매업, 동물전시업, 동물위탁관리업, 동물운송업, 동물미용업, 동물장묘업 등
  - 반려동물 관련 교육 및 인력 현황: 반려동물 관련 대학 학과, 실업계 고등학교 현황, 평생교육과정(50~69세를 대상으로 펫시티 전문가 양성과정 등)
- 세종시 반려동물 수요 예측
  - 반려동물 및 반려동물 양육가구의 현황, 향후 중장기적인 양육가구 증가추이 분석 등
  - 반려인 법·제도 인식 현황, 반려인의 니즈 및 홍보 등

반려동물 관련산업에 대한 자치단체의 육성에 관한 우수사례 분석

- 동물복지 관련 분야의 벤치마킹 사례
  - 서울 동물복지 지원센터, 경기도 동물보호·복지 플랫폼, 전북 전주시 유기동물 재활센터, 부산광역시 반려동물 복지문화센터 등
- 동물문화 및 산업육성 관련 분야의 벤치마킹 사례
  - 강원도 춘천시 반려동물 산업육성 종합계획 및 반려동물 플랫폼센터, 춘천시 소재 민간 반려동물 문화시설 강아지숲(반려동물 놀이터) 사례 등

- 울산광역시 반려 친화도시 조성사업, 애니언 파크(반려동물 문화센터, 민간위탁), 애니언페어(Anian Fair, 울산 반려문화산업 박람회) 사례
- 경북 의성군 펫월드(반려동물 문화센터), 대전광역시 반려동물공원, 경기도 반려동물테마파크(2023년 예정), 경기도 기초자치단체의 반려견 놀이터 조성(23개소), 제주특별자치도 반려동물 문화축제 사례 등

• 기타 반려산업 관련 분야의 벤치마킹 사례

- 서대문구 & SH 서울주택도시공사의 반려 1인가구 임대주택 '견우일가' 조성, 서울특별시 유기견 안심보험 지원사업 사례 등

3 연구 결론 및 기대효과 / 정책제언

세종시 반려동물 관련 산업생태계 육성을 위한 정책 추진방안 제언

• 반려동물 보호·문화 특화단지 조성 방안

- 세종특별자치시 차원의 반려동물 복합시설의 전략적 추진, 관련 벤치마킹 사례, 반려동물 복합시설의 조성을 위한 추진시 고려사항 등

• 반려동물 관련 산업육성 및 지원, 일자리 창출 관련 추진 방안

- 민간부문 관련 업체의 세종시 차원의 유치 및 지원·관리, 관련 산업 지원 및 홍보 등을 위하여 세종시 차원에서 다양한 행사 및 이벤트(반려동물 문화축제 등)의 개최
- 산업의 인적, 기술적 지원과 체계적인 교육을 위한 교육기관과의 협력(MOU 체결 등), 교육기관 및 관련 업체를 연계한 거버넌스 구조의 마련을 통한 산업생태계 전반의 협치구조의 마련
- 민간부문 업체 및 일자리 증가에 따른 고용서비스 확충, 반려동물 관련 산업의 창업 촉진정책 방안 등
- 반려동물 산업육성과 관련 한 전담조직(T/F팀 구성) 검토, 반려동물 관련 산업 지원을 위한 재원 마련시 고려사항 등

4-7 강원도 주민제안 활성화 연구

[주제어] 주민참여 / 행정혁신 / 스마트지방행정

연구책임 전대욱 | **연구진** 최인수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참여민주주의 확산에 따른 도민의 도정참여 및 제안제도 활성화 필요

• 제안제도에 대한 도민의 접근성·관심도 제고를 위한 연구 필요

- 우수한 제안에 대한 참여율 및 제안 채택률의 제고 방안, 관련 부서 담당자의 심사·평가의 부담감 저감 및 인센티브 확대 등 활성화 방안 마련 필요

강원도 제안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 전반의 개선에 관한 연구

• 강원도 제안활동 참여, 채택 및 사후관리 활성화 방안 연구

- 본 연구는 강원도민·공무원 우수제안의 도정 반영을 통한 행정업무 혁신을 촉진하고, 강원도의 주민제안 활성화 방안 및 각 실·국의 제안업무 추진 기반으로 활용하는데 있음
- 도 제안활동 참여도 제고를 위한 홍보 및 전문성·창의성 제고방안, 심사·평가 활성화 방안, 채택제안에 대한 사후관리 및 인센티브 부여방안 등 연구

2 연구의 주요 내용

도정참여 및 주민제안에 관한 이론 및 선행연구 리뷰

- 정책과정에서의 주민 참여(Participation)에 관한 이론적 접근
  - 정책과정에서 참여(Participation)의 의미와 수준
  - 대중참여와 사회혁신: 사회적 가치의 구현 측면에서 참여의 중요성
- 국가수준에서의 제안제도의 이론 및 쟁점
  - 대중(국민·시민·주민) 참여의 제도적 정의, 민주적 참여제도 및 제안제도의 현황
  - 제안제도의 쟁점: 공익성 및 신뢰도 저하, 획일적인 참여제도 운영방식의 문제, 제안제도의 혁신성 문제 등

주민제안 제도에 관한 국가 및 강원도의 현황과 성과

- 국가수준에서의 제안제도의 현황과 운영
  - 국민 및 공무원 제안에 관한 중앙정부의 제도 및 운영 현황
- 강원도 및 관할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제안제도 현황과 성과
  - 강원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및 운영체계, 관할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참여제도 등 제도적 현황에 관한 리뷰
  - 강원도정에 관한 우수제안, 강원 톡톡 Idea 공모전(주민 대상), My Job Idea 공모전(공무원 대상) 등 제도운영 현황 및 성과

국민·주민 참여제도 운영에 관한 국·내외 사례분석

- 국내 지방자치단체 운영 국민·주민 참여제도
  - 경기도 경기도민 정책축제, 대구광역시 대구시민원탁회의, 제주특별자치도 DSI 가치더함, 광주광역시 광주시민총회 등 국내 우수사례 분석

- 해외 국민·주민 참여제도
  - 캐나다 시민의회(Citizen Assembly), 스웨덴 스터디 서클(Study Circle) 등 해외사례 분석
-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제안제도 인센티브 운영 현황
  - 부산광역시, 전라북도, 경기도교육청, 경북 의성군, 경북 예천군, 전남 해남군 등 국내 광역·기초지방자치단체의 제안제도 인센티브 운영 사례 분석

3 연구 결론 및 기대효과 / 정책제언

강원도 제안제도 활성화를 위한 제안, 채택 및 사후관리 방안에 대한 제언

- 강원도 제안제도 홍보의 다각화 필요
  - 강원도 제안제도 활성화를 위한 정보서비스 고도화 방안, 다각화된 SNS별 홍보전략, 주민센터·공공기관에 홍보물 제작 및 비치 등 다양한 홍보전략 제안
- 제안제도 심사위원회의 전문성 강화 및 고도화
  - 제안심사의 객관성·신뢰성 제고를 위한 조례개선 및 제안심사위원회 재구성의 지속적 추진, 지역내 학계·현장활동가 등 전문가 풀(Pool) 구성 및 민간위원 참여촉진 방안 등
- 제안 주제의 구체화·세분화를 통해 제안의 질적·양적 만족도 제고
  - 제안의 구체성 확보를 위한 제안 필요부서의 제안 범주의 명확화 방안, 제안자의 구체적·심층적인 제안을 위한 제안 주제에 관련 행·재정적 정보제공 방안 등 제안
- 제안제도 심사·채택 참여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제도 활성화
  - 제안 채택률 제고를 위한 담당 공무원 인센티브 부여 방안, 주민소통·협업 촉진을 위한 주민참여예산제 활용 및 인센티브 부여 방안, 제안활동 참여에 따른 마일리지 제도 운영방안 등 제안

4-8 소방활동의 사회·경제적 효과 분석 연구

[주제어] 지역발전 / 지역정책

연구책임 윤소연 | **연구진** 여효성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소방활동에 대한 정량적 가치 평가를 통한 사회적 인식 제고 필요

- 소방은 사회적 손실 예방 및 안전사회 구현에 직접적으로 기여함에도 불구하고, 분야의 특성상 활동에 따른 손실 절감 효과나 피해 예방 효과에 대해서는 관심이 저조함
  - 위기 대응을 중심으로 하는 소방 분야의 특성상 소방활동의 결과가 피해 규모로만 집계되기 때문
- 소방활동 성과에 대한 정량적 평가를 통해 소방 활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필요
  - 소방활동으로 인한 재산 및 인명피해 감소 효과를 정량적으로 추계하여 소방 안전에 대한 체계적인 투자 및 정책 마련의 필요성 환기 필요

2 연구의 주요 내용

충청북도 소방활동 현황 분석

- 충북 도내 화재 발생건수, 구조 및 구급활동 실적 분석(2017년~2021년)
  - 2021년 충북 도내 화재 발생 건수는 1,382건이며, 10년(2012년~2021년) 평균 기준 매년 약 1,426건, 일일 평균 3.9건의 화재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남

  - 최근 5년(2017년~2021년)의 충북 도내 구조 출동 및 처리 건수는 증가추세로 2021년 기준 일일 평균 85.3회 출동하여 매일 8.4명을 구조한 것으로 나타남
  - 최근 5년(2017년~2021년)의 충북 도내 구급활동 실적을 분석한 결과 매년 평균 103,330건의 출동을 통해 평균 61,773건 63,668명의 환자를 병원에 이송한 것으로 나타남

사회·경제적 효과 추정 방법 사례 검토

- 소방활동의 사회·경제적 효과 추정 방법의 개념 및 범위
  - 소방활동에 따른 사회·경제적 효과 산정은 소방활동이 행해지지 않았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예상 손실에 대하여 조치가 행해진 이후에 발생한 손실을 비교함으로써 산출할 수 있음
- 경제적 손실비용 산정 관련 연구
  - 화재로 인한 물적피해는 소방청훈령 제45호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에 따라 직접적 손실만을 산정함
  - 인적피해에 대한 손실비용은 손해배상에 근거하여 보험의 보상급여를 기준으로 산정하거나, 상실수익액을 기준으로 피해자의 기대 수익액을 현재가치로 환산하여 산정하는 방식이 활용될 수 있음

소방활동의 사회·경제적 효과 분석

- 화재진압 활동의 사회·경제적 효과 추정 결과
  - 충북에서는 5년간(2017년~2021년) 총 7,467건의 화재가 발생했으며, 화재진압 활동에 따른 재산피해 경감액은 총 4조 1,129억 5천 8백만 원으로 화재진압 활동 1건당 평균 약 5억 5천 1백만 원의 재산피해를 경감한 것으로 분석됨
- 구조활동의 사회·경제적 효과 추정 결과
  - 충북에서는 5년간(2017년~2021년) 총 18,406명을 구조하였으며, 사망보험료를 기준으로 피해경감액을 추정한 결과 구조자 1인당 평균 약 1억 3천 7백만 원의 손실을 예방한 것으로 분석됨

- 상실수익액 기준 구조활동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연평균 약 5,567억 3천만 원으로 5년간(2017년~2021년) 총 2조 7,836억 5천만 원의 피해를 절감한 것으로 분석됨
- 119구조대의 총운영경비는 연평균 약 130억 2천 5백만 원으로 119구조대 운영경비 대비 구조활동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사망보험료 기준 약 21.1배, 상실수익액 기준 약 42.7배인 것으로 나타남

• 구급활동의 사회·경제적 효과 추정 결과

- 충북에서는 5년간(2017년~2021년) 구급활동을 통해 총 318,340명을 구급·이송하였으며, 이 중 사망 또는 심각한 후유장해가 예상되는 응급환자(총 84,995명)에 대하여 사망보험료를 기준으로 피해경감액을 추정한 결과 1인당 약 4천 7백만 원의 손실을 예방한 것으로 분석됨
- 상실수익액 기준 구급활동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연평균 약 3조 3,158억 9천 4백만원으로 5년간(2017년~2021년) 총 16조 5,794억 6천 8백만 원의 피해를 절감한 것으로 분석됨
- 119구급대의 총운영경비는 연평균 약 231억 2천 3백만 원으로 119구급대 운영경비 대비 구급활동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사망보험료 기준 약 34.8배, 상실수익액 기준 약 143.4배인 것으로 나타남

3 연구 결론 및 기대효과 / 정책제언

결론 및 정책제언

• 본 연구에서는 최근 5년간(2017년~2021년) 충북 도내 소방활동(화재진압·구조·구급)의 경제적 가치를 추정하였음

- 지난 5년간(2017-2021) 충북 도내 화재·구조·구급의 소방활동에 다른 손실예방액은 연평균 1조 9,030억 4백만 원~4조 6,952억 1천 6백만 원으로 총 지출액 대비 약 18.9배~46.5배인 것으로 나타남

• 소방은 시민의 안전과 삶의 질에 직결되는 필수적인 공공서비스로써 소방활동의 사회·경제적 효과를 분석하는 것은 국가 및 지역의 공적 책무성을 확보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함

• 소방활동의 사회·경제적 효과를 객관적으로 추정하고, 산출된 결과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분석 방법론을 확립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함

- 이를 위해 정량적 가치 산정에 필요한 세부적인 기초자료를 작성·축적하는 것이 필요하며, 노동, 산업, 교통, 보험 등 다양한 기관과의 연계·협력을 강화해갈 필요가 있음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소방활동 현황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소방안전대책 수립을 유도하고, 장기적인 화재·안전사고 피해경감 및 안전사회 구현 가능

• 소방활동의 가치와 경제적 효과를 확인함으로써 국민과 사회로부터 신뢰받는 소방 이미지 제고 및 소방정책의 중장기적 목표 수립 지원 가능

4-9 성과중심의 지역균형발전사업 평가지표 개발 및 분석체계 연구

[주제어] 지역발전 / 지역경제 / 기타(균형발전)

연구책임 박진경 | **연구진** 이소영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충남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에 의한 2단계 지역균형발전사업의 추진

- 2007년 충남은 전국 최초로 충청남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2008년 자체 균형발전특별회계 설치
  - 조례에 근거하여 충남 지역균형발전사업 지원대상 지역은 시군별 발전수준을 분석하여 선정
  - 시군별 발전수준은 17개 지표별 표준화점수를 합한 값이 낮은 시군 중에서 선정
  - 현재 지원대상은 공주, 논산, 보령, 부여, 금산, 청양, 서천, 예산, 태안 총 9개지역임
- 제1단계 지역균형발전사업(2008~2020)이 완료되고, 제2단계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중

충남 지역균형발전사업 성과관리체계 개편 필요

- 도지사는 매년 균형발전사업 시행계획에 대한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사업계획에 반영
  - 시군이 자체평가로 실시하고 있는 추진실적 평가체계를 보다 효과적으로 개편할 필요 대두

2 연구의 주요 내용

충남 지역균형발전사업 성과관리체계 현황

- 충남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체계
  - 조례에 의거, 충청남도균형발전위원회가 균형발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평가사항 심의
  - 충남 지역균형발전사업은 자치행정국 산하 균형발전과에서 총괄하며,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 수립과 사업평가, 균형발전위원회 운영 및 관리 등을 담당
- 사업 성과관리체계
  - 5년 단위의 계획이 완료되는 시점에서는 종합평가를 별도로 추진중인데, 사업추진 단계별로 많은 세부평가지표가 개발되어 있으나, 실질적인 성과관리가 미흡하여 성과관리체계 개편 필요

광역자치단체 지역균형발전사업 평가체계 구축사례 분석

- 자체 균특회계사업을 추진중인 충북의 경우도 시군 발전수준을 분석하여 대상지역 선정
  - 지역발전도 지표는 소득, 생활, 복지, 지역개발 등 4개 부문 7개 지표로 구성하여 운용
  - 사업평가는 매년 실시하는 연차평가와 5년 차에 실시하는 최종평가로 구분
  - 연차평가는 충북연구원 지역발전연구센터에 위탁하여 정성 및 정량평가 실시
  - 최종평가는 5개년 사업의 전 과정에 대한 추진평가를 지역발전연구센터가 위탁 수행
  - 사업 성과지표는 시군별 3개 지표를 선정하여 도와 협의 후 최종 선정
- 동부권 발전을 위해 6개 지역을 대상으로 사업추진중인 전북의 경우 대상지역은 고정
  - 동부권사업은 전북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산하 균형발전팀이 총괄하여 계획 및 평가 운영

- 전북 동부권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한 동부권발전위원회가 사업선정 등 주요 시책 심의
- 평가지표는 사업성과지표, 내부행정관리지표, 외부(만족도)평가, 평가개선도로 평가

3 연구 결론 및 기대효과 / 정책제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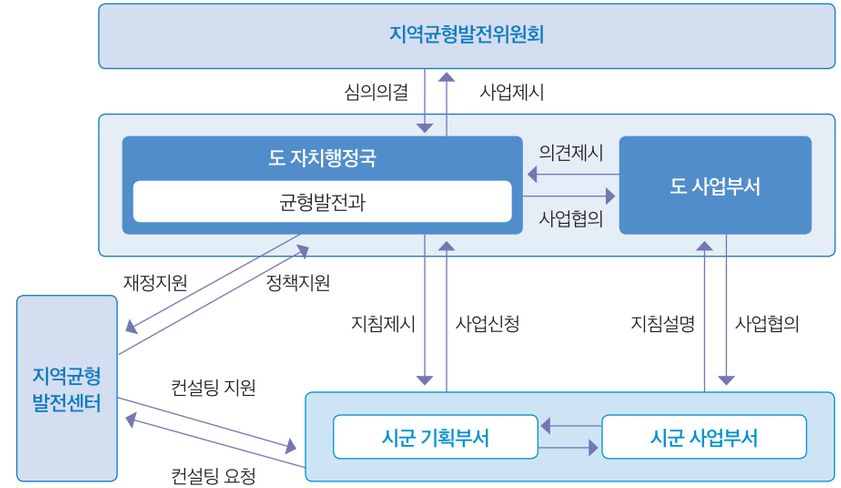
충남 지역균형발전사업 성과관리 기본방향

• ①정책목표 달성도를 명확히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의 선정, ②합의에 의한 지표개발 및 국가균형발전사업 성과지표와 연계, ③사업성과 제고를 위한 관리시스템 구축 제시

충남 지역균형발전사업 평가방안

구분	주요내용	비고
정량평가 (70점)	• 핵심지표 • 특성화지표 • 만족도	도 검토
정성평가 (30점)	• 도·시·군정 방향과의 정합성/계획수립의 충실도 • 연차별 시행계획 대비 사업 집행률, 예산절감 • 사업 추진체계의 적절성 • 기관장의 관심도 • 홍보실적 • 성과지표의 타당성 및 지역발전 기여 여부 등	평가위원이 종합의견 작성
평가개선도 (3~5점)	• 전년대비 가점부여	

충남 지역균형발전사업 협력적 추진체계 구축



4-10 전라북도 지방자치(도·시군)-교육자치(교육청) 협력사업 진단 및 발전방안

[주제어] 전북 교육자치 / 전북 지방 교육 연계협력 / 전북 교육재정사업

연구책임 김성주 | 연구진 김진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교육자치에 대해 재정 쪽과 교육분야 전문가들 사이의 이견 존재

- 재정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규모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학령인구는 줄어드는 지금 시대에 인구가 증가하던 50년 이전에 설계된 교부금 배분구조의 적합성 문제가 지속됨
- 반면, 미래교육 수요가 늘고 있고 교육체계 개선을 위해 전체적인 교육 재정수요는 오히려 늘고 있다는 교육계의 주장이 맞서고 있는 상황임

전북도, 시군의 교육재정 확대에도 책임과 권한은 모두 교육감 소관

- 전라북도청 내부적으로도 도청 및 시·군의 교육재정에 대한 지원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지만, 초·중·고 교육사무에 대한 책임과 권한은 모두 교육감 소관이라는 점에 대한 점을 지적하고 있음
  - 실제로 전북 14개 시·군의 교육지원 사업 예산을 살펴보면 총 교육사업비 중 교육청으로 지원되는 교육경비보조예산이 많게는 약 44%인 곳이 있고 30% 이상인 곳도 4곳에 이름
- 반면, 고등교육의 경우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도내 대학의 학생 미충원이 심화되고 있어서 지역소멸 위기와 지역대학 위기 극복을 위한 도-대학의 공동 대응이 필요한 상황임
- 평생교육의 경우 그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서 프로그램의 양적 확대와 함께 공동체 시민교육 등 질적 발전을 모색해야 하는 시점에 있음

2 연구의 주요 내용

전라북도와 시·군의 교육관련 조직 및 교육지원 법적 근거 분석

- 전북도청 내에는 학령인구에 대한 지원부서가 가장 많음
  - 지원시기에 따라서는 학령 전과 학령인구, 학령 후로 나뉘어지는데 학령인구인 초·중·고 관련 7개 부서, 청소년관련 3개 부서, 대학과 관련하여 17개 부서에서 관련 사업을 운영 중에 있음
  - 학령 전 사업과 관련해서는 2개 부서에서, 평생교육과 관련해서는 3개 부서에서 업무를 수행 중임
- 전북 도 내 시·군별 교육지원 조례를 분석, 교육사업 예산의 규모 적시여부를 살펴봄
  - 익산시와 정읍시, 고창군만이 예산 내 일정 비율 범위 안에서 교육지원사업을 수행할 것임을 규정하고 있음
  - 반면, 14개 시·군 중 7개 시·군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등 구체적인 지원규모를 제시하고 있지 않음

전북 시·군별 지방자치-교육자치 연계 가능사업 분석

- 전주시 외 14개 시·군별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과의 연계·협력 가능사업을 제시함
  - 예를 들어 전주시의 경우 ①교육복지-돌봄 지원 사업 ②특별활동-예체능 지원 사업 ③급식-우유 급식 지원 사업 ④교육환경-환경 개선 사업의 연계·협력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 교육경비보조사업으로 교육청에 지원하고 있으나 비슷한 목적의 사업을 자체사업으로도 실시하고 있는 등 중복문제 등이 나타남
- 비법정 사업 즉, 교육경비보조사업 형태로 교육청에 돌봄교실 사업(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을 지원하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초등 돌봄교실 과일간식지원 사업을 지자체 자체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음

3 연구 결론 및 기대효과 / 정책제언

전북도 내 시군과 교육청의 협력사업 발굴 및 공동추진 제안

- 전주시~부안군까지 14개 시·군별 지자체와 교육청의 교육사업들을 전수분석한 결과 다음의 사업들은 각자가 아닌 협력사업으로 추진할 경우 사업의 효과나 예산의 효율성이 증대될 것으로 판단됨
  - 연계·협력 가능사업은 방과 후 학습, 돌봄교실, 진로교육, 체험활동, 원어민 교사 지원, 교육환경 개선, 예·체능 분야 지원(학교 운동부 포함), 친환경 농산물 지원, 대회 지원, 지역 우수 인재 지원, 학과 능력 증진 사업 등임
- 시·군 단위보다는 도 단위의 협력 강화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임
  - 지자체와 교육청의 사업운영체계가 상이한데 지자체의 경우 시·군 단위까지 자치를 실시하고 있으나 교육청의 경우는 시·도별 자치만 실시하고 시·도교육청에서 기획한 사업을 시·군 교육지원청에서는 집행하는 구조를 고려할 때 시·군 단위보다는 도 단위의 협력 강화방안 모색이 바람직할 것임

전북도청의 교육 전담기구 신설 필요

- 2022년 7월 7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 따르면 유치원·초등학교 등에 주로 지원하던 교육세 일부를 대학교육과 평생교육 등에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함(뉴스핌, 2022.7.7.)
  - 지자체의 재정력이나 교육 관심도에 따른 교육지원 편차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북도 내 14개 시·군의 교육사업 운영실태 파악 및 조정을 위한 컨트롤타워가 필요함
- 전북도청 내에 교육 전담조직이 필요함
  - 충북과 전북을 제외한 15개 시·도 모두 명칭은 상이하나 '과' 단위의 전담조직이 설치되어 있음

  - 고등·평생교육사업은 전북도 및 시·군청의 사업영역이고 전북교육청과의 연계·협력 정책 수립, 전북-교육청간 상설 협의체 운영, 시·군의 교육운영실태 파악 및 조정 등 향후 교육사업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를 추진할 전담기구가 전북에도 설치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함

4-11 신산업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 설립 검토

[주제어] 지역혁신 / 지방자치 / 일자리

연구책임 이병기 | **연구진** 고경훈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 데이터 산업의 중요성

- 데이터 경제는 데이터가 경제활동의 중요한 생산요소로 사용되는 경제구조를 의미함. 데이터는 공공/민간부문 등의 효율적 자원 분배를 촉진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연관사업에서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의미함. 산업화 시대의 석탄, 석유와 같은 자연자원과 대등하게 데이터는 21세기 원유로 각광받고 있음. 데이터 경제는 콘텐츠,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산업 등 여러 후방산업을 견인하는 역할을 수행함

• 정부 및 각국의 데이터 산업

- 데이터 경제로의 전환을 위해 세계 각국은 데이터 활용을 위한 법률안과 제도 정비를 준비하는 등 데이터 경제로의 전환을 위해 적극 대응하고 있음

• 데이터 산업 인력 확충 및 전문인력 양성 필요

2 연구의 주요 내용

• 한편,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 중 데이터 분야 국정과제(11번(모든 데이터가 연결되는 세계 최고의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 77번(민·관 협력을 통한 디지털 경제 패권국가 실현), 81번(100만 디지털인재 양성)) 등 정부 및 공공기관의 데이터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추진 있음

• 2021년 데이터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인력은 총 394,709명으로 전년 대비 7.8% 증가하였으며, 이중 데이터직무 인력은 122,431명으로 전년 대비 20.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한편, 향후 5년 내 일반산업을 포함한 전 산업에서 필요한 데이터직무 인력은 총 24,409명으로, 이 중 데이터 개발자가 9,247명(37.9%)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데이터베이스관리자 3,765명(15.4%), 데이터 엔지니어 2,864명(11.7%), 데이터 분석가 2,821명(11.6%) 순으로 나타나고 있음

• 현재 경상북도 소재 특성화 및 마이스터고등학교 등 데이터와 연관되어 있는 분야의 학과(계열) 전무한 상황이며, 데이터의 중요성 및 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한 관련 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경상북도 데이터 분야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 설립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3 연구 결론 및 기대효과 / 정책제언

• 마이스터고 신청 기반 구축을 위해서는 협약체결 산업체 발굴 및 협력, 실험·실습시설과 기숙사 등 검토, 협약내용 선정과 협약 체결, 산업체와 자치단체 간 협의체 구성·운영, 지원기관의 마이스터고 육성계획 수립 등이 이루어짐. 지정신청서 제출 및 현장심사 준비 단계에서는 지정신청서 작성·제출, 시도교육청의 운영위원회 개최·운영, 현장심사, 지정교육부장관 협의 요청 등의 절차가 요구됨

4-12 제주지역 양돈산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분석

[주제어] 지역정책 / 지속가능발전 / 지역경제·일자리

연구책임 전대욱 | **연구진** 최인수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제주지역 양돈산업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검토 필요

- 제주지역 양돈산업이 갖는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에 대한 찬·반 의견의 심화
  - 제주 양돈산업은 그 브랜드 가치 및 관광산업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에 반해,
  - 그 부산물인 양돈분뇨의 처리비용 증가, 악취·지하수 오염 등의 부정적 효과가 공존하므로, 이들을 동시에 고려한 양돈산업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검토 필요

제주 양돈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방안을 검토하고 정책추진 방안을 제언

- 동 산업이 지역사회·경제에 미치는 긍정적·부정적 영향을 진단하고 발전방안을 제시
  - 양돈장 폐업지원 정책 및 관련 산업의 진입규제 등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제주지역 양돈산업 관련 정책들에 대한 검토 및 발전방안 도출
  - 제주 양돈산업의 현황과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분석하고, 양돈산업이 야기시키는 사회경제적 비용을 산출하고 이를 기반으로 양돈산업의 정책적 방향을 제시

2 연구의 주요 내용

제주 양돈산업 및 관련 산업생태계에 관한 현황

- 제주 양돈산업의 규모, 관련시설 현황 및 공간분포
  - 제주지역 양돈농장 및 사육두수 현황·추이, 제주지역 양돈농장 및 악취 영향구역 공간분포 등
  - 제주지역 양돈분뇨 처리 현황: 액비화 현황(액비유통센터 등), 가축분뇨 정화처리 및 방류를 위한 공공처리 시설 등
- 제주 양돈산업의 생산·수익창출, 수요·가격동향 및 연관산업 생태계 현황 등
  - 제주산 돼지고기(제주 흑돈 브랜드) 생산 및 가격 동향: 연도별 도축 현황, 축산 조수입 현황, 제주산 축산물 경락가격 동향 등
  - 제주지역 양돈산업의 연관산업 현황: 동물병원, 동물 의약품 관련업소, 운송업소, 공수의사 현황, 제주지역 돼지고기 유통 관련 산업(도축·가공·인증·포장업소 등) 현황

제주 양돈산업에 대한 제주도민의 전반적인 인식 및 찬·반 의견

- 양돈산업 및 축산악취 제주도민 인식조사 결과 요약
  - 제민일보의 2021년 조사결과: 축산악취 경험 빈도·시간 등, 제주 양돈산업에 대한 인식, 제주 양돈산업의 지역사회 기여도, 제주 양돈산업 육성 찬반 의견 등

제주특별자치도 양돈산업의 경제적 효과 분석

- 산업연관분석을 활용한 양돈산업의 지역경제 유발효과
  - 양돈산업으로 인해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생산액 추정
  - 양돈산업으로 인한 유관 산업으로의 전·후방 연쇄효과 추정: 관련 산업생태계의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 유발효과, 취업 유발효과, 생산 유발효과 등의 추정

• 양돈산업으로 발생하는 사회경제적 비용의 추정

- 양돈산업의 직접 비용으로서의 분뇨처리 비용, 사회적 비용으로서의 악취로 인한 지역 주민 피해 비용, 사회적 비용으로서의 양돈산업의 탄소배출량 등 기후·환경 비용 추정 등

• 제주 양돈산업 폐업보상 지원 효과 검토

- '15년부터 제주지역 양돈장 인근 악취민원 다발지역 및 소규모·고령자 운영 양돈장을 대상으로 폐업을 유도하기 위해 정책적으로 진행되어 온 폐업보상 지원사업 관련 검토

3 연구 결론 및 기대효과 / 정책제언

제주지역 양돈산업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검토 결과 요약

• 동 산업이 창출하는 가치를 위한 사회적 비용의 최소화를 견지하는 정책추진 필요

- 사회적 비용에도 불구하고 그 경제적 유발효과의 크기가 상당하므로, 전면폐업 보다는 이러한 편익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는 합리적인 관리방안이 요구됨

제주지역 양돈산업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정책 제언

• 환경·기술적 측면의 정책제언

- 지하수 오염저감을 위한 가축분뇨 정화처리시설의 확대·고도화, 공공하수처리장 연계처리 촉진, 악취저감을 위한 신기술 적용, 공간정보 활용 악취지도 작성 및 예보 모델 고도화 방안 등

• 경제·정책적 측면의 정책제언

- 양돈밀집지역에 대한 밀도 관리, 사육두수 관리(양돈두수 총량제 또는 총량 거래제), 오염부담금(생산자 및 소비자 부과방식), 제주흑돼지 인증제·입도세 등과 연계한 차별가격제, 브랜드 공공인증제를 통한 체계적 관리, 신기술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자율규제 방식 등

5. 자체연구 & 지침연구과제



자치분권제도

1) 지방행정 및 자치분권 제도 관련 새로운 통계지표체계 제안 181
(김필, 전대욱, 이경은, 주희진, 김해솔)

지방행정혁신

2) 정책사례 DB구축 및 활용방안 연구 186
(김지수, 이경은, 강희송)

지방재정경제

3) 규제특례지역('기회발전특구' ODZ) 지정 및 운영 방안 188
(이서희, 김성주, 윤소연, 이원도, 윤성만, 김정숙)

지역균형발전

4)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 기초연구 192
(김현호, 최지민, 전성만)

지방투자사업관리

5) 지방재정투자사업 사후관리 개선 방안 연구: 문화체육시설을 중심으로 195
(함윤주, 김상기, 김도영, 최성원, 주재문)

6) 지방재정투자사업의 예비비 추정연구 198
(송지영, 박소연, 심환희)

7) 지방재정투자사업 재정영향평가 체계 개선 방안 201
(이삼주, 조기현, 서정섭)

5-1

지방행정 및 자치분권 제도 관련 새로운 통계지표체계 제안

[주제어] 지방분권 / 스마트지방행정

연구책임 김필 | **연구진** 전대욱, 이경은, 주희진, 김해솔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통계 지표를 활용한 데이터 기반 지방행정의 필요

- 최근 지역 주민의 다양한 행정수요에 대처하는 데이터 기반 행정을 위한 통계 지표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으나 현재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갖고 있음
  - (지표 생산 부족) 광역 단위의 공공행정 데이터는 국가통계포털 등을 통해 다양한 방법으로 제공되고 있으나 기초 단위의 지표가 양적으로 부족
  - (지표 가공 및 유통 부족) 광역 단위의 데이터에 본청과 시·군·구를 구분하여 제시하거나, 개별 시·군·구 목록화된 데이터를 제공하는 등 데이터는 생산되지만, 최종 지표체계로 산입되지 못한 지표들이 존재하여 효율성이 떨어짐
  - (지표체계의 통일성 부족) 주로 지표 가공 및 유통 부족의 문제로 인해 문서 형태(PDF 등)로 존재하거나 개별 지자체 홈페이지에 산발적으로 흩어져있는 데이터가 'e-지방지표' 등 통계 플랫폼으로 흡수되지 못함

2 연구의 주요 내용

지방행정 및 자치분권 제도 관련 통계 현황 분석

• 통계지표 현황

- 지방행정통계지표는 크게 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 자치행정권 및 「지방자치법」, 「지방공무원법」에 의해분류될 수 있음
- 현재 통계청, 행정안전부, 교육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다양한 통계플랫폼을 통하여 수집가능한 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 자치행정권 관련 지방행정통계지표수는 총 359개로, 자치입법권 100개, 자치조직권 220개, 자치행정권 39개로 추산됨

• 통계 플랫폼 현황

- 통계청의 'e-지방지표', 'e-나라지표', 행정안전부의 '행정안전통계', '내고장알리미', '지방재정365', '자치법규정보시스템', '지방행정인허가데이터개방', 교육부의 '교육통계서비스', '지방교육재정알리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통계시스템, 대한민국시도의회장협의회,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등의 통계플랫폼에서 지방행정통계를 제공하고 있음
- 관련 플랫폼이 통일성 없이 난립하고 있으며 각 플랫폼은 복수의 분류 체계를 사용하고 있어 지방행정 통계지표를 찾기 어렵고, 찾더라도 PDF 등 가공이 어려운 형태로 되어있어 이용 가능성이 낮음

• 통계 지표 제공 범위 현황

- 전체에서 시·군·구가 특정되는 비중은 90개 지표(24.2%)로 시·도(43.0%)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읍·면·동이 특정되는 비중은 19개 지표(5.1%)로 낮은 수준이었음
- 지표 수집을 할 때, 시·도, 시·군·구, 읍·면·동을 특정할 수 있음에도 가공되지 않은 채로 처리되어 공개되는 지표(11.6%)는 전체 지표 체계의 효율성을 떨어뜨린다고 볼 수 있음

• 통계 지표 제공 유형 현황

- 자치입법권의 경우, EXCEL, CSV 등 가공 가능한 형태의 자료 제공율이 53.0%로 자치조직권(79.1%), 자치행정권(84.6%)보다 낮은 편이었음. 또한 PDF 단독 제공 혹은 웹사이트 상에서 단독 제공하는 비중 역시 다른 유형에 비해 높은 편이었음
- 통계청은 약 90%정도 가공이 가능한 형태의 통계지표를 제공하는 반면, 행정안전부는 72.7% 밖에 되지 않았음. 또한 PDF 단독 제공의 경우에도 행정안전부(20.5%)와 기타 플랫폼(20.9%)의 비중이 비슷한 것으로 나타남

• 승인 통계 현황

- 현황 분석 결과, 승인통계는 44.0%를 차지하였으며, 그 중 일반통계가 37.9%, 지정통계가 6.1%였음. 승인통계의 비중이 가장 낮은 분야는 자치입법권(14.0%)였으며, 가장 높은 분야는 자치조직권(60.9%)이었음

지방행정 및 자치분권 제도 통계 수요 조사 및 지표 체계 제안

• 2022년 12월 8일부터 19일까지 12일 동안 지방행정 및 자치분권 제도 관련 전문가 30인에게 각 분야별 통계 지표 수요를 자문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자치입법권

- 자치입법권 분야의 경우, ① 다른 분야에 비해 신규제안지표(안)에 대한 필요성과 측정가능성이 높았으며, ② '조례안 접수, 처리 내용(가결, 부결, 폐기, 철회, 미처리)' 등에 대한 필요성과 활용가능성이 가장 높았고, ③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 및 서명인수'는 필요성과 활용가능성에서 가장 낮았으며, ④ '위원회별 청원 처리'가 측정가능성이 가장 높고 '행정사무 감사결과'가 측정가능성이 가장 낮을 것으로 나타남
- 전문가들은 '주민' 혹은 '조례 및 규칙' 보다 '지방의회' 관련하여 더 많은 지표를 제안하였으며, 특히 지방의회의 전문성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를 지방의원과 사무기관을 중심으로 요구하였음

• 자치조직권

- 자치조직권(집행기관) 분야의 경우, ①'자치경찰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현황'이 가장 필요하고 측정 가능성과 활용 가능성이 높은 지표로 꼽혔으며, ②'읍면동장 개인 인적사항'이 가장 불필요하고 측정과 활용가능성이 낮은 지표로 꼽혔음
- 자치조직권(집행기관) 분야의 지표는 향후 ①지자체 단체장·부단체장과 관련된 지표, ②읍면동 관련 통계지표의 양적·질적 확대, ③교육, 경찰, 치안 등 다방면의 정책분야지표로 이어질 필요가 있음. 또한 지표의 신뢰성은 높지만 접근성과 활용도가 상대적으로 낮으므로 저해 요인에 대한 분석을 실시할 필요가 있음
- 자치조직권(인사관리) 분야의 지표는 향후 ①지방행정 유관기관의 인사관리 지표의 양적 추가, ②현재 관리 중인 지표에 대한 세분화, ③인력관리 효율성 평가를 위한 신규지표의 공개가 요구됨

• 자치행정권

- '공공시설·공유재산 민간위탁 현황, '지역 NGO·공익단체' '사회적경제기업 수', '주민참여예산 비율 및 주민세환원액 등' , '자치행정 주민제안 건수 및 채택률 등'의 지표가 필요성, 측정가능성, 활용가능성 등에서 모두 높은 지지를 받음
- 자치행정권 분야는 향후 ①자치단체 관할구역 및 사무배분과 관련된 신규 지표들을 고려할 수 있으며, ②각급 행정기관별로 관련 통계가 일목요연하게 제시되고 서비스될 필요가 있고, ③생활인구, 사무위탁, 특별지방자치단체 등 자치단체간 협력제도 및 민관거버넌스와 같이 지방행정에서 최근 각광받는 주제들에 대한 새로운 통계가 제공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분야라고 볼 수 있음

3 연구 결론 및 기대효과 / 정책제언

지방 통계 지표의 개선 방안

• 전반적으로, ①지표의 양적 부족, ②지표 체계의 효율성 부족, ③지표 제공 유형에 따른 편의성 부족, ④광역자치단체 중심의 지표 제공, ⑤자치입법권 분야의 승인통계 부족 및 지표 가공 가능성 부족 등이 문제로 드러남

• 향후 지방행정 및 자치분권 통계 체계 관련하여 ①자치입법권 및 자치행정권 관련 지표의 추가 개발, ②지표 제공 유형 및 범위의 개선을 통한 지표체계 비효율성 개선, ③신뢰성과 시의성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승인통계 제도의 활성화가 요구됨

연구의 기대효과

• 지방자치총조사와 같은 국가승인통계 생산 및 서비스를 위한 후속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

• 지방분권 및 자치행정 관련 지표(indicator)의 수집을 토대로 향후 지방분권 지수(index)로의 발전 토대로 활용

5-2 정책사례 DB구축 및 활용방안 연구

[주제어] 지방분권 / 스마트행정 / 우수사례

연구책임 김지수 | **연구진** 이경은, 강희송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연구배경 및 목적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사례DB의 콘텐츠 개발 및 활용방안 제언

2 연구의 주요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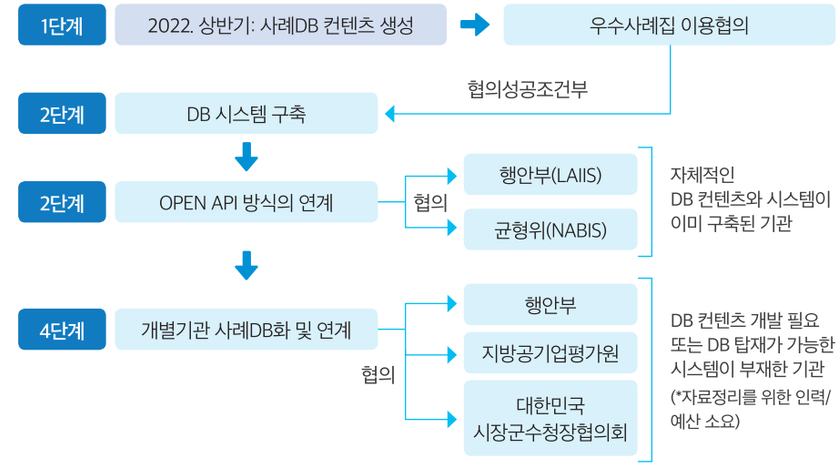
연구방법

- 기존 사례DB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바탕으로 사례DB의 프레임워크를 개발하고 2018년부터 4월 현재까지 행정안전부와 연구원이 발간한 발간물에 수록된 우수사례를 양식에 맞게 정리

연구결과

- 행정안전부 발간 우수사례집 내 사례 1,437건을 포함 총 1,842건을 정리

연구결과 활용방안(로드맵)



- 1단계: 사례DB 컨텐츠 생성 및 우수사례집 이용에 관한 관계기관 협의
- 2단계: 사례DB 시스템 구축
- 3단계: OPEN API 방식으로 관계기관 DB와의 연계
- 4단계: 개별기관 사례의 DB화 및 연계

3 연구 결론 및 기대효과 / 정책제언

기대효과

-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기획 역량강화 및 업무지원에 활용
- 연구원의 체계적인 연구성과물 축적 및 관리에 기여

5-3 규제특례지역('기회발전특구' ODZ) 지정 및 운영 방안

[주제어] 지역경제·일자리 / 지역발전 / 특구

연구책임 이서희 | **연구진** 김성주, 윤소연, 이원도, 윤성만, 김정숙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새 정부의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15대 국정과제로서의 '기회발전특구' 지정

- 지방의 화두는 지역균형발전이며, 이를 위한 새로운 정책수단으로 기회발전특구 논의가 가속화 됨
  - 기회발전특구 논의 배경은 파격적인 세제지원 및 거침없는 규제특례를 통해 개인 및 기업들이 감면 받은 세금을 재투자하도록 유인을 제공하는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함임
  - 개인 및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뿐만 아니라 거점대학 활성화, 교육기관 등의 활발한 유치, 주택 공급 등과 맞물려 기회발전특구가 지역의 균형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음

기회발전특구 성공적 안착을 위한 도입요인 및 실행전략(안) 제시 필요

- 기회발전특구의 성공적인 도입 및 운영을 위해 다양한 관점에서 논의가 필요함
  - 도입 요인 중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각 요인별 중요도를 도출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기회발전특구를 추진하는데 있어 필요한 법안을 작성, 각종 세제·규제·금융 혜택 구상하는 등 현실성 있는 실행전략 제시가 중요한 시점임

2 연구의 주요 내용

윤석열 정부 기회발전특구 기본구상 발표안 분석

- 윤석열 정부는 기회발전특구의 기본구상(안)을 첫째, 세제 혜택 관련, 둘째, 규제 완화 관련, 셋째, 교육 지원 관련하여 크게 3가지 영역으로 제시하였음
  - 기회발전특구 이전 및 투자재원 마련단계에선 "양도소득세 이연 및 감면, 창업자에 대한 증여세 감면,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혜택"을 부여함. 기회발전특구 내 기업 운영단계에선 "법인세 및 소득세 감면, 특구 개발펀드에서의 금융소득 관련 소득세 감면, 특구 내 중소 및 중견기업의 가업승계 요건 완화 혜택"을 부여함. 기회발전특구 내 자산 처분단계에선 "자산 등의 양도소득세와 법인세, 상속세 등 감면 혜택"을 부여함
  - 규제 완화 관련(안)은 기존 특구에서 부여하는 규제 완화 관련하여 지방이 주도하면서, 메뉴판식 규제특례, 규제 혁신 3종세트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및 부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음
  - 교육 지원 관련(안)은 특구 기업의 수요를 충당할 수 있도록 지방 캠퍼스 선립 혹은 인력양성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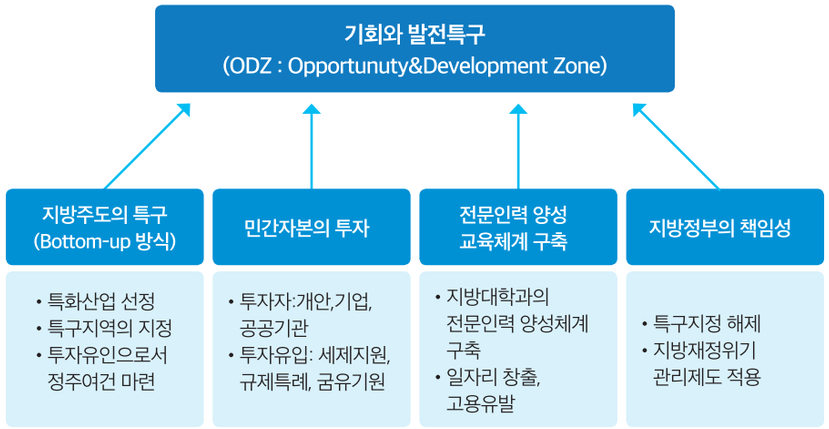
주요국 특구제도에 대한 시사점 및 문제점

- 주요국은 파격적인 투자 인센티브 지원, 단순명료한 면제 및 감면조건, 정밀한 규제특례 설계 및 법률 개정을 통해 안정성 제고를 위한 특구 제도를 운영하고 있었음
  - 그럼에도 미국 기회특구의 경우 기업 투자 사례가 아닌 부동산 투자로 집중되어 투기 측면의 부작용이 꾸준히 지적되고 있음

기회발전특구 추진 실행방안 제시

- 기회발전특구 추진의 기본 방향은 크게 ①지방자치단체 주도의 특구개발(bottom-up), ②민간자본의 투자, ③특화산업의 전문인력 수급을 위한 교육체계 구축 및 ④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으로 구성함

| 그림 | 기회발전특구 추진의 기본방향



• 기회발전특구 추진체계는 지방시대위원회, 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 기회발전특구 및 공공 중간조직으로 구성함

• 인수위 발표를 토대로 기회발전특구의 세제·금융·규제 지원(안)은 실행전략을 제시함

- 세제특례의 경우 이전 및 투자재원, 기업운영단계, 자산 처분단계로 혜택을 구체화하여 제시하였으며, 규제특례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기회발전특구 신청시, 기회발전특구 투자할 기업 등과 공동으로 규제특례 계획을 수립하고, 민간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기업 등이 규제특례계획을 제안할 것은 제안함. 금융특례의 경우 지방투자촉진보조금,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국내복귀 투자보조금 등 다양한 특례를 조정하여 적용하는 방안을 제안함

3 연구 결론 및 기대효과 / 정책제언

연구 결론 및 정책제언

• 기회발전특구 추진을 위한 도입 여건, 우선순위 등을 토대로 특별법(안) 체계도 제시

- 앞서 제시한 기회발전특구의 세제·금융·규제 지원(안) 실행전략을 토대로 특별법 체계도로 제시하였음

• 지방자치단체 자율성 강화와 지원조직 확대 필요 및 기회발전특구 추진을 위한 특별법 추진 및 맞춤형 규제 발굴 및 관련 법 개정 필요

- 기회발전특구 성공을 좌우하는 것은 지역 맞춤형, 산업 맞춤형 규제 특례 발굴이 한 축일 것이며, 특별법 추진 및 관련 법 개정을 통한 안정적 혜택 제공에 대한 확신과 노력이 다른 축일 것 등을 제안함

5-4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 기초연구

[주제어] 지방분권 / 지역균형발전 /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의 통합

연구책임 김현호 | **연구진** 최지민, 전성만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중앙집권 체제로 인한 극심한 국토의 불균형 발생

- 오랜 관행인 중앙집권체제에 의한 정치·경제·사회·문화 권력의 집중이 결국 국토공간에서 수도권의 극심한 일극 집중을 초래

국가위기 해소를 위한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의 통합추진 여부 검토

- 그동안 이원화되어 추진되어 왔던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의 통합적 추진 가능성을 검토하고 지역불균형을 치유할 수 있는 방안을 개발, 제시

2 연구의 주요 내용

그간의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 추진 분석

- 2000년대 이후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은 별개의 추진기구, 별개의 시책 및 사업, 별개의 예산을 보유하면서 이원화된 구조로 추진되어 왔음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 이원화 추진의 성과와 한계 분석

- 이원화 추진의 성과는 지방분권 측면에서는 사무의 지방이양, 지방재정의 강화 등 기능적 분권화의 점진적 증가이며, 지역균형발전측면에서는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정착 및 포괄보조, 수도권 집중의 일시적 완화 등임

- 이원화 추진의 한계는 지방분권 측면에서는 여전히 중앙집권 기조 아래, 미약한 기능적 분권화 수준에 머무는 점 등이었으며,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는 국가 전체 인구의 50%를 상회하는 인구의 극심한 수도권 집중의 심화 등으로 정리 가능
- 총괄적으로 높은 국민의 분권화 요구 수준에 비해 미약한 분권의 추진이었으며, 이원화 추진으로 균형발전에서도 성과창출이 미흡할 결과 발생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 통합적 추진 논의 검토

- 개념적으로 지방분권은 중앙정부 권한의 지자체 및 민간으로의 이동을 의미하며, 지역균형발전은 지역 간 발전수준의 형평을 의미
- 개념적 차이와 공통적 요소
  - 차이는 지방분권은 민주, 경쟁, 다양성에 가치를 두고 있음에 비해 지역균형발전은 형평, 통합, 통일에 가치를 부여, 정책의 성격도 전자는 분권적임에 비해 후자는 집권적임
  - 공통점은 양자가 모두 의사결정에 대한 주민 참여를 통해 지역의 발전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는 점임

양자의 통합에 대한 선행 논의

구분	지방분권 선행	균형발전 선행	특정 불가	양자병행
내용	- 지역혁신은 분권이 전제되어야 가능하다는 관점에서 균형발전보다 분권 우선 해야 함 - 균형발전이 분권 저해	- 지역균형발전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분권의 추진은 불균형 심화	- 지방분권의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기여는 국가나 지역에 따라 상이	- 지방분권 요구와 지역균형 발전의 요구가 높은 상황에서는 양자 동시 추진 * 최근 증가하는 경향

양자 장점 극대화 필요

- 우리나라처럼 지방분권에 대한 요구와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국민의 열망이 높은 경우는 양자의 병행적 추진이 필요
- 양자의 장점을 극대화하고 상충되는 요소는 완화시켜 시너지 효과 창출 필요

3 연구 결론 및 기대효과 / 정책제언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 통합적 추진의 방향

- 저분권과 저지역균형발전에서 고분권, 고지역균형발전으로 방향의 전환

고분권+저균형발전	고분권+고균형발전
저분권+저균형발전	저분권+고균형발전

통합적 추진의 추진과제

-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의 분리된 법률체계에서 통합적 법률체계로 개편
- 개별적 사업 및 시책의 체계를 상호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통합, 연계적 사업체계로 개편
- 추진기구 및 거버넌스를 현재보다 강력한 집행력을 보유할 수 있는 처방을 통해 위원회 등의 위상 강화
-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차원에서 분권을 고려한 특별회계의 개편

통합적 추진의 기대효과

- 현재 동일한 대통령 자문기구이면서 분권위원회, 국가균형발전위원회로 이원화되어 있는 위원회의 통합, 메가시티 추진 및 교육특구 등과 같이 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의 통합적 추진으로 보다 많은 성과창출 가능

5-5 지방재정투자사업 사후관리 개선 방안 연구: 문화체육시설을 중심으로

[주제어] 투자사업 이력관리 / 지방재정투자사업 / 사후관리

연구책임 함윤주 | **연구진** 김상기, 김도영, 최성원, 주재문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투자사업은 지방재정의 양적 성장과 함께 최근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책임성을 동시에 제고하기 위해 투자심사의 기능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음
- 지방재정투자심사 제도는 공공사업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1992년 도입 이래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며, 2016년에는 투자사업 이력관리가 도입되어 투자심사 이후 사업의 진행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음
- 그러나 투자사업 이력관리 결과의 공개 및 환류 미흡 등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투자심사 이후 사업의 성과관리 측면에서 사업의 시행 → 성과평가 및 측정 → 측정 결과의 환류 단계에 의거한 체계적인 사후관리방안에 대한 모색이 필요한 시점임
- 따라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투자사업 이력관리 제도를 비롯하여 유사 분야에서 운영중인 각종 사후관리제도에 대한 검토를 바탕으로 지방재정투자사업의 사후관리 개선방향에 대해 검토하고, 특히 운영단계까지 이력관리를 확대할 경우 문화체육시설에 한하여 세부 실행방안에 대해 검토하고자 함

2 연구의 주요 내용

지방재정투자사업 사후관리 현황 및 국내외 유사제도 검토

- 투자심사 이후 사후관리 제도로는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제9조의 2, ①항에 따른 투자심사 결과 사후평가와 ②항에 따른 투자사업 이력관리가 운영 중임. 두 제도는 관리 범위 및 대상에 있어 일부 중복되나 연계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으며, 중단사업 관리 체계 부재, 준공 이후 사업관리 부재로 인해 당초 투자사업 목적 달성도를 평가하기에 한계가 있음
  - 이외에도 현행 이력관리제도 하에서 통과율이 높은 시군구 자체심사 및 시도 의뢰심사는 관리 대상에서 빠지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에서 작성한 자료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자료의 정확성과 신뢰성 담보 문제, 이력관리 결과 공개의 한계, 중점관리사업 선정 및 관리의 실효성 부족 문제 등에 있어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 국내 유사한 사업 관리제도로는 「지방재정법」에 따른 주요재정사업평가, 「건설기술진흥법」의 건설공사 사후평가 등이 있으며, 국외에는 일본의 정책평가제도, 영국의 Gateway Reveiw Process 등이 있음
  - 유사제도 검토 결과, 평가기준 및 평가방식, 평가시점 등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며, 장기적으로는 DB관리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투자사업 이력관리 인식조사

- 투자사업 이력관리 전반에 대한 공무원의 인식조사를 수행하여 향후 투자사업 이력관리의 개선방향을 설정함
  - 조사대상은 2022년 이력관리 대상사업에 대한 자료를 제출 또는 취합·관리해야 하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사업담당자 또는 예산부서 담당자를 대상으로 현행 이력관리제도 하에 축적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 공개 여부 및 공개범위, 공개 방식, 현재 매년 선정하고 있는 중점관리사업에 대한 선정 필요성, 선정 기준, 향후 운영단계까지 이력관리제도를 확대할 경우, 도입 찬성 여부, 제도 운용방식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함

문화체육시설 운영단계 이력관리 사례 분석

-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사업유형 중 문화체육시설에 한정하여 운영단계까지 이력관리를 확대할 경우, 이력관리 세부지침 마련을 위해 심층 사례 분석 및 운영단계 관련 데이터 분석을 통해 향후 제도 도입을 위한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에 대해 검토함
  - 본 연구에서는 인천시의 문화체육시설 중 운영방식, 시설유형 등을 두루 고려하여 총 5개의 시설을 선정하여 심층 분석을 실시함
  - 또한 운영단계 이력관리를 위해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 설정을 모색하고, 지방재정365의 공시자료를 기준으로 시설별 평가기준 설정을 위한 통계분석을 실시함

3 연구 결론 및 기대효과 / 정책제언

연구 결과

- 본 지침연구에서는 지방재정투자사업의 자율성과 함께 책임성 제고 측면에서 현행 투자심사 및 이력관리 제도의 한계와 문제점, 국내외 유사제도로부터 도출된 시사점, 공무원 인식조사 결과, 운영단계 평가를 위한 현황 및 통계 분석을 통해 투자사업 이력관리 제도 개선을 위한 기본 방향 및 세부계획을 설정함
  - 특히 사업 및 예산부서 공무원들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도 개선시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해 검토하여 주요 추진과제 및 전략을 제시함
- 투자사업 이력관리 확대·개편 관련 기본 방향은 ①투자사업 이력관리 정보 공개, ②지방재정투자사업 책임성 강화를 위한 이력관리 대상 확대, ③투자사업의 이력관리 관리범위 확대, ④투자사업의 이력관리제도 실효성 강화를 위한 장치 마련임
  - 주요 추진전략으로는 ①법적 근거 마련, ②전문기관 지정 운영, ③관련기관 협력관계 구축, ④환류체계이며, 투자사업 이력관리 확대 및 개편에 따라 기존 매뉴얼에서 세부적인 사항을 구체화 및 명확히 한 관련 시행지침(안)을 제시함

5-6 지방재정투자사업의 예비비 추정연구

[주제어] 타당성 조사 / 지방재정투자사업 / 예비비 / 총사업비 / 경제성 분석

연구책임 송지영 | **연구진** 박소연, 심환희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 지방재정투자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에서는 비용 추정시 설계도서 등을 활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이러한 경우 유사사업의 평균단가를 활용하여 비용을 추정하고 있음. 그러나 평균단가 활용시에는 장래 사업을 진행시키는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비용 증가 요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런 문제들에 대한 사전예방조치로서 예비비를 비용항목으로 반영하고 있음
- 타당성 조사에서의 일반적인 예비비 기본 요율은 총사업비의 10%이며, 이는 국가사업에 대한 법적 타당성 조사인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적용하고 있는 수치를 준용한 것임
- 그러나 지방재정투자사업은 국가사업과 달리 대규모 SOC사업보다는 건축사업이나, 도시개발사업, 공원건립사업 등이 많아 사업분야 및 사업비 규모에 있어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과 차이가 있음
-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방재정투자사업 타당성 조사에 적용하기 위한 예비비 요율을 실증분석을 통해 도출하고자 함

2 연구의 주요 내용

지방재정투자사업 예산관리체계 및 예비비

- 본 연구에서의 예비비에 대한 조작적 정의는 타당성 조사 단계(투자심사 시점) 사업 완공시점까지 사업 진행 과정중에 발생할 수 있는 예측하기 어려운 물량변동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하여 일정부분 추가 반영하는 사업비로 정의할 수 있으며, 이는 예비타당성조사에서의 예비비와 다소 상이한 측면이 있음

지방재정투자사업의 총사업비 현황 분석

- 투자사업 이력관리의 투자심사 시점(이력관리 준비단계)과 완공시점(이력관리 추진단계)의 총사업비 현황을 검토함
  - 이때 물가상승률(GDP 디플레이터와 지가상승률) 및 낙찰률의 영향을 배제하였으며, 낙찰률은 조달청 자료를 활용하여 추정하였음
  - 2019~2021년 투자사업이력관리 데이터 상으로 완공된 사업은 총 590개 사업으로 경기도 사업이 127개로 가장 많고, 경상북도 59개, 전라남도 49개 순으로 나타남

지방재정투자사업 총사업비 변동에 대한 분석

- 투자심사 시점 대비 완공시점 총사업비가 어느 정도 수준으로 변화하였는지 비교하여 총사업비 변동률 분석을 수행하였음
  - 검토 결과 총사업비 중 예비비를 제외하고 물가상승률 및 낙찰률의 영향을 배제할 경우 총사업비 변동률(감소사업 제외)은 12.75%로 추정됨
- 총사업비의 주요 변동요인은 사업부문, 지역, 부지면적 증감, 연면적 증감, 사업기간 증감, 총사업비 중 보상비 비중, 사업규모(총사업비 금액) 등과 관련한 7개 가설에 대해 일원 배치 분산분석(one-way ANOVA)을 수행하였으며, 이를 통해 예비비의 차등화 필요성 및 방안 등에 대해 검토하였으나, 분석결과 차등화 필요성은 낮은 것으로 검토됨

- 분석결과 부지면적과 연면적이 증가하는 경우와 R&D 사업부문과 건축물 사업부문 간에만 총사업비 변동률의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3 연구 결론 및 기대효과 / 정책제언

연구 결과 및 한계

- 본 연구에서는 투자사업 이력관리 자료와 조달청 낙찰률 자료를 종합하여 총 590개의 사업비 데이터를 활용하여 지방재정투자사업의 특성을 고려한 예비비 요율을 추정하였으며, 그 결과 현재와 같은 총사업비에 10%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나타났음
- 당초 사업부문별, 사업기간별, 사업규모별, 지역별 등 사업특성별로 예비비 요율 차등화를 검토하였으나, 분석결과 차등화 필요성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 다만 용지보상비에 대해서는 국공유지 공시지가가 투자심사 총사업비에 포함되지만 완공시점 총사업비에는 제외되는 등 기준의 차이로 인해 엄밀한 분석을 수행할 수 없었음. 향후 용지보상비의 예비비 요율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임

정책제언

- 지방재정투자사업에 대해서는 총사업비를 관리하는 지침이 부재하고 투자심사 이후 사업비 변동에 대해 단지 투자사업이력관리를 통해 자치단체 스스로 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사업비 증가에 대한 규제 역시 국가사업보다 완화하여 운영 중임
- 특히 예비비의 경우, 투자심사에서 반영된 예비비의 제외시점이 명문화되지 않아 자칫 예비비까지 사업비의 범위로 잘못 인식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 사용용도 및 사용의 책임과 권한 등을 제한하지 않는다면 총사업비를 증가시키는 부작용이 초래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한 우려가 있음
- 따라서 투자심사 이후 사업비 증가 및 변동사항에 대해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제도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5-7 지방재정투자사업 재정영향평가 체계 개선 방안

[주제어] 타당성 조사 / 지방재정영향평가 / 지방재정투자사업

연구책임 이삼주 I **연구진** 조기현, 서정섭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연구 배경

- 지방재정투자사업의 타당성 조사 과정에 포함되어 있는 지방재정영향평가에서 다음의 개선사항이 발견됨
  - 재원조달 가능성에 대한 분석은 당해 자치단체의 가용재원과 비교를 통해 가능성 여부를 판단하고 있으나, 가용재원은 총량적 재원규모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경상인건비, 법정 경비 등이 제외되어 있어 실제 가용재원으로 인식하기 어려움
  - 재정변화에 대한 분석은 당해 사업에 조달되는 사업비의 유형에 따라 차별화될 수 있어야 함
  -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적으로 중앙정부와 차별화되어 있어 투자사업으로 인한 재정영향을 사전에 분석해야 정책결정의 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음
- 지자체의 투자사업으로 야기되는 재정영향평가의 내실화와 재정의 건전성과 책임성을 제고해야 하며, 이를 위해 지방재정투자사업 타당성 조사에 적합한 재정영향평가 방법의 개선을 연구하고자 함

개편의 필요성

- 재정영향평가 편제 문제
  - 타당성 조사에서 재정분석 부분이 정책적 분석의 하위로 설정된 것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차이를 간과한 것으로 판단됨

- 지방재정영향이라는 의미는 지방재정법 상의 용어와 혼돈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음
- 타당성 조사에서 지방채와 무관한 조달재원임에도 지방채에 대한 재정분석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방채의 현황을 보여줄 뿐 투자사업으로 야기될 부분은 분석하고 있지 않음

• 가용재원 추계의 문제
- 지자체가 제출한 신규 가용재원의 산출근거가 명확하지 않으며, 규모를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타당성 조사 과정에서 지자체 제출자료를 그대로 인정하고 있음
- 가용재원은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을 의미하지만, 현행 중기지방재정계획 상 가용재원에는 자율재원이 아니라 사용처가 확정된 재원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제외할 수 있어야 함

• 재정변화 분석의 문제
- 지방재정투자사업이 지자체의 재정상태 및 여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분석은 수행하고 있지 않으므로 개선이 필요함

2 연구의 주요 내용

재정영향평가체계 개선방안 기본방향

• 정보의 산출과정이 단순해야 함

• 재원조달 가능성 부문은 준공 이후의 운영비 조달 가능성 여부를 포함해야 함
- 최근 지방자치단체의 사업방식이 매우 다양해지는 경향이 있으며, 그 다양성은 직영 외에도 위탁방식, 매각방식 등 과거의 행태를 벗어난 비정형적 방식이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재원조달 가능성에 대한 분석 과정에서 준공 이후의 운영재원조달 가능성을 분석하는 것이 필요함

• 재정상태의 변화 부문은 조달재원의 성격에 따라 변화가 나타나는 재정영향평가를 중심으로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편제 개선방안

• 지방재정에 대한 영향 검토의 정의와 세부항목 간 불일치하는 부분이 있으며, 투자사업이 지자체 재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항목이 제외되어 있으므로 이와 관련된 항목 추가 및 재정영향 검토 항목을 재정현황분석, 재원조달 가능성 분석, 재정변화분석 등 세가지 유형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 타당성 조사 수행을 위한 일반지침에서의 '지방재정영향 검토'는 타당성 조사 매뉴얼의 '재정여건 및 재원조달 가능성'과 용어가 상이하며, 지방재정법상의 지방재정영향평가와 혼동될 소지가 있으므로 '재원조달 가능성 및 재정변화 분석'으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매뉴얼에서는 '지방재정영향'을 다소 애매하게 기술하고 있으며, 일반지침은 실제 조사분석하고 있는 내용과 차별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조정이 필요함
- 지방재정과 관련된 분석이 의미하고 있는 바를 분명히하고 투자심사 과정에서 어떤 정보를 활용해야 할지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재원조달 가능성 및 재정변화 분석 항목을 정책적 분석의 하위 분석 단위에서 상향된 항목으로 별도 분류해야 함
- 타당성 조사는 투자재원의 계획적 관리와 건전하고 생산적인 재정운용, 재정 낭비 최소화 등을 강조하고 있으나, 현재의 타당성 조사 항목에서 지방재정에 대한 부분은 정책적 분석의 하위 분석 단위로 설정되어 있음

가용재원 산출모형 개발

• 법률(시행령, 부령, 훈령, 규칙, 지침 등 포함)에서 강행규정으로 지출의무를 규정하고 지출규모를 명시적으로 규정한 경우에는 공통적으로 의무지출로 판단함
- 보조사업의 지방비 부담분, 조정교부금이나 징수교부금, 교육비특별회계 등 법정·의무가 주어지는 재무활동비는 가용재원에서 제외함

- 인건비와 기본경비는 자치단체의 존립과 최저한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필수경비로 간주하여 가용재원 대상에서 제외함

• 본 연구에서의 의무지출 및 재량지출 기준은 다음과 같음

- 의무지출: 지출의무와 지출규모 중 하나를 법령, 부령, 훈령, 지침, 조례 등으로 규정
- 준의무지출: 보조금 등의 지방비 부담 사업, 인건비, 기관운영비
- 경직성 지출: 기관운영비, 법령이나 지침으로 이행을 요구하는 사업

재정영향 평가 개선

• 재정영향평가 방법에 대하여, 첫째, 영향평가 기간, 둘째, 지표설정 방식, 셋째, 분석의 편의성 확보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방향을 설정함

- 조달재원의 유형이 매우 다양하고 복잡해지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어, 지방재정투자사업의 사업기간에 대한 설정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재원조달이 완료되는 시점(민간투자가 있을 경우 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을 사업기간으로 간주하고 재정영향평가 방법를 탐색함
- 현재 타당성 조사 과정에서 재정영향평가를 하고 있지 않으므로 새로운 대안 탐색을 하였으며, 평가 지표를 공통 및 특정지표로 구분하여 설정하였음
- 분석의 편의성을 확보하기 위해 재정영향평가의 지표 분석은 지방재정분석 지표를 활용함

• 공통지표로 통합재정수지비율, 경상수지비율, 의무지출비율 등을 제안함

- 1안: 투자사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재정변화와 연계된 재정분석 지표를 활용하는 방식임
- 2안: 지방재정법령의 지방재정영향평가지표를 준용하는 방식임

• 사업유형을 재원조달 방식(자체/보조금/지방채/민자유치), 사업방식(재정사업/SPC/위탁개발), 운영방식(직영/민간위탁/출자출연) 등으로 세분화함

3 연구 결론 및 기대효과 / 정책제언

연구 결론 및 정책제언

• 본 연구는 지방재정투자사업의 타당성 조사에 적합한 재정영향평가 방법의 개선을 통해 향후 투자심사기관과 지자체가 지방재정영향평가 결과를 적절히 활용하여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사용하도록 지원하는데 목적이 있음

• 지방재정투자사업의 타당성 조사 중 재정영향평가 과정에서 제도적 측면, 가용재원 산출 측면 그리고 재정영향평가 측면 등에서 개선점이 발견됨

• 정보산출과정의 편이성, 분석대상 시기의 확대, 영향평가의 직접 연관성 등 3가지 기본 방향 하에서 제도적 측면, 가용재원 추계의 적절성, 지방재정영향 평가 가능성 등에 대한 대안을 제시함



III
정기간행물

1. 지방자치정책브리프

2. 지방의정브리프

3. 인포그래픽스

4. 카드뉴스

5. 지방자치 이슈와 포럼

6. 지방행정연구

7. 세계지방자치동향

8. 연구성과 콘텐츠(유튜브)

정기간행물



지방자치정책브리프

1. 2022년도 지방자치정책브리프 209

지방의정브리프

2. 2022년도 지방의정브리프 210

인포그래픽스

3. 2022년도 인포그래픽스 211

카드뉴스

4. 2022년도 카드뉴스 212

지방자치 이슈와 포럼

5. 2022년도 지방자치 이슈와 포럼 213

지방행정연구

6. 2022년도 지방행정연구 219

세계지방자치동향

7. 2022년도 세계지방자치동향 222

연구성과 콘텐츠(유튜브)

8. 2022년도 연구성과 콘텐츠(유튜브) 226

2022년도 지방자치정책브리프

No	제목	집필자
1	재정분권 1단계 전환사업의 재정책임성 측면에서의 변화 - 공무원 인식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	김성주
2	2021년(FY2020) 지방재정분석결과와 시사점	전성만
3	자치경찰제의 성공적 시행을 위한 전략과 과제	박재희
4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그간의 성과와 추진방향	박진경
5	국책 공모사업체계의 합리적 개선이 필요하다	이서희
6	지자체-대학-지역기업 간 상생협력체계 구축으로 지방소멸위기 극복하자	이소영
7	지방자치단체 데이터기반행정 정착을 위한 고려사항	이재용
8	지방자치단체 기관구성 형태 다양화의 쟁점과 과제	김지수
9	윤석열 정부의 지역공동체 정책방향과 과제	전대욱
10	지역균형발전 정책궤도: 공간적 정의 실현을 위한 1,000조 원 프로젝트	전성만, 황해동
11	지방자치단체의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 도입 방향	신두섭
12	디지털플랫폼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활용방안	유란희
13	지방자치단체간 새로운 협력 방식의 특별지방자치단체	유수동
14	지역경제 활성화 타운의 실효성 제고방안	이원도
15	국가균형발전정책의 진단과 개선방향	윤소연
16	지방시대위원회,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의 통합적 추진	김현호
17	행정환경변화에 따른 주민개념 재정립의 쟁점과 과제 : 제2주소 제도 도입을 중심으로	김지수
18	308-08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도 성과관리가 필요하다	김성주
19	지방자치단체 증거기반정책 정착을 위한 방안	박현욱
20	고향사랑기부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정책 방향성 제고	전성만, 유보람
21	특별지방자치단체 탈퇴·중단에 관한 쟁점과 전망	전대욱
22	지방자치단체 기관구성 형태 변경에 관한 특별법안 주요내용 및 쟁점	최인수
23	주소정보 고도화 추진을 위해 재정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이서희, 유보람
24	지역균형발전정책, 대수술 필요하다	김현호

2022년도 지방의정브리프

No	호수	제목
1	제17호	전부개정 지방자치법 시행에 따른 기대와 발전방향 **김순은**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
2	제18호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 기간의 개선방안 **최현재** 서울특별시의회 의회사무처 입법담당관 법제지원팀장
3	제19호	농촌 공동체 회복의 혁신사례, 「마을자치연금」과 지방의회의 역할 **이창현** 익산시청 정책개발담당관, 송제관 익산시청 정책개발담당관 주무관
4	제20호	전부개정 지방자치법 시행에 따른 지방의회의 신뢰성 제고방안 **소순창** 자치분권위원회 부위원장
5	제21호	새 정부의 국정과제와 지방의회 발전과의 연계 분석 **김건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의정연구센터장
6	제22호	지방의회 의원연구단체의 성공적 운영을 위한 제언 **주희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
7	제23호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실효성 있는 운영을 위한 조직 구조 개선 **도일환**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사무처장
8	제24호	지방의회 교섭단체 제도 개선을 위한 제언 **최현재** 서울특별시의회 법제지원1팀장
9	제25호	고향사랑기부금 제도의 도입과 지방의회의 역할 **이상범**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이상범 정책연구실장
10	제26호	미완성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위한 제안 - 의회 사무기구의 직제 및 인력 보강 및 기준인건비 신설을 중심으로 - **김진영**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수석전문위원
11	제27호	지방의회 공공외교 추진방향의 설계 **신원득** 지방의회발전연구원 연구부장
12	제28호	지방의회의원 공제회 도입 가능성 검토 **홍근석**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기획조정실장

2022년도 인포그래픽스

No	호수	제목
1	22	2021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우수연구과제
2	23	국가위기 대응을 위한 지방소멸 방지전략
3	24	동남권 특별지자체 설치 방안
4	25	환경변화에 대응한 보통교부세 개편방안
5	26	강원특별자치도는 왜 필요할까?
6	27	기회발전특구의 성공적 추진 방안
7	28	지방재정과 지방교육재정 연계·협력 가능성 검토
8	29	지방의회 주민참여, 가능성과 대안은?
9	30	국책 공모사업 체계의 합리적 개선방안
10	31	탄소중립을 향한 지방자치단체 정책추진 강화방안
11	32	이전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채용제도
12	33	지방자치단체 현금성 복지 사업의 책임성 강화

2022년도 카드뉴스

호수	제목
1	디지털 플랫폼 정부와 지역혁신
2	고향사랑기부금제도의 주요내용과 활용방안
3	지방의회 정책지원관이란?
4	지역맞춤형 시군구 특례제도란?
5	한국지방행정연구원「지방우수정책사례 통합 DB」구축
6	지방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의 통합 시너지 창출
7	투자사업 이력관리제도란
8	주소정보 고도화를 위한 재정 협력 체계 구축 방안 연구
9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미래전략 발전계획

2022년도 지방자치 이슈와 포럼

41호 (2월)

내용	
주제	재난대응과 국민안전
인터뷰	더 넓은 시선으로 다양화된 재난에 대비하다 **이승우** 행정안전부 재난관리본부장
이슈	재난대응과 국민안전 **김근영** 강남대학교 교수, 한국도시행정학회 명예회장
집중조명	지방자치단체의 자연재난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과제 **이제연**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균형발전상생센터장
	정책환경 변화와 재난안전을 위한 지자체의 과제 **신상영** 서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재난대응과 도시계획 **정주철** 부산대학교 교수
	위험사회의 안전 담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전망과 과제 **최충익** 강원대학교 교수
우수사례	미세먼지 문제해결을 위한 서울시 승용차마일리지 사례 **박재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행정체제연구센터장
대한민국을 읽다	예측할 수 없는 자연재난, 기관 간 소통과 협업을 통해 풀어간다 **정제룡** 행정안전부 자연재난대응과장
입법동향	복합재난대응을 위한 국가재난대응체계 구축 방안 **배재현**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42호 (4월)

내용	
주제	메타버스와 디지털 플랫폼
시론	**김일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원장
집중조명	메타버스가 바꿀 미래공간, 어떻게 준비해야할까 **김진유** 경기대학교 도시교통공학과 교수
	코로나19가 앞당긴 '환상의 신세계' 메타버스 **박성국** 서울신문 산업부 기자
	한국은 1경 6,000조 시장인 메타버스에 준비된 국가인가? **김형섭(Kent Kim)** 메타버스 밀리버스, 디아더 의장
	메타버스의 가능성과 한계 **안용길**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경영학과 부교수
	디지털 플랫폼과 규제 **송명진**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메타버스와 디지털플랫폼 활용 교육 지방행정에 도움된다 **최재용** 메타버스연구원 원장
	메타버스 시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과 지속가능한 환경 구축을 위한 방향 **박지혜** 산업연구원 연구원
입법동향	메타버스와 온라인 플랫폼 **정준화**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대한민국을 읽다	메타버스 산업 육성을 위한 첫 걸음 **이주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콘텐츠과장

43호 (6월)

내용	
주제	윤석열 정부의 지역균형발전정책
인터뷰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진정한 지역 주도의 균형발전시대를 열다 **정운천**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이슈	윤석열 정부의 지역균형발전정책의 추진 **김현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논단	윤석열 정부의 지역균형발전정책 방향과 과제 **박기관** 상지대학교 공공행정학과 교수
	윤석열 정부의 지역균형발전정책 : 지방분권정책을 중심으로 **이기우**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윤석열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 지역주도·시장친화형 지방시대의 시작 **허문구** 산업연구원 국가균형발전연구센터장
	윤석열 정부의 지역균형발전정책, 주요 중점과제는? **류종현** 강원연구원 강원도지역균형발전지원센터장
	윤석열 정부의 효율적 국가균형발전 정책 추진을 위한 균특회계의 개선방향 **신두섭**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재정실장
	로컬 브랜드를 활용한 지역특화 균형발전정책 방안 **이소영**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입법동향	지역균형발전정책 실현을 위한 입법 논의 **하혜영**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우수사례	아동이 소외되지 않는 주민 중심의 지역발전, 의성 **유란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
지방자치단체 탐방	체류형 사계관광 빅데이터 시스템 구축하다, 화천군

44호 (8월)

내용	
주제	민선8기 지방자치
인터뷰	'혁명적인 지방시대' 실현을 통해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다 **이철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
이슈	민선 8기 지방자치의 주요 과제와 추진 방향 **홍근석**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기획조정실장
집중조명	'민선 8기 지방자치' 지역 주도성의 확립과 지역창발형시스템의 구축 **하동현** 전북대학교 교수
	민선 8기 지방재정의 과제와 방향 **손희준** 청주대학교 교수
	새 정부의 '지방시대' 국정 목표와 민선 8기 지방의회 **박노수**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연구원 초빙교수
	민선 8기 지방자치와 지역발전 과제 **박진경**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
	지방자치단체 투자사업의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사후관리방안 **함윤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재정투자평가부장
	민선 8기 지방자치! 중앙-광역-기초의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정책과제 제언 **이상범**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정책연구실장
입법동향	민선 8기 지방자치, 변경된 제도와 남은 과제 **하혜영**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우수사례	'변화'는 '시작'되었다… 잘 사는 경제특례시 '고양' **이동환** 고양특례시장
대한민국을 읽다	민선 8기 지방자치의 성공을 바라며… **장금용** 행정안전부 자치행정과장
지방자치단체 탐방	군민이 행복한 누구나 와서 살고 싶은 '1004섬 신안'

45호 (10월)

내용	
주제	민선8기 지방의회
인터뷰	'원칙과 상식'에 입각하여 의회르 올바로 세우다 **김현기**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現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이슈	지방의회 30년 평가를 통해 본 지방의회의 나아갈 방향 **김건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
집중조명	'지방시대'에 있어서 민선 8기 지방의회의 위상 정립 방안 - 예산편성 및 조직권의 독립을 중심으로 **박노수** 서울시립대 도시과학연구원 연구교수
	지방의회 예산편성권 확보의 의의: 뉴욕(New York)시의 사례 검토 **송영현** 서울시립대 교수
	민선 8기 기초의회의 현실과 과제 **윤소은**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전문위원
	민선 8기 지방의회에 대한 주민참여에 대한 시사점 : 일본지방의회에 대한 주민참가를 중심으로 **김찬동** 충남대학교 교수
	프랑스 지방의회의 조직과 권한 **최진혁** 충남대학교 도시·자치융합학과 교수
입법동향	국내외 식량 이슈 동향과 민선 8기 지방의회의 역할 **김규호**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대한민국을 읽다	제9기 지방의회 주요 제도 변화와 관련 쟁점 **이용일** 행정안전부 선거의회자치법규과장
지방자치단체 탐방	도시 브랜드 높이고, 시민 삶 풍요롭게 시흥시

46호 (12월)

내용	
주제	고향사랑기부제
인터뷰	함께하는 선순환으로 자생하는 지방자치를 꿈꾸다 **조재구**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
집중조명	드디어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일이 다가왔다. 지자체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박상헌** 한라대학교교수 한라대학교 고향사랑기부제지원센터 센터장
	고향사랑기부제와 답례품 제도 **염명배** 충남대학교 명예교수
	고향사랑기부제가 농업·농촌 활력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라며… **서용석**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사무총장
	고향사랑기부제와 지방자치단체의 대응과제 : 제주특별자치도를 중심으로 **주현정** 제주연구원책임연구원
입법동향	고향사랑기부제 실시의 의의 **류영아**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우수사례	일본의 고향 납세 제도로 약진하고 있는 미야자키현 미야코노조시 **사카이 요이치로** 일반재단법인 자치체국제화협회(CLAIR) 서울사무소 소장보좌
대한민국을 읽다	기부하고 혜택받는 고향사랑기부제
	고향사랑기부제 안내
지방자치단체 탐방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 사례를 꿈꾸다

2022년도 지방행정연구

제36권 제1호 (통권 제128호)

No	논문명	저자명
1	광역지자체 온실가스 배출량과 경제성장의 탈동조화 분석	고재경, 예민지
2	지자체 간 협력체제의 구조가 소방서비스의 효과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복합경계 신도시의 소방공무원 인식을 중심으로	박재희, 유수동
3	위험과 위해의 공존 문제에 대한 정책의 창 열기 : 경상북도 울주군 사례 연구 및 쟁점 분석	구한민, 김갑성
4	지방공무원의 성격유형과 셀프리더십에 관한 연구: 무안군 공무원을 중심으로	박영미
5	주민자치회 형성 요인에 관한 연구	김정인
6	지방자치단체 통합부채 관리지표 운용 방안 연구	한재명
7	지방자치단체의 수평적 재정불균형에 대한 세입원천별 기여도 : 지방자치단체 유형별 분석을 중심으로	허등용
8	지방자치법상 '예산 외의 의무부담'과 재정관리	김수희
9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와 지역경제활성화 간 관계분석: 경상권역을 중심으로	임태경
10	중앙정부 이전 재원이 지방채 발행에 미친 영향 분석: 자치시를 중심으로	임재훈, 문광민
11	지역경제 위기극복을 위한 사립학교 교육용 기본재산의 기부채납에 관한 고찰	목익수, 김수영
12	지역의 산업특성과 지방정부의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에 관한 연구	장우윤
13	지역사회 사회복지 네트워크 거버넌스 구조 변화 사례연구 : 남양주시의 2012~2017년의 변화를 중심으로	박경숙, 유란희

제36권 제2호 (통권 제129호)

No	논문명	저자명
1	시민참여제도 분석모델 개발 및 적용: 역대 정부의 6개 시민참여제도를 중심으로	김지수, 천지은
2	기초지방자치단체 민주시민교육조례 도입 영향요인 분석	김대욱
3	조직공정성이 직무만족 및 직무성과에 미치는 영향 분석 : 조직지원의 매개변수 역할을 중심으로	김미경
4	자치분권 주민교육의 영향요인과 성과에 대한 실증연구	권자경
5	자치경찰제의 주민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 전라남도 지역을 중심으로	김지영, 박재희
6	보편적 재난지원금 지급 결정요인에 대한 연구	김수희
7	지방 중소도시에서 도시공원의 역할: 단독주택 가격 효과를 중심으로	이성원
8	지역 환경에 대한 거주민의 인식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 경기 북부-남부의 지역 간 차이를 중심으로	이경영, 박관태
9	다중흐름모형을 적용한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정책변동 분석	송명희

제36권 제3호 (통권 제130호)

No	논문명	저자명
1	지방정부 공무원의 조직성과에 대한 인사제도와 상사신뢰의 영향 : 중앙정부 공무원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김상숙
2	국가균형발전 정책변동에 관한 연구: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사례를 중심으로	김석현
3	Covid19 서울시 소상공인 폐업률에 미치는 영향 요인에 관한 연구	이세미, 유한별
4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 세출예산의 정치성에 관한 연구 : 선거주기와 국회의원-단체장의 정치적 영향력을 중심으로	이윤규
5	경기도 기초정부 청년특성과 청년정책 정합성 분석	조유선, 금유선, 민효상
6	디지털기기의 이용이 사회참여에 미치는 영향: 서울시를 중심으로	조민지
7	마을기업의 성공요인과 사례연구: 용인시 마을기업 사례를 중심으로	이현정
8	공립예술단원의 직무탈진감과 조직문화 :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유수동, 조경호

제36권 제4호 (통권 제131호)

No	논문명	저자명
1	(기획논문) 새 정부의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방향	최영출
2	지방정부 정책은 어떻게 확산되는가?: 인구조례 도입 및 제도화를 중심으로	윤선일, 김정숙
3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의 평가에 관한 연구	전대욱, 최지민, 최인수
4	지방자치단체 주민제안 플랫폼 설계 분석: 17개 광역자치단체를 중심으로	김지수, 정지용
5	디지털 정부 시대, 리더십과 지방 공무원의 공공데이터 관련 비윤리적 친조직 행태 간 관계 연구: 조직-구성원 간 교환관계 인식의 맥락 효과를 중심으로	이경은, 이슬기
6	지방자치단체의 정보화 투입과 투명성에 대한 연구 : 정치적 경쟁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고영준, 박미영
7	정부간 재정지출이 지역경제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경상권역의 인구감소지역을 중심으로	임태경
8	지역화폐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연구	장윤섭, 양준석, 구남규
9	지방공기업 직원의 고객상황 이해와 고객응대에 관한 분석 : 지하철 이용 고령자 고객 사례를 중심으로	김민주
10	사회불평등 수준에 대한 인식이 정부공정성 인식에 미치는 영향 : 지역(수도권-비수도권)에 따른 차이를 중심으로	김상숙, 나보리
11	경기도민 삶의 만족 영향 요인 분석	유병선, 김희연
12	생활계폐기물 및 재활용품 배출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 : 종량제 정책 수단을 중심으로	박정원, 유광민

2022년도 세계지방자치동향

30호

No	나라	제목
1	한국	초광역협력사업 및 특별지방자치단체 운영의 안정적 재원 지원 방안
2	일본	일본 지방자치단체와 수소 사회: 재생 에너지 확대와 지방 창생
3	미국	디지털 교육을 받는 노인들: 스마트 시니어 (Smart Senior) 프로젝트
4	미국	캘리포니아 주(州) 로스앤젤레스 카운티(Los Angeles County) “옥스포드 저류지 다용도 개선 프로젝트(Oxford Retention Basin Multi-Use Enhancement Project)”

31호

No	나라	제목
1	한국	읍·면·동 주민자치조직의 지위 및 권한의 변화: 세종형 주민자치회 사례를 중심으로
2	독일	독일의 지방행정관리를 위한 지방행정연합체(KGSt)
3	일본	일본의 생활보호·사회복지비 변화와 지방복지서비스 경쟁
4	미국	미주리 주 캐머론 (Cameron) 시의 철거지원 프로그램 (City of Cameron’s Demolition Program)

32호

No	나라	제목
1	한국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지자체 추진 동향 및 시사점
2	일본	일본 지자체의 환경기본계획의 현황과 과제: 에다지마(江田島)시를 사례로
3	일본	고령사회 일본의 지역사회 통합 돌봄(커뮤니티케어)의 추진 현황
4	미국	미국 지방재정 회복 기금(State and Local Fiscal Recovery Fund; SLFRF) 동향

33호

No	나라	제목
1	한국	지방자치단체 메타버스 활용 동향 및 시사점
2	일본	일본의 지방자치단체와 해상풍력발전: 아키타현(秋田県)을 사례로
3	미국	지역사회에서 저평가된 경제 성장의 미래 산업: 음악과 엔터테인먼트

34호

No	나라	제목
1	일본	일본의 지방자치단체와 디지털 전원도시 국가 구상: 디지털화와 지역과제 해결
2	미국	미국 조지아 주 디지털 정부 추진 사례: 디지털 정부 4원칙
3	미국	미국 지방정부의 디지털 및 플랫폼 정부 추진사례
4	독일	디지털 행정 NRW: 지방정부 주도의 전자정부 플랫폼 구축 사례

35호

No	나라	제목
1	독일	독일 지방재정조정제도(Kommunale r Finanzausgleich)의 기능과 시사점
2	미국	지방세수의 지역 간 불균등 해소를 위한 정책_조지아 주 특수 목적 지방 소비세
3	미국	Twin Cities 대도시 권역의 Tax-Base Sharing 프로그램
4	일본	일본의 지방세수의 지역 간 불균등 해소를 위한 정책

36호

No	나라	제목
1	독일	독일의 지속가능한 도시를 위한 노력
2	미국	분권과 균형발전: 미국 기후변화 거주 지역 이동(climate-related migration)
3	일본	일본의 지방자치단체와 GX(Green Transformation): 에너지 수급과 민생대책
4	일본	일본 지자체의 탄소중립도시 현황 및 시사점
5	일본	일본, 탄소중립과 지방창생의 선순환
6	중국	중국의 탄소중립 정책과 베이징의 추진 사례
7	호주	2050 탄소배출량 순제로(Net Zero Emission) 달성을 위한 호주 지방정부의 대응

37호

No	나라	제목
1	미국	미국 기회특구 사례: 텍사스 주의 기회특구 정책 현황
2	미국	미국 조지아 주 세금공제 기회특구 프로그램 (Opportunity Zone Job Tax Credit Program)
3	일본	일본의 지방자치단체와 기회발전특구: 비전제시에서 정책 수단의 보완으로
4	중국	중국의 국가급 신구(国家级新区)의 지정 및 현황

38호

No	나라	제목
1	한국	정보제공형 지자체 플랫폼 운영: 경기도 '버스정보 시스템' 사례
2	미국	정보격차에 대응하는 방법: 보스턴(Boston) 시, 메사(Mesa) 시, 오클랜드(Oakland) 시
3	미국	미국 워싱턴주 세퀌(Sequim) 시의 보건-주거 민관 협력체 운영 사례 (Sequim Health & Housing Collaborative)
4	일본	회복 조짐을 보이는 일본의 지역 경제

39호

No	나라	제목
1	한국	강원중도개발공사 채무불이행의 경과 및 시사점
2	미국	캘리포니아 주(州) 콤튼 시 (City of Compton) "지역사회 대기오염 모니터링 및 대응정책 (Community Air Toxics Initiative)"
3	네덜란드	지방자치회복력 강화정책: 네덜란드 로테르담시의 예(Rotterdam Resilience)
4	호주	호주 성장지역을 대변하는 전국성장지역연합(NGAA)

40호

No	나라	제목
1	한국	부산시 청년일자리 통합정보시스템: 청년부산잡스
2	일본	청년층의 지방생활 활성화를 위한 일본의 후루사토(고향) 워킹홀리데이
3	중국	중국의 정부 통합 빅데이터 시스템 구축 지침
4	독일	독일 지방정부의 ESG
5	미국	미국 텍사스 주 지방자치단체의 가정위험폐기물 재사용 프로그램 (Household Hazardous Waste Reuse Program): Texas 주의 사례를 중심으로

41호

No	나라	제목
1	한국	기술을 활용한 지역형 행정의 청사진: 영월군 드론(drone) 정책
2	네덜란드	지방자치단체의 위기관리특화정책: 네덜란드 로테르담시의 예
3	미국	지방자치단체의 빅데이터 및 AI기술을 사용한 갈등 해결 노력
4	미국	미국 공공 지원 프로그램 보험 의무 가입 제도
5	일본	일본의 지방창생 제도 및 예산 규모 변화로 본 평가

연구성과 콘텐츠(유튜브)

No	제목	출연
1	좋은 지방투자사업은 어떠한 것일까?	김상기, 전대욱
2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가 하는 사업	김상기, 전대욱
3	지방투자사업의 제도적 특징	김상기, 전대욱
4	고향사랑기부금의 예상모금액과 홍보전략	신두섭, 유보람
5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신설되는 인구감소지역대응센터	김 필, 이제연
6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한 사례와 답례품은 무엇이 있을까요?	신두섭, 유보람
7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에 대처하는 연구원의 자세는?	김 필, 이제연
8	고향사랑기부금제, 왜 필요하고 어떤 효과를 불러올까요?	신두섭, 유보람
9	지방자치단체 간 새로운 협력 방식: 특별지방자치단체	유수동
10	지방재정경제실과 지역균형발전실이 수행하는 연구는?	신두섭, 이제연
11	지방행정혁신실과 자치분권제도실에서 수행하는 연구는?	최인수, 강영주
12	자치분권제도실과 지방행정혁신실을 소개합니다!	최인수, 강영주
13	지방행정 및 자치분권 제도 관련 새로운 통계지표 제안	전대욱, 김 필
14	이제 읍, 면, 동이 중요하다! 가장 효과적인 읍, 면, 동 인력관리 방안은?	최인수, 최지민
15	지방자치 및 지방행정 관련 통계, 연구원의 대응은?	전대욱, 김 필
16	읍면동 행정이슈 및 적정인력관리의 필요성과 관리기법 소개	최인수, 최지민
17	지방자치단체 기관구성 다양화	최인수, 김지수
18	지방의회 의원연구단체의 성공적 운영을 위한 제언	주희진
19	주민자치회 모델 재설계 방안 연구	최인수, 전대욱
20	도전, 한국 국민주도형 작은연구	최인수, 주희진

Ⅳ 부록

2022년도 과제 수행목록

2022년도 과제 수행목록

1. 기본연구과제

분야	No	과제명	연구진
자치분권제도	1	주민자치회 모델 재설계 방안 연구	전대욱, 최인수, 최지민, 유수동
	2	지방의회 주민참여 모델 개발 및 활성화 방안	김지수, 김건위, 고경훈, 주희진
지방행정혁신	3	지방자치단체 플랫폼 정부(platform government)의 효과적인 운영방안 연구	이경은, 박재희, 유란희
	4	지방공무원 역량지표 개발 및 역량 강화 방안 연구 : 과장급 인력을 중심으로	박현욱, 이병기
지방재정경제	5	지방자치와 교육자치 재정사업의 연계·협력 강화방안	김성주, 김진, 황해동
	6	지방교부세를 통한 특별지방자치단체 재정지원에 관한 연구	이서희, 전성만, 김윤승
지역균형발전	7	탄소중립을 향한 지방자치단체 정책추진 강화방안	박진경, 김현호, 이원도
	8	지역통계를 활용한 지역경제 동향분석 - 시공간 큐브 및 동태적 요인 모형을 활용하여 -	여효성, 김도형, 윤소연
	9	포스트 코로나 시대, 지방자치단체의 회복력 강화방안 연구	이제연, 이소영
지방투자 사업관리	10	도서지역 연도·연륙교 건립의 사회경제적인 편익 연구	김지훈, 김상기, 김성규
	11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한 지역별 B/C 기준 차등화 방안 연구	송지영, 이민기

2. 행정안전부 정책연구과제

분야	No	과제명	연구진
자치분권제도	1	시군구 특례제도 지정기준 구체화 연구	유수동, 전대욱
	2	지방자치단체 협력 활성화를 위한 합동평가지표 개발	주희진, 박현욱
	3	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인감 및 서명확인제도 개선 연구	김건위, 고경훈
	4	지자체 현장·수요자 중심의 지방규제 해소 시스템 구축방안 *	황해동, 전대욱, 김필
지방행정혁신	5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주민'의 범위 재정립	김지수, 최지민
	6	특별자치시·도 운영방향 연구	최지민, 박해육 ,김지수
지방재정경제	7	고향사랑기부금법 시행을 위한 상반기 지자체 실행컨설팅 대응에 관한 연구	전성만, 황해동
	8	지역 간 균형발전 지원을 위한 재정체계 개선방안	김성주, 이서희
	9	지방자치-교육자치 연계 강화방안	김진, 김성주
	10	주소정보 고도화를 위한 재정 협력 체계 구축 방안 연구	이서희, 유보람
	11	시·군 조정교부금 개편방안 연구	김윤승, 김성주
지역균형발전	12	지역경제 정책 수립을 위한 도시통계 개선 및 활용방안	여효성, 윤소연, 이원도
	13	접경지역 특화발전방안 연구	이소영, 김민영, 강현정
	14	자전거 관련 산업 실태조사 연구 -제도 및 시책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김현호, 김도형, 김민영

* 비공개 기간 만료 후, 홈페이지 공개 예정

3. 지방자치단체 정책연구과제

No	지역	과제명	연구진
1	서울특별시	서울시 인구영향평가 도입 및 제도화방안	이원도, 여효성
2	부울경 (부산, 울산, 경상남도)	부울경 초광역 협력사업이 부울경에 미치는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전대욱, 박승규,최인수, 최지민, 여효성, 이경은, 추병주
3	대구광역시	대구 인구영향평가제도 도입 방안	이소영, 박진경
4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외국인 근로자 실태조사 및 지원방안	박현욱, 주희진
5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시민참여예산제도 개선 방안	전성만, 김윤승
6	충청권 (대전, 세종, 충북,충남)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및 운영방안 연구 *	박재희, 이재용, 유란희, 유수동, 금창호, 최용환
7	충청권 (대전, 세종, 충북, 충남)	충청권 이전 공공기관 지역인재 취업률 향상방안 연구 *	윤소연, 이원도, 김민영, 이서희, 유란희
8	경기도	평택항만의 효율적 재난대응을 위한 소방력 강화방안	윤소연, 이제연
9	강원도	강원도 폐광지역 지자체 간 협력사무 발굴 및 추진방안	박재희, 이재용
10	전라북도	지역 주력산업 특화 펀드 활성화 방안 연구 *	여효성, 윤소연
11	전라남도	전남·광주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을 위한 연구 *	박해육, 강영주, 탁현우
12	경상북도	데이터 기반 정책평가 체계 연구	이병기, 박현욱
13	제주특별자치도	빅데이터를 활용한 문화예술사업의 경제적 효과 분석	이원도, 김민영

* 비공개 기간 만료 후, 홈페이지 공개 예정

4. 정책이슈리포트

No	지역	과제명	연구진
1	서울특별시	시도연구원 고용현황 및 연구성과 분석 *	이재용, 박재희
2	부산광역시	부산형 공정관광 활성화 방안	이소영, 박진경
3	대구광역시	직업계고 졸업생의 기업정착률 제고방안	고경훈, 김건위
4	인천광역시	'인천형' 주민참여예산제도 정립 방안	김윤승, 전성만
5	광주광역시	- 과제명 비공개 -	전대욱, 김건위
6	대전광역시	효과적인 어린이공원 이용을 위한 권역형 공원화 사업 방안	이제연, 김도형
7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고향사랑 기부금 답례품 선정에 대한 연구	전성만, 신두섭
8	세종특별자치시	세종 반려동물 미래 신성장 산업 육성방안 마련	전대욱, 김해솔
9	경기도	「접경지역·DMZ 특별연합지자체」 구성이 경기도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 방안 *	이재용, 박재희
10	강원도	강원도 주민제안 활성화 연구	전대욱, 최인수
11	충청북도	소방활동의 사회·경제적 효과 분석 연구	윤소연, 여효성
12	충청남도	성과중심의 지역균형발전사업 평가지표 개발 및 분석체계 연구	박진경, 이소영
13	전라북도	전라북도 지방자치(도·시군)-교육자치(교육청) 협력사업진단 및 발전방안	김성주, 김진
14	전라남도	인구감소 지역에 대한 균특회계 지원 확충 방안 *	전성만, 황해동
15	경상북도	신산업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 설립 검토	이병기, 고경훈
16	경상남도	경남혁신도시 거점 신산업 육성 방안 연구 *	김도형, 김현호
17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지역 양돈산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분석	전대욱, 최인수

* 비공개 기간 만료 후, 홈페이지 공개 예정

5. 자체연구과제

분야	No	과제명	연구진	
기획조정	1	지방자치단체 연구데이터 관리체계 개선 방안 연구	이경은	안혜경 ,강희송, 김지수, 이서희
자치분권제도	2	지방행정 및 자치분권 제도 관련 새로운 통계지표체계 제안	김필	전대욱, 이경은, 주희진, 김해솔
지방행정혁신	3	정책사례 DB구축 및 활용방안 연구	김지수	이경은, 강희송
지방재정경제	4	규제특례지역('기회발전특구' ODZ) 지정 및 운영 방안	이서희	김성주, 윤소연, 이원도, 김정숙, 윤성만
지역균형발전	5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 기초연구	김현호	최지민, 전성만

6. 지침연구과제

No	과제명	연구진	
1	지방재정투자사업 사후평가제도 연구 : 문화체육시설을 중심으로	함윤주	김상기, 김도영, 최성원, 주재문
2	지방재정투자사업의 예비비 추정연구	송지영	박소연, 심환희
3	지방재정투자사업 재정영향평가 체계 개선 방안	이삼주	조기현, 서정섭
4	지방자치단체 상생 발전을 위한 컨설팅 보고서 사례 작성	이삼주	정병관, 이선영

7. 수시연구과제

분야	No	과제명	연구진	
지방행정혁신	1	지자체 3급 기구 설치 자율화 방안	강영주	유자영
	2	지자체 부단체장 직급 상향 방안	강영주	최지민
	3	지자체 조직관리 인구 기준 개선방안	강영주	김지수
지방재정경제	4	지자체 현금성 복지 사업 관련 책임성 확보 방안	전성만	김진
	5	고향사랑기부제도 정책분야 매뉴얼 질의응답서(Q&A) 개발	전성만	유보람

8. 지방자치단체 컨설팅

분야	No	과제명	연구진	
1	안동시·정선군	고향사랑기부금제 운영 컨설팅	전성만	유보람
2	정선군·양양군	기회발전특구 컨설팅	이소영	김도형
3	안동시·양양군	인구감소에 따른 지방소멸대응 컨설팅	이서희	김성주
4	안동시	지방투자사업 심사 대응 컨설팅	김상기	함윤주

9. 수탁연구과제

- '인구감소지역 지원방안 연구용역' 외 총 20과제

10. 타당성조사과제

- '서울 송현문화공원 조성사업 타당성 조사' 외 총 49과제